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발표자료집

2019.10.31.~11.1.

롯데리조트 부여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한반도평화포럼 충남연구원 후원 | 외교부

제5회

환황해 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목 차

기조 연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 7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특별 세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 13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묻는다 14
이영훈 SK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동북아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독자적 방식 24
쟝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한반도 평화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NWFZ)로: 놓칠 수 없는 기회 34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센터장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45

환황해 역사문화공동체에서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 46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동아시아사의 서술,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 59
류바오취엔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후쿠오카 대학의 중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과제 69
안도 준코 후쿠오카대학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청장년 창업, 취업) 활성화 89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90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중일 고령층 소비 비교와 전망 106
관리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 부소장

일본의 출산율 감소 대책 115
요코야마 겐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공생1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121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 122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몽골의 모래 먼지 폭풍과 대기 오염 135
다와자르갈 울란바트로시 대기오염 절감 부서 팀장

중국 대기질 향상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계획 157
하야시 가즈미치 기타규슈시 일중대기오염대책 담당

공생2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165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166
김지운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중 해양오염개선 협력 방안 175
한승훈 중국 닝보대학교 석좌교수, 동하이연구소 연구원

동아시아 수역 내 해양 플라스틱 오염 189
이소베 아쓰히코 규슈대학 대기해양환경연구센터 교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 5회 환황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환황해 포럼은 충청남도와 황해권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매우 소중한 실천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황해 포럼을 성대하게 마련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 도민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연 주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 황해권의 미래입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한반도 평화는 참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2017년은 정말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북한은 15차례의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였지만 미국의 대응 역시 크게 우려할 만했습니다.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넘어 예방전쟁, 선제타격, 그리고 코피 전략 등 실제적인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내 비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분노와 화염'이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촉즉발의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은 한반도에 이들 간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제재는 우리를 매우 어렵게 했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매우 위중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반전의 한 해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져온 평화의 지분이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실패로 끝나면서 한반도에는 한 때 난기류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18–20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교착상태는 타개되고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평화의 기운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저 자신도 평양정상회담에 참석했지만 님북 두 정상 간의 관계는 끈끈했고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이 2019년 들어와 다시 불투명 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미 측 주장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점진적 동시 교환 방식을 취하자는 북한 사이의 간극은 컷습니다. 특히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전부 폐기할 터이니 2016년 이후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5개의 제재 결의안 중 민수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북한 측 주장을 미국이 면전에서 거부하면서 북한은 매우 심각한 '하노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하노이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만 강경했던 것이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측과의 공식 접촉을 일체 피하고 우리 측이 유엔을 통해 제안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는 11 차례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특히 10월 2일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응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렵게 마련되었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의도 북한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습니

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상투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안전'과 '발전의 장애물 제거' 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집요한 노력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문 대통령은 평화 유지 (peace-keeping), 평화 만들기 (peace-making), 평화구축 (peace-building),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네 가지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지요.

첫째, 평화유지 (peace-keeping) 입니다. 이는 내전 지역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유엔 평화유지군 (UN Peace-keeping force)을 통해 현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군사 '억지'(deterrence)'와 동맹 강화를 통해 전쟁의 계획된 또는 우발적 발발을 예방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사실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억지와 미사일 방어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억지는 보복 타격의 능력, 의도, 그리고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서 적의 선제적 군사도발을 막는 군사 전략의 하나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전력과 한국의 자주적 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재래식 전력의 억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확장억지와 그에 따른 핵우산 공여를 통한 핵 억지입니다. 억지는 주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군사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미사일 방어 또한 문재인 정부 군사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방어 (active defense 패트리어트 및 사드 시스템, KAMD), 소극적 방어 (passive defense 월별 국가 방어 훈련), 공세적 방어 (offensive defense 킬체인 및 대규모 응징 보복 조치), 그리고 전장 관리 (battle management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정찰, 감시)가 바로 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하게 군사력 증강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중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하겠습니다. 현 정부 임기 중 국방비가 연 50조를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압 (compellence)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강압이란 무력의 과시 또는 그 사용 위협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억지가 방어적 군사대응이라면 강압은 공세적, 적극적 대응입니다. B1B, B-2, B-52 등의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전투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압은 미국의 핵심 전략인 반면, 한국은 여기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평화 만들기(peace-making)'입니다. 이는 평화유지보다 한 단계 위의 개념입니다. 적대 관계 해소,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구축이 평화 만들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적 신뢰구축의 단계를 거쳐 군사적 신뢰구축이 있어야 평화 만들기가 가능해집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군사 훈련의 상호 통보 및 참관, 핫라인(직통 전화) 개설, 정보 · 군사 인력 상호 교류, 통합 위기관리 센터 설치 등으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공세적 무기의 후방 배치 등도 중요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하나이며 새로운 첨단무기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군비통제나 단계적 감축 등이 '평화 만들기'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평화 만들기'가 평화협정 또는 조약 체결을 통해 안정화되면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한 '평화정착 (peace settlement)'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유지와 평화 만들기를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판문점과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평화 만들기'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육해공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체제를 추동해 나가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습니다.
특히 9.19. 평양선언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했고 이를 구체화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평양선언 제1조입니다. 이것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담고 있는 불가침 정신을 되살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및 공동어로, 교류 · 협력 및 접촉 ·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군사공동위 구성 등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6개조 19개항으로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그 구체성이 더해 보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는 그냥 놓아두고 이런 합의를 한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나 서해에서 재래식 군사부문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그에 따른 확전이 핵 대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채택된 군사 분야 이행합의는 그러한 우발적 충돌을 막고 한반도 평화의 절반을 이루는 쾌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평화 구축 (peace building)입니다. 엄밀히 말해 평화공존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넓게 보면 평화 유지와 평화 만들기는 유관국들 간의 갈등 요인을 관리하는 소극적 평화 유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평화 구축입니다. 적대적 쌍방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 통일 되거나 영구적 선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에서 평화 구축 방법과 관련하여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주의 평화론 (capitalist peace) 명제입니다. 무역을 하는 국가 간에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화정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른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명제 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계 평화연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칸트의 설명입니다. 엄격히 말해 '세계평화연방'은 세계정부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정부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형의 항구적 평화구축은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통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반도 평화는 평화구축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보고 그 해법을 평화 경제에 찾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5일 광복절 73주년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문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모색 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한반도 경제 구상이 그 시발점입니다.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이 구체화 될 때 남북한 간의 가시적 평화 구축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27.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괄적 합의를,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하고도 영구적 폐기라는 단계적이고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결렬 이후 비핵화 전

기조 연설

망이 다소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영변 딜 사이에는 간극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빅딜에 대한 포괄적 합의,' '합의된 사항의 점진적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로드맵과 시간표 작성'이라는 절충안을 제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노이 결렬 이후 야기 된 미국과 북한 간 불신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선제적 초기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국제 조사단을 초치하고 평북 철산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모두 이러한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군사적 억지와 동맹강화에 기초한 평화유지를 강조하다 보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평화 만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제' 기치 하에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 전략도 흡수통일 논리 아니냐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에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프로세스의 이러한 과도기적 모순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히 인내심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현재 처한 안과 밖의 도전들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차분히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환황해 구상의 미래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면 환황해권에 평화의 질서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천안함 피폭에 이은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내 황해권을 전쟁의 바다로 바꾸어 놓은 바 있습니다. 서해에서 남북 간 군사대치가 고조되는 가운데 죠지 워싱턴호를 필두로 한 미 항모전투단이 격렬비도까지 북상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해군력을 비상태세 모드로 전환하고 급기야는 황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고요했던 서해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남북한 군사 긴장이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9.19. 평양선언 부속 군사이행 합의서 3조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시범적으로 남북 공동어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남과 북 사이에서 우발적 해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합의가 이행되는 한 서해에서 남북 군사충돌 가능성은 크게 줄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강대국들이 개입할 공간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미래에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충남의 생존과 번영의 공간인 환황해권의 평화를 담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그에 따른 평화경제의 구체화는 충청남도와 황해권의 미래 번영에 주는 함의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평화경제의 이행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목포에서 충남과 수도권, 개성과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 벨트로서 환서해권, 부산에서 동해지역과 원산, 청진, 나진을 통해 러시아로 연결되는 에너지 자원벨트인 환동해권, 그리고 DMZ 지역에서 이를 동서로 연결하는 환경관광 벨트로서 접경지역권, 이렇게 3대 경제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동해안 등 권역별 남북 경제협력 벨트를 마련, 동서를 잇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충남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지경학적 지형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충청남도를 거치는 환서해 경제벨트의 물류망 구축이나 충남,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해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환황해권의 미래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지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물류 및 제조업 협력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시키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충남과 황해권의 평화와 번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듯이 안과 밖의 도전은 거셉니다. 그 도전을 다 같이 극복해야 합니다. 충남 도민 모두가 그 극복의 견인 세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5회 환황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발전연구원과 한반도평화포럼의 헌신적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특별 세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

좌 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발 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쟝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센터장

토 론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류밍 상해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기타하라 마모루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방북단장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묻는다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Key Question과 목차

Key Question	목차
1 갈등 많은 남북경협,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평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Ⅰ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2 남북한의 경제 현실이 경협을 원하는가? • 남북한 경제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Ⅱ 남북한의 경제정책 및 과제
3 향후 새로운 남북경협 방향은? • 새로운 관점으로 본 경협의 가치는?	Ⅲ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
	Ⅳ 맺음말

1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묻는다

2019. 10. 31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0

Ⅰ.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경협의 가치

경협의 가치(목적) 가운데 절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는 평화.
'평화'로 남북경협 논의 출발

남북경협의 가치

- **평화**
- **공동번영**
- **경제공동체 형성**
- **....**

평화: 다수가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가치

- **'주적'과의 공동번영? 경제공동체? .. 반대 많음**
- **But 상대가 주적이라 하더라도 "평화"는 염원**
  - 한국전쟁의 경험(450만 명의 인명피해), 2017년까지도 전쟁 가능성 부상
  - 평화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핵심가치로 정착

평화는 이미 핵심가치로 정착되어 있는데, 왜 평화를 거론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나 그 의미가 막연하고 현실에선 실현이 요원하기 때문 ➔ 왜 그러한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

2

Ⅰ.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평화란?

평화란 …. 이며, 평화가 위협받는 궁극적 원인은 대상과의 차이를 조장/선동하는 '분열적 사고'에서 기인

평화	평화의 위기(폭력 발생) 원인	어떻게 극복
전쟁, 폭력 혹은 분쟁이 없는 상태	• 사회문화적 요인(정체성, 전통, 문화 등)과 정치경제적 요인(빈곤, 불평등, 박탈 등) • 이들 요인들의 결합, 대상과의 차이를 조장하고 선동 ➔ 폭력 • "그런 분열적 사고 경향도 명확한 통찰력과 이해가 갖춰지면 극복될 수 있다" - Amartya Sen	• 분열적 사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 이를 어떻게 극복?

Ⅰ.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평화란?

분열적 사고는 자기 중심성, 동일성에 기인

분열적 사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례로, 2차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의 비극에 대한 성찰에서 답을 찾아보려 함

아도르노
- 나치 전체주의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로 '차이'를 억압하고 '동일성'을 추구했던 인간 이성을 지목 …'개념'
- 동일성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차이나 관계에서 확인되는 성좌(constellation)의 사유를 제안

한나 아렌트
- 나치 전체주의의 기원을 인간의 '무사유'에서 찾았고, '사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라 규정
- 그녀가 강조하는 사유는 '타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결정하는 사유'라는 좀더 특수한 함의를 갖고 있음

레비나스
- 과거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전체성의 형이상학'(융합의 이상을 추구 => 타자를 자신과 동일시)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체주의와 연결된다고 통렬히 비난
- 그는 자기 중심적 철학을 뒤집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전개, 1980년대 이후 데리다 등의 현대 사상에 지대한 영향

분열적 사고는

타자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동일성*에 기인

Ⅰ.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평화의 실현

따라서 평화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타자'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
이는 도덕/윤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시대정신과 인류역사의 흐름과 부합하기에 중요

자기 중심성과 동일성

'타자'와 '차이' 인정

- 시대정신: '타자'와 '차이'는 데리다, 들뢰즈 등 현대철학의 핵심 키워드
- 인류역사의 흐름: Michael Shermer, 『도덕의 궤적』
  - 인류의 역사는 도덕적 진보, 즉 역지사지 원리가 확장되는 과정임을 입증하고 있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종의 더 많은 구성원들을(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다른 종들도) 도덕적 공동체의 합법적인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확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류의 양심은 무럭무럭 성장했고, 이제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족, 내 지역 공동체만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나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까지 배려한다. 우리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강간하고 죽이는 대신 그들과 상품과 생각을, 감정과 유전자를 기꺼이 교환한다."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은 "역지사지의 원리의 확장"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일상의 용어로 표현하면 '역지사지'(인식)와 '포용'(실천)이 확대되어 감을 의미

따라서 이를 평화 구축을 위한 사유 및 합의 등에의 실천에 적용해야

Ⅰ.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시사점

역지사지의 확장으로 보는 평화의 개념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1 관점 전환(타자와 차이를 인정)의 노력 필요
- 자기중심성이 초기화(Default setting) ➔ 남북관계를 선악관계 혹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로 투사하는 경향. 이는 평화의 진전을 어렵게 함

2 인식: 북한의 실체를 인정_북한도 우리와 동일한 유기체로서 변화에 대응하는 존재
- 북한 불변론에서 벗어나 보편적 분석틀 적용할 필요(대북제재의 효과 분석에서 북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제재 강화만을 보거나 북한을 비이성적/비합리적인 존재로 보거나 등등)

3 실천: 일방적 포용이 아니라 상호적 포용을 지향_서로의 결여를 보완/교환하면서 미래 비전을 공유
- 과거 햇볕정책은 일방적/시혜적 포용이었음. 상대를 우리와 동일한 유기체로 인정한다면, 상호적 포용이라야
- 향후 평화를 구축하려면 주변 4강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강국'이 되는 길이 최선(비핵화로 군사강국이 될 수는 없지 않겠나) => 분단극복의 적극적인 길

남은 문제: 경협의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가? 현실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
- 경협을 통해 남북한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만한 여지가 있는가? 경제강국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가?
- 남북한 경제정책의 미래를 동일한 분석 프레임으로 접근(생존과 번영/번식을 위한 변화)

Ⅱ. 남북한의 경제정책 및 과제

북한: 최근의 경제정책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개혁 확대 및 IT기반의 현대화 등의 산업정책 추진
최근 북한은 국가전략 노선을 전환, '세계적 수준의 풍요'를 목표로 경제발전에 집중

국가전략 노선의 전환

-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경제노선"으로 전환(18.4.20 4월 전원회의) ➔ *①북한 역사상 군사가 빠진 경제노선은 처음, ②군수공업의 민간경제 지원*
- 새로운 전략 노선이 그리는 그림은 *"세계적 수준의 풍요"*
  - "쌀밥에 고깃국" ➔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전반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유족한 생활"

경제개혁 확대와 제도화

- 김정일 시대와 달리, 지속적 개혁 추진 및 제도화
  - ①기업소 및 지방의 자율권 강화, ②시장제도 반영, ③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정비
  - D. North, 제도의 기능(불확실성을 줄여 거래비용 감소 ➔ 경제성장 가능성 높임)
- 성과: 실물 및 금융 개혁 확대로 기업소 및 금융기관 기능 점차 회복(생산과 자금순환 등 개선)

산업정책 전환

- ①경공업농업 우선, ②대북제재 대응한 국산화, ③IT기반의 현대화
  - 경공업·농업우선, 국산화 등은 무역통계를 통해 입증
  - IT 기반: ①군사분야 축적 기술의 민간경제 적용 확대, ②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AI 등 기반기술 연구 및 적용 확대
- 성과:
  - 경공업, 농업, 건설 등 주민생활 관련 산업의 생산 증대, 경공업 소비재의 국산화 제고, 일부 공장의 자동화 추진

7

Ⅱ. 남북한의 경제정책 및 과제

북한: 평가

급속한 정보화는 정책전환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한편 경공업 등 일정 부문에서 성과. 그러나 기간산업 정체로 산업·지역간 비대칭 심화

정책 전환의 구조적 배경: 정보화

- 김정일 시대는 시장화가, 김정은 시대에는 정보화가 정책변화의 주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 2008년부터 이동통신 재개, 10년간 급속한 증가 ➔ 인구의 1/5 핸드폰 사용
- 정보화는 세계화를 촉진
  - ICT 기반의 정보화로 실시간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 확산될 수 있음
- '비교'를 통한 인식 ➔ 탈북 혹은 경제성장 욕구로 표출
  - Dan Ariely, 비교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고, 기대를 형성
  - "나도 그들만큼 잘살고 싶다"
- 생존을 위한 변신(시스템의 전환) 불가피
  - 정보화가 세계화를 촉진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통제방식을 고수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가? ...

성과: 주민경제 개선 및 내구성 강화

- 경공업, 농업, 건설 등의 실물 및 금융 부문 개선
  - 식료품, 일용잡화 등은 국산화 성공, 시장점유율 높아짐. 일부 Smart TV, Smart Phone 등도 국산화율 제고 노력
  - 대중무역 큰 폭의 감소(수출 90%, 수입 30% 감소)에도, 물가폭등, 줄서기 및 매점매석 등 나타나지 않음
- 대북제재의 영향 평가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
  - '외부 시선'의 오류: 북한의 대응/준비를 간과하고 외부의 충격을 중심으로 평가

한계: 기간사업 정체 및 비대칭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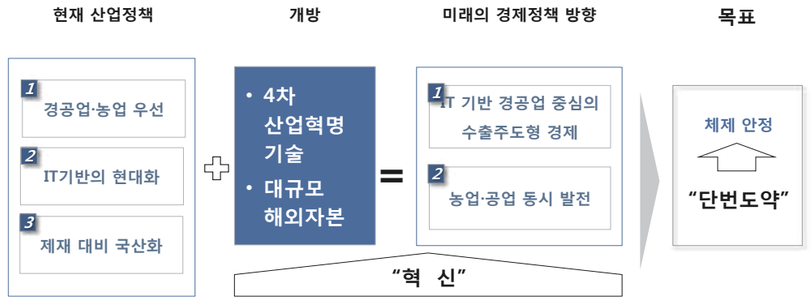
- 전력,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철강, 화학 등 기간산업 정체 지속 ➔ 산업/지역 간 비대칭성 심화
  -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개선 가능
- 정보화에 따른 세계화로 주민 요구 증대, 그러나 대북제재에 따른 자본 및 기술 제약이 성장 억제
- 대북제재 해소의 Needs 점차 증대

8

Ⅱ. 남북한의 경제정책 및 과제

북한: 향후 과제

체제 유지와 성장을 위해 개방이 절실
개방 후 혁신을 토대로 IT 기반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 등을 통해 단번도약을 추구할 것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대규모 외자 도입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
- 이미, 개혁개방 외에 교육혁명, 과학자 우대 등 혁신 노력, 최근에는 "계속 혁신", "혁신창조" 등 혁신이 일상의 슬로건이 되고 있는 상황, 개방 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9

Ⅱ. 남북한의 경제정책 및 과제

남한: 최근의 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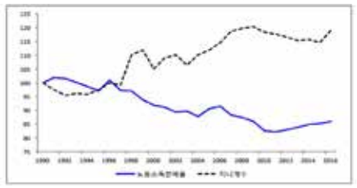
낙수효과 약화 및 소득불평등에 대응하여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

소득주도성장정책

- 낙수효과 약화 및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현 정부가 케인즈적 사고에 입각하여 제시한 정책
  - 근로자의 임금소득 증대 ➔ 소비 증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논리
- 분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대규모 토목공사,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의 유효수요 창출 정책과는 크게 차이

사회갈등을 유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국의 사회갈등지수 참조)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1990년 기준)



• 모든 수치는 199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의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2012년)



10

Ⅱ. 남북한의 경제정책 및 과제

남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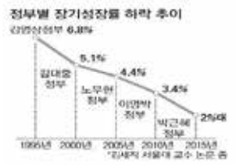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불평등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성장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대: 소득불평등 완화 등에 기여

- **이는 소득불평등 완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0년대 '수저계급론' 등장 ➔ 계층 상승의 사다리 사라져 ➔ 젊은이들의 꿈도 사라져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수출주도 성장도 어려움
  -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소비 위축 가능성
  - 승자독식의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 완화('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논의)

우려: 성장위기를 해소하는 데 한계

성장위기
- 지난 20년간 "5년마다 1%p씩 하락"
- 이 추세대로라면 현 정부 말기에는 0%대로 추락할 수도



-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거시경제 환경: 잠재성장률 연 1%p 상승하려면, 이를 위해 임금소득이 연 9.3% 상승해야
  - 그러나 임금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이나, 기업의 비용으로서 임금상승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구조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단기 경기부양정책의 한계**
  - 투자효율성* 1995년 0.25에서 2015년 0.09로 급격히 하락 ➔ 단기 부양책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없음

* 투자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성장률 증가

Ⅱ. 남북한의 경제정책 및 과제

남한: 향후 과제

향후 성장은 여전히 중요, 이를 위해 혁신을 강조하는 슘페터적 성장정책 도입이 필요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 제로성장 사회

불평등 심화 ➔ 제로섬전쟁(사회갈등심화)

과거에 비해 분배 강조

그럼에도

성장은 여전히 중요

Why?

성장은 평화구축의 '필요조건'이기 때문
- **사회 평화(삶의 질 향상, 분배문제 해결 등)와**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새우' 신세 탈피)**

슘페터적 성장정책

- **성장위기 심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으로 현신의 요구 증대**
  - 투자효율성과 노동생산성 하락 ➔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안정적인 미국과 다름)
  - 수요확대보다 공급혁신에 중점을 두어야(사례: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현 정치구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급혁신에 중점을 두는 정책 추진 가능성 증대**
- **슘페터적 성장정책*: 기업가가 부단히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혁신, 즉 '새로운 생산요소의 결합'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Ⅲ.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

평화 구축의 계기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성장은 평화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음

남북경협 가능의 조건

- **남북한 경제의 Needs 비슷**
  - **경제성장**
  - **이를 위한 혁신**
  - **향후 경제강국 비전 공유**
    - **남한: 신남방/신북방**
    - **북한: 세계수준의 풍요**
- **상호 pain point 보완/교환 가능**
  - **남한의 자본과 기술**
  - **북한의 노동력**

남북경협은 평화구축의 계기

- **경협을 통한 경제성장은 남북한의 평화 구축에 기여**
- **남북경협을 통한 성장은 사회갈등을 완화**
  - **한국의 사회갈등은 심각한 수준**
  - **성장의 정체는 사회갈등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큼 (아마티아르 센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회갈등 심화는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
- **남북경협을 통한 주변 4강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강국'(경제공동체) 건설의 비전 공유**

남북경협은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서 '혁신'에 어떤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가?

남북경협은 경제강국 형성 혹은 경제영역 확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Ⅲ.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

혁신의 계기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계기

혁신의 유형

-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혁신이라면,**
  - **경협이 혁신 요소를 갖고 있는지**
  - **공급혁신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검토**
- **슘페터의 "혁신"**
  - ① 새로운 재화
  - ②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 ③ 새로운 시장의 개척
  - ④ 원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 ⑤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독점의 파괴

※ 이는 혁신을 통해서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가 혁신적 투자와 연결되어 경제발전의 근본적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

남북경협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

- **남북경협은 수요제약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장**
  - 개방 후 투자와 수출(특구 생산품)의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 그에 따라 투자와 생산이 확대될 여지가 큼
- **남북한이 연결되면,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Platform 국가로서 5억 이상 인구의 시장 확보 기대**

남북경협은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계기

- **북한의 특구는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할 것임. 그에 따른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의 요소들에 대한 검토**
- **북한의 노동력 평가**
  - 남한의 자본장비와 기술이 북한 노동력과 결합하게 되면, 임금 대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높아질 것임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 북한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Testbed로 활용하면 남북 모두 Win-Win 가능(사례: '분산형 발전')

나머지 혁신의 유형들도 이들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Ⅲ.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

플랫폼 구축의 계기

남북경협은 플랫폼국가(교량국가) 형성의 핵심 계기가 될 수 있음

플랫폼 국가 형성의 필요성

- **성장과 평화 구축을 위해 경제영토 확장 필요**
  - 기업의 혁신, 저비용사회로의 구조개혁, 사회적 합의 등의 노력만으로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소국인 우리가 주변 4강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강국으로 가려면**
- **이를 위해 대외개방 대폭 확대하여 세계수준의 인재, 자본 및 기술을 유치**
- **이를 위해 플랫폼 국가 형성 필요**

플랫폼 구축은 구심력 확보와 생태계 조성이 관건

- **그래야 참여자들이 확대되면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가 증대되는 네트워 효과(Network Effect)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를 잘 보여주는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 사례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그렇다면 구심력 확보는 어디서? 남북경협에서. 그리고 Social Capital 확충에서

- **북한을 파트너로 하는 남북경협**
  - 우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 가능
  - 둘째, 남북경협과 혁신을 통해서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가 세계 수준의 인재, 자본 및 기술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음
  - 셋째, 남북경협을 통한 정치·군사 등으로의 평화 확산은 주변국들의 참여를 촉진
- **신뢰와 배려의 사회자본 확충(17세기 네덜란드, 20세기 싱가폴 참조 필요)**

어떻게 생태계조성을 조성? Biz Model의 전환, 즉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포용적 접근 필요

- **기존의 포터식의 Biz 모델에서 탈피, 상대를 partner로 인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

15

Ⅳ. 맺음말

남북경협 관련 새로운 접근 및 생산적 토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

1 이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남북경협 가치 중 평화를 도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역지사지 원리의 확장이 필요

- 철학을 빌어 이를 정리한 이유는, 관련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깊은 성찰과 함께 Social Capital 확충(이를 토대로 혁신과 Platform국가로의 전환이 가능)이 필요하기 때문
  -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Bottom up방식으로 푸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남북한 모두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남북경협은 혁신의 계기를 제공해주며, 따라서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신정장동력이 됨

3 이런 관점에서 남북경협은 사회갈등 해소의 실질적 수단이자 플랫폼국가 형성을 통한 경제강국/평화구축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면, 혁신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지사지하고 상대를 포용할 수 있어야(그래야만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사회자본 확충이 가능하며, 세계 수준의 우수한 인재,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국가로의 전환이 가능). 이처럼 남북경협은 평화와 혁신의 관점/의지를 토대로, 플랫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16

End of Document

17

동북아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독자적 방식

장 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동북아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독자적 방식

장 샤오밍 (ZHANG Xiaoming),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한국의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 부여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필자는 4년 전인 2015년에 제1회 환황해 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의 주제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지역적 협력, 특히 동북아 혹은 환황해 지역의 3 대 핵심 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 3국의 협력이다. 지난 20년 동안 필자는 중국과 그 주변국과의 관계, 특히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도 남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주목해 왔다. 동북아 지역 협력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필자가 수년간 천착해 온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동북아 국가들이 지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독자적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다루고자 한다.

EU 와 ASEAN 의 방식

동북아는 여러 측면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적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 세계의 지역 또는 하위 지역 중 하나이다. 지리적으로 동북아 국가는 모두 가까운 이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국, 북한, 일본, 몽골은 물론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모든 국가와 육지 또는 해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사람, 상품 및 투자의 국경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편리하다. 경제적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과 상호보완성은 동북아 지역의 뚜렷한 특징이며, 특히 이러한 성질은 중국, 한국, 일본의 경제 교류에서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동북아 국가들은 서로에게 주요 무역 대상국이자 투자 목적지로서 의미를

갖는다 (북한 제외). 문화적으로 이 지역의 여러 국가는 국민간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지역 협력의 현황은 그렇게 고무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세계에서 지역주의의 황무지와 같았으며,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냉전 시대의 시작 이래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동북아 지역 공동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에는 지역 공동체의 산 모델이 기본적으로 두 개 존재한다. 즉, 유럽의 EU 와 아시아의 ASEAN 이다.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법도 크게 EU 방식과 ASEAN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EU 방식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특징지어져 왔으며, ASEAN 방식은 의사 결정에 대한 비공식적이고 합의적인 접근법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EU 방식과 ASEAN 방식은 둘 다 소위 지역 다자주의 (regional multilateralism) 방식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주의 발달 단계 혹은 수준에 있는 지역 공동체 구축 방식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EU 방식 또는 ASEAN 방식이 동북아에도 적용 가능할까? 다시 말해, 동북아 국가들이 지역 공동체 구축 노력 과정에서 EU 방식이나 ASEAN 방식 또는 두 방식 모두를 참고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동북아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유럽과 동남아와는 상당히 다르다. 유럽은 주권과 영토권의 원칙이 어느 정도 약화되거나 침식된 포스트모던 지역이다. 동남아는 여전히 현대화의 단계에 있지만, 특히 동북아와 비교할 때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지역 경쟁의 치열함이 덜한 편이다. 동북아는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국가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의 단계에 있는, 앞선 두

지역과는 사뭇 다른 지역이며, 관련 국가들 (중국, 일본, 한국 등) 간의 영토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역사적 기억의 문제도 이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간의 양자 관계에 중대하고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간 경쟁과 대결,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또한 지역 협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EU 방식과 ASEAN 방식과 같은 지역 다자주의 방식은 동북아 지역 공동체 구축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거나 적어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동북아에서는 양자주의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지역 협력에 있어서 더 중요한 방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양자 협력 (경제적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제외하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동맹 체제, 즉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1950 년대 이래로 이 지역 양자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동북아 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동맹 체제가 동북아 안정성과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북아 지역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방안

일반적으로 동북아 지역 공동체의 부재는 지역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지역 협력과 공동체 건설의 주요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과 포스트 냉전 시대의 북한 핵 문제, 중일 및 한일간 영토 분쟁, 중일 관계 및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기억의 문제,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군사 동맹 체제, 그리고 변화하는 강대국간 관계 (특히 미중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쟁 등 양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다.

지역 협력, 궁극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은 지역 협력에 대한 주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독자적 방식을 찾아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적어도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다자주의와 양자주의가 지역 협력에 필요하다.

첫째, 다자 협력은 지역 협력과 지역 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방법이며 경제, 안보, 환경 분야에서의 다자 협력은 특히 매우 중요하다. 지역 다자간 경제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지역 경제 공동체의 건설은 비교적 실현하기 쉬운 목표이다.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한중일 연례 정상회담 등 기존 다자간 협력 체제와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 한중일 FTA 협상, 그리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reat Tumen Initiative, GTI) 등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동북아의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지역 경제 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협력에서 다자주의가 가지는 중요성은 명백하다.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모든 국가는 포스트 헤게모니적 환경에 대한 기대의 안정화에 관심이 있으며, 포괄적 다자간 체제는 그러한 기대를 조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체제는 관세 인하 등의 방법으로 연결을 촉진하도록 고안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게임의 규칙을 세우고 모든 플레이어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 조직과 관련된 ASEAN의 수많은 노력은 그 내용과 관계 없이 제도화의 유용성에 대한 좋은 예이다.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고 회원 수가 늘어나면 내용은 개선될 수 있다." [1] 오늘날 경제 보호주의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1] Brantley Womack, "국제 위기와 중국의 부상: 2008 세계 금융 위기와 2017 세계 정치 위기의 비교 분석," *중국국제정치학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0, No. 4, 2017, p. 400.

있고 세계화에 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간 FTA를 구축하는 것이 특히 시급하게 요청된다. 한 예로,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무역 체계를 신장시키고 보존해야 하는 공공재로 간주하지 않는다.[2]

둘째, 동북아 국가들은 영토 분쟁, 역사 문제, 한반도 통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화해, 대화 및 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와 마주하고 있다 (필자는 남북한 대화와 화해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동북아에서 양자주의 역시 매우 중요하며, 이 지역의 협력에서 그것은 최소한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양자주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양자 동맹 체계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의 미국 주도 동맹 체계는 이 지역이 처한 현실이며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 체계가 지역 통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일본과 한국은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동북아 지역 협력을 가로막기보다는 이 지역 협력에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성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참가국이지만 ASEAN+3 (ASEAN plus three, APT)에는 빠져 있고 동아시아 그룹을 지지하기보다는 의구심을 품어 왔다.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아시아 태평양 협력의 의미와 효과를 희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동아시아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었다. 미국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미국 없이도 이 지역의 통합이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

[2] Barry Eichengreen, "자유주의 무역 질서의 종말인가 후퇴인가?" *글로벌아시아 (Global Asia)*, Vol. 13, No. 2, 2018 년 6 월, pp. 8-13.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분명한 정책이 부족하다." [3]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에 직면했으며, 일본의 경우 최근 아베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에 대한 태도를 다소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AIIB 가입을 거부했다.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ADB)의 설립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4] 실제로 미일 동맹과 지역 내 미국의 지도력의 유지는 냉전이 시작된 이래 일본 외교 정책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양자주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일련의 다자간 접근을 장려하려는 시도들은 사실상 이 동맹과 미국의 지역 안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80 년대 후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미국 주도 경제 및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APEC 은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용한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의 설립을 주도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입지를 확보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역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데 대해 타 아시아 국가들의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다자주의 틀 (예: ARF)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충분한 옵션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다자간 틀이 '미일 안보 협정의 우위에 대해 이차적, 보완적 또는 종속적'이라고 간주했다. [5] 일본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일본의 정책 엘리트들은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고정적 관념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6]

[3] 한성주 (Han Sung-joo), *온 더 브링크: 한국 외교관의 평화를 향한 여정 (On the Brink: A Korean Diplomat's Journey for Peace)* (서울: 올림, 2018), p. 165.
[4] 김애경 (Aekyung Kim) & 김지영 (Jiyoung Kim), "중국의 공격적인 주변 외교와 한국적 관점," *퍼시픽리뷰 (The Pacific Review),* 2017, DOI: 10.1080/09512748.2017.1397732,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모두 필요하다. 핵 문제의 관리 및 최종 해결은 동북아 지역 협력 및 지역 공동체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중국의 역할

말할 필요도 없이, 강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이 동북아 지역 협력과 지역 공동체 건설에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1 세기 중국의 부상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발전 중 하나이다. 그것이 세계와 특히 동북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편, 중국은 주변국의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로 동북아 지역에서 지배적이었던 미국의 균형 조정 (아마도 견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중심 조공 체제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이웃 국가들의 두려움과 불안의 원천 중 하나일 수 있다. 한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아시아 중심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재부상은 근대 이전 중국의 외교 패턴과 그것이 오늘날 중국의 상황에 관련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7] 또 다른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 역시 그들과

[5] Natsuyo Ishibashi, "2000 년 이래 일본의 대인도 정책: 동아시아 내 미국 지도력의 유지를 위하여," *퍼시픽리뷰 (The Pacific Review),* 2017, DOI: 10.1080/09512748.2017.1396355
[6] Ibid.
[7] Brantly Womack, "비대칭과 중국의 조공 체계," *중국국제정치학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No.1 (2012 년 봄), p.51.

인접하며), 중국과의 조공 관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여전히 모든 당사국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8] 한 미국 내 중국 전문가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중국은 1972 년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큰 현실적 야망을 품고 동북아를 새로운 운명 공동체, 즉 중국의 지도력 아래에 놓인 공동의 안보 공동체로 이끌고자 하고 있다."[9]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고자 노력해 왔다.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없거나 미국과의 새로운 냉전에 연루된다면 동북아 지역 협력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중국은 동북아 지역 협력을 활성화하고, 특히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 를 포함한 지역 다자간 경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 파트너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은 지역 내 가장 큰 경제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한중일 FTA 의 체결은 동북아 내 다자간 지역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것이다. 에너지, 운송, 환경과 관련한 지역 협력 또한 장려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역사 및 영토 분쟁도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결론

동북아는 지역 협력의 측면에 있어 저개발되어 있으며, 지역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북아 지역 공동체를 위한 독자적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8] David Shambaugh, *중국의 세계화: 불완전한 강대국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옥스포드: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13), p. 105.
[9] Lowell Dittmer, "트럼프의 중국 정책 (Trump on China)," *아시안퍼스펙티브 (Asian Perspective)*, Vol. 41, Issue 4, (2017 년 10 월-12 월), p. 696.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은 현재 이 지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며 한 배를 타고 있다. 우리는 EU 와 ASEAN 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로부터 배워야 하고, 특히 로폴리틱스 (low politics) 분야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환경 보호, 자연재해 경감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NWFZ)로: 놓칠 수 없는 기회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센터장

한반도 평화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NWFZ)로:
놓칠 수 없는 기회

다쓰지로 스즈키(Tatsujiro Suzuki)[1]

제 5 회 환황해포럼, 부여, 대한민국
2019 년 10 월 31-11 월 1 일
(초안)

주제어: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비핵무기지대*

1. 서론

2018 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역사적인 전환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새로운 국제적 틀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NEA-NWFZ) 확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18 년 4 월 판문점 선언이란 결과를 낳은 제 1 차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진 제 2 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합의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2019 년 2 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2 차 북미정상회담은 어떤 합의도 없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2019 년 6 월 30 일 판문점에서 열린 뜻밖의 제 3 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또 다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높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 정상회담들이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 동북아 내 평화와 안보 실현에 있어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현안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중요하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동북아 국가들의 역할, 특히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위의 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

2. 남북정상회담의 시사점과 현안

2017 년에 이르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핵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처럼 확장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은 미 정부의 강화된 대북 압박으로 이어졌고,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2018 년 말에는 언제든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장 상태는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대담한 움직임에 의해 전환점을 맞이한다. 문 대통령은 2018 년 2 월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1]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부센터장 및 교수. 이메일: suzukitatsu@nagasaki-u.ac.jp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2018 년 2 월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올림픽팀을 초청했다. 남북 관계는 올림픽 단일 팀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개선되는 듯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판문점에서의 최초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김 국무위원장과 2018 년 4 월 27 일 판문점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건이었다.

위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13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2] 1)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2) 휴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한 완전한 종전, 또한 3 자(미국, 북한, 한국)또는 4 자(3 국+중국) 회담을 통한 항구적이고 굳건한 평화 체제 구축, 3) 현재까지 남북 간 체결된 모든 합의와 선언의 완전한 이행, 4) 회담에서 체결된 합의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회담 및 협상 추진, 5) 개성 지역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6) 각계각층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교류, 왕래 및 접촉 활성화, 7)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주의적 현안들의 해결, 8) 10.4 선언 합의 사업의 추진, 9)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의 전면적 중단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10) 서해북방한계선 지역을 평화 수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계획의 도출, 11) 상호 협력, 교류, 왕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군사적 조치의 실시, 12)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형태의 무력 사용도 금하는 '불가침 합의'의 재확인, 13)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이 실질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단계적인 군축 실현.

이들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1)과 2)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은 남북이 도달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합의다. 남북이 합의한 1991 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르면 단순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핵 없는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전쟁의 종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상호 목표 성취에 필수적이며, 둘 중 하나라도 부재할 경우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북한과 미국이 우선 합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다음으로 3)에서 8)까지의 항목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9)에서 13)까지의 항목이다. 이러한 조치는 군사 긴장을 줄이고 이 지역의 군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비적대적 활동과 점진적인 군축에 대한 합의는 이 지역의 군사 긴장을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 년 4 월 27 일,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eng/brd/m_5476/view.do?seq=3196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

실제로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이들 조치는 2018 년 9 월의 평양 공동선언[3]으로 이어졌다. 이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군사적 적대행위의 중단을 확대하고 한반도 전체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데 대한 합의이다. 남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끝'을 의미하며, 이 지역 내 군사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남북한은 공동 군사위원회를 신속히 활성화하여 합의의 이행을 검토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데 동의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이다. 1) 북한은 관련국 전문가들의 관찰 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히 해체할 예정이다. 2) 또한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시에 계속해서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해체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달성에 대한 상호 신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미국이 이러한 대담한 선언에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었다.

3. 북미정상회담의 시사점과 현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공동성명[4]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다음의 네 가지 중요한 항목을 포함한다. 1)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 년 4 월 27 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이 성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1)과 2)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뜻한다. 이는 실제로 한국전쟁의 종식의 선언을 의미할 수 있지만, 성명서의 합의를 이행하기

[3] 평양 공동선언문, 2018 년 9 월 19 일,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eng/brd/m_5476/view.do?seq=3196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공동선언문, 2018 년 6 월 12 일, 미국 백악관.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president-donald-j-trump-united-states-america-chairman-kim-jong-un-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singapore-summit/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로 된다. 3)에서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료하고 한국전쟁을 종식하기로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 역시 중요하다. 불과 몇 달 전, 미국과 북한은 매우 적대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했다. 단 몇 개월 만에 양국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했고, 그들이 원칙적으로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핵무기 없이 지역 내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공동성명의 발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노이에서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의 포기에 대한 의지 표명에 대응하여, 미국은 소위 '빅 딜(big deal),' 즉, 영변 인근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전방의 모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미국은 동시에 생물 및 화학 무기의 해체 역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기본적 관계는 여전히 서로 적대적이지 않으며, 양국 간 대화가 지속될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하노이 정상회담은 "획기적 성공도 실패도 아니었다."[6]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는 진전이 거의 없었지만,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상에서의 초대에 대한 김 국무위원장의 응답으로 예고에 없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회담은 약 50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들은 실무급 외교관을 통해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화는 변화하는 한반도 역사의 한 장으로서 역사적 회담으로 기억될 것이다.

4. RECNA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한 제안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는 2012년 4월 설립된 이래,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및 동북아 비핵무기지대(NEA-NWFZ) 실현을 위해 채택 가능한 접근법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5년 3월, RECNA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to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7]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5] 데이빗 세인저(David Sanger) & 에드워드 웡(Edward Wong), '트럼프-김정은의 실패한 회담: 크나큰 위협, 거대한 자아, 고약한 내기(How the Trump-Kim Summit Failed: Big Threats, Big Egos, Bad Bets)', 뉴욕타임스, 2019년 3월 2일. 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trump-kim-jong-un-summit.html

[6] 라메쉬 타쿠르(Ramesh Thakur), '김정은-트럼프의 회담: 획기적인 성공도 실패도 아닌 만남(Kim-Trump Summitry: Neither breakthrough nor breakdown)', PSNA 조사 보고서(PSNA-WP-3), 2019년 3월 8일. http://www.recna.nagasaki-u.ac.jp/recna/psnaactivities/21394

[7] RECNA, '제안: 동북아 비핵무기지대(NEA-NWFZ)에 대한 포괄적 접근(Proposal: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March 2015, http://www.recna.nagasaki-u.ac.jp/recna/bd/files/Proposal_E.pdf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RECNA는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기본 협정(Comprehensive Framework Agreemen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east Asia; CFA)을 제안하였다. 이 협정은 이 지역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체계를 확립하고 NEA-NWFZ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FA의 4개 조항은 '선언적 조항' 및 '실천적 조항'으로 나뉘어진다.

(1)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CFA 당사국 간 상호 불가침, 우호적 관계 및 동등한 주권을 보장한다. 외교 관계가 부족한 국가들은 외교 관계 정상화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전쟁 종전 및 평화 협약에 관련된 국가 간 협상을 촉진시킨다(선언적).

(2)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에 기여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 구성은 6개국 이상으로 하며 그 취지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 또는 국가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몽골과 캐나다의 참여는 환영받을 것이다(선언적, 실천 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3)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지정을 위한 협약에 동의한다. 여기에는 NPT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NEA-NWFZ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아래 예를 포함한 기타 세부 사항(예: 아래에 설명된 내용)이 포함된다. 서명국은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에 가입해야 한다. 이 협약은 1967년 우주 조약에 따라 평화로운 우주 탐사를 위한 서명국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협약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집단적 제재를 규정하고, 협약 문제와 관련된 개별 서명국의 일방적 제재를 제한하는 조항이 마련될 것이다(실천적).

(4) 동북아시아 내 상설 안보협의회를 설립한다. 이 협의회의 주요 목표는 CFA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차적 목표는 적절한 경우 다양한 동북아 안보 현안과 관련된 토론의 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협의회는 더욱 포괄적인 안보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NEA-NWFZ의 검증 메커니즘을 이끌어갈 수 있다. 6개 당사국은 협의회의 최초 회원국이 되며, 에너지 협력위원회 회원국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 협력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는 일반 회원이 될 수 있다 (실천적).

NEA-NWFZ는 동북아의 고유한 지역적 조건을 반영한 특징을 지녀야 한다. RECNA의 보고서는 이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당사국: '3+3 구성(한국, 북한, 일본은 지역 내 당사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인근 핵무기국)'의 6자 협약이 현재로서는 가장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 비핵무기 국가 지위를 인정받은 몽골이 2012년의 비핵무기 국가 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 NEA-NWFZ 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 협약 발효의 유연성: NEA-NWFZ 실현에 대한 의문은 해당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 부족을 암시한다. 그러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발효한 중남미비핵지대조약(Treaty of Tlatelolco)은 NEA-NWFZ 실현을 위해 협약의 조항이 발효되는 시스템이 유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NEA-NWFZ 협약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3 개의 핵무기국(미국, 러시아, 중국)과 2 개의 비핵무기국(일본 및 한국)의 비준을 통해 충족될 수도 있다. 북한이 계속 가입하지 않을 경우 3 년에서 5 년 후에 일본과 한국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은 미국 이외의 핵무기 국가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안전을 조속히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 하에서 북한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미국이 협약의 비준에 따라 즉각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동안 북한에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해체할 일정한 기간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협상 전 필요조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NEA-NWFZ 협약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이 일단 시작되면 그것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핵 실험과 다른 핵무기 관련 활동의 일시 중지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반면, 미국, 한국,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공동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 합의된 선행적 모라토리엄이 협상 전에 채택되어야 한다. 이 선행적 모라토리엄에는 또한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의 완화도 고려될 수 있다.

(4) 핵 억지력 연장에 대한 의존 중단: NWFZ 협약이 완전히 이행되면 국제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이 금지된다. 이것은 NWFZ 내의 비핵무기 국가들이 핵 억지력 연장이나 핵우산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NWFZ 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협력적 안보를 위해 권장되는 메커니즘인 이유이다. 제안된 CFA 에는 불가침 합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EA-NWFZ 의 비핵무기 국가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기존 무기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과거 협상을 고려할 때 NEA-NWFZ 협약에서도 안보 보장 대상에 기존 무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우산을 잃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와 두려움이 존재한다. 두려움은 만약 한 국가가 협약을 위반하고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위협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협약은 무효가 되고, 해당 지역은 협약 체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타 국가들이 무방비 상태가 될 일은 없다. 협약 위반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제법과 개별 국가의 헌법에 따라 당사국들이 위반 국가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에 기반해 RECNA 는 독자적 동북아평화와안보패널(Panel on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PSNA)을 2016 년 6 월에 발족시켰다. 이들은 NEA-NWFZ[8]의 달성을 통해 동북아에 평화와 안보를 실현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나가사키 프로세스')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SNA 는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나가사키, 울란바토르, 모스크바에서 총 3 회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PSNA 는 또한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8 편의 조사보고서를 의뢰하여 관련 결과물을 웹사이트[9]에 게시했다.

5. 향후 협상을 위한 제안: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NWFZ 를 향해

동북아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한국, 미국 간의 향후 협상이 추진되기는 어렵다. PSNA 의 조사 보고서와 한국의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최근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분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향후 협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0]

1) 최종 목표의 명확화: 동북아 새로운 안보의 틀 및 NEA-NWFZ 의 실현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서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한국, 미국은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보다 포괄적이어야 하며, 이 3 개국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관련 국가들이 이 목표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합의 대신, 새로운 국제 안보의 틀과 비핵화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협약, 즉, NWFZ 협약에 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2) NEA-NWFZ 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틀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11]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모든

[8] PSNA 의 사명 선언문과 구성원은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다. http://www.recna.nagasaki-u.ac.jp/recna/psna

[9] PSNA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recna.nagasaki-u.ac.jp/recna/psna/psnaactivities

[10] 세종연구소와 RECNA, '정책적 제안: 한반도 평화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로(Policy Proposal: From Peace on Korean Peninsula to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2019 년 9 월 18 일. www.recna.nagasaki-u.ac.jp/recna/en-topics/23117

[11]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1976)을 통해 당사국들은 비적대적 의도, 외교적 수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약속하였다. https://asean.org/treaty-amity-cooperation-southeast-asia-indonesia-24-february-1976/

당사국이 TAC와 같은 협약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약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 간, 그리고 한일 간 양자 관계의 정상화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안보 틀에서는 당사국들의 합의 준수를 감독하고 국가들 간 분쟁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설 안보 협의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군축 협상 역시 이 안보 협의회에서 진행될 수 있다.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같은 상설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TAC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및 기술 협력 체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원자력을 포함한 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 체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핵 연료 보증 또는 사용 후 핵 연료 관리를 위한 다자간 체제 구축도 한 방법일 수 있다.

3) NEA-NWFZ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

한반도 비핵화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소위 '빅 딜(big deal)'식의 접근 방식은 실용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제 한반도가 NWFZ 실현을 위한 합의에 먼저 도달할 수 있고, 이후에 일본이나 몽골 등의 인접 국가들이 동참하여 NEA-NWFZ를 구성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의 검증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국제 검증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민간의 핵 시설 및 재료만 검증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검증 체계 또는 지역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 참고가 가능한 하나의 모델은 UNMOVIC(유엔 감시 · 검증 · 사찰위원회) 또는 ABACC(브라질-아르헨티나 지역안전조치기구)와 같은 지역 검증 체계이다.

한편, 핵무기국이 비핵무기국에 부여한 소극적 안전 보장(NSA) 역시 NWFZ 협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4) 한국과 일본의 역할 강조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할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나고자 한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북한의 대화를 지지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NWFZ 협약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 NWFZ 가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일본이 보유한 대형 플루토늄 비축량으로 인해 일본이 핵 옵션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지역적 우려를 제기하거나 미국이 일본의 미국

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역 내 NWFZ 실현 노력에 동참하여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

6. 결론

지금이 동북아의 냉전적 정치 구조를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와 안보를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절호의 기회라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지역 내 타 국가들은 한국전쟁 종식을 실현하고, 새로운 안보 틀을 확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고, 결과적으로 NWFZ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 NWFZ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이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의 핵 억지력 연장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평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좌　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발　표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류바오취엔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안도 준코 후쿠오카대학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토　론　**김정섭** 공주시장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서정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환황해 역사문화공동체에서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환황해 역사문화공동체에서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1)]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 서론

환황해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문화공동체 중에 하나이며, 그 자연발생성에 기초해 가장 현실적인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다. 황해를 둘러싼 지역은 자연지리적으로 대륙, 반도, 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도가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서 교량 또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가 인문지리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예컨대 '한자 문화권'이라는 말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화공동체로서 동북아시아를 잘 드러내어 주는 용어이다. 예컨대 한일간에도 감정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한자와 중국의 고전이 이용되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일본이 전후 50년에 즈음해서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반성한 뒤, 담화를 마무리하면서 인용한 것이 "杖は信に如くは莫し"(杖莫如信, 기댈 것은 믿음만한 것이 없다)"라는 춘추좌씨전의 한 구절이었다. 조선의 지사 안중근이 중국 땅 뤼순감옥의 일본인 간수에게 전하여 그를 감동시켰던 글도 "為国献身軍人本分"이라는 '서(書)'였다. 이는 공통의 이해가 가능한 문자의 공유에 더해 문자가 기지는 정신적 가치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축적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이는 상호 신뢰와 존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대사 이전, 이 지역은 신라-당 연합과 백제-왜 연합의 백촌강 전투, 왜구와 원구의 침탈, 임진왜란 등의 전란이 있기도 했지만, 이들 시기는 2000 여년의 역사 속에 비하면 문자 그대로 '예외적인' 시간들로서, 대륙-반도-열도의 상호 교류는 '동북아시아 장기 평화'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에 더해서, 위의 전란들조차도, 문명 또는 문화의 강제 전파라는 현상을 낳아, 오히려 지역의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이 지역은 특히 황해를 둘러싼 지역은 침략, 식민, 전쟁의 무대가 되고 말았다. 황해의 근대를 알리는 사건은 강화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운요호 사건이었다. 이어서 황해는 청일전쟁에서 해전의 무대가 되었고, 러일전쟁에서의 다시 해전의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1950년의 인천상륙작전에서 다시 해전의 무대가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선도 역할에 다수의 구 일본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긴장과 대립은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평창의 겨울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는 3.1운동 100년의 맞이한 2019년, 신한반도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식민과 전쟁의 근대를 끝내고 교류협력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다. 『총, 균, 쇠』에서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에 한일 양국의 역사적 경험이 지니는 함의에 주목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 형제"와도 같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양국이 고대에 쌓았던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동북아시아공동체의 원기(原基, promordium)로서,

1) 미완성 원고입니다.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원 동북아시아 역사문화공동체'로서 환황해 교류협력 네트워크와 그 속에서 가교와 교량으로서 네트워크 형성자 역할을 수행했던 백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여는 환황해 네트워크의 시원(始源)이었다.

2. '원 동북아시아공동체'로서 환황해 교류협력 네트워크

환황해를 매개로 한 '한일 교류사의 첫페이지(유홍준 2013, 28)'를 장식하는 곳이 부여 송국리 유적지와 규슈 북부 사가현(佐賀県)의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역사공원이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 돌럴무덤 유적이며, 요시노가리는 2300년전 고조선과 삼한 시대 사람들이 집단 이동해서 청동기와 벼농사를 전해주어 일본역사에서 야요이 시대가 열리게 된 현장이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1, 규슈』[2]는 일본 규슈 북부 지역에 산재한 한반도와의 교류의 흔적을 통해 고대사에서 근세사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이 환황해 문화 교류와 그를 통한 창조 혁신의 중심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부여의 유적은 1970년대, 요시노가리 유적은 1980년대에 발굴되기 시작해서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역사적 유대가 재확인되기 시작했으며,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활발히 논의되던 2000년대에 특별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7년 10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을 주제로 대규모 기획전 개최했으며, 2008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사가 현립미술관에서 전시한 바 있다.

부여와 사가현의 유적은 한일간 문명 교류를 웅변하는 흔적들이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대륙의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여러 갈래 여러 수준으로 엉킨 환동해 네트워크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위만의 (고)조선 침략으로 (고)조선 왕족과 귀족이 남하하여 마한을 개국하면서 한반도는 원삼국시대로 진입했다. 이때 일본으로 건너간 원삼국시대의 유민들이 '도래인'이라고 불렸으며, 이들 도래인들이 형성한 주거지가 요시노가리 유적이다.

역사 시대에 들어와 규슈 북부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를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쓰(唐津)가 있다. 충남의 당진과 같은 이름이다. 중국으로 나가는 나루터라는 이름의 땅이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황해 쪽으로 난 돌출부에 있다는 것에서도 중국대륙 한반도 일본열도의 오래된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가라쓰에 백제 무령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가카라시마(加唐島)가 있다. 『日本書紀』 雄略紀에 의하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던 백제 개로왕이 왜에 구원병을 청하기 위해 동생 곤지를 파견했는데, 이때 곤지는 임신중인 개로왕의 부인과 함께 가겠다고 하여, 개로왕의 부인이 곤지와 함께 일본으로 향하던 중, 도중에 가쿠라시마(各羅島, 지금의 가카라시마)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를 본국으로 보냈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가 무령왕이다. 백제 무령왕 때 왜와의 교류 활발했던 것은 이러한 경위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백제와 왜는 근초고왕 때부터 교류가 활발해서, 아직이와 왕인 등이 왜에 파견되어 한자와 학문을 전수했다. 기술자 탁소(卓素), 주조법을 전한 인번(仁番), 불상 제작자 도리(止利), 역법가이자 천문가 관륵, 무용인 미마지 등이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기여했으며, 불교도 백제를 통해 왜에 전래되었다. 불교는 동진으로부터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전래한 것을, 백제의 노리사치계가 왜에 전래한 것이 일본 불교의 시초다. 이후 혜총, 도림, 담혜, 혜미 등 백제의 고승이 일본에 불교와 문화를 전래했다. 백제와 왜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칠지도가 있는데, 칠지도의 전래에 대해서는 백제가 왜에 보낸 것이라는 것만이 확정되어 있을 뿐, 연대나 그 의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이다.

2)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1 규슈, 창비, 2013.

무령왕 때에 들어서서도 백제와 왜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경박사 단양이 고안무 등이 왜에 파견되어 유교 교육을 담당했다. 특히 무령왕을 매개로 한 백제와 왜의 교류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로, 가카라시마 주민들은 1999년부터 무령왕 교류 가라쓰시 실행위원회를 조직해서 『일본서기』에 명시된 무령왕의 탄생일인 6월 1일에 탄생제를 실행해 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 12월 23일, 아키히토 천황이 "나 자신은 간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고 하여 한일 우호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고, 이러한 발언이 이후 한류의 기폭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이에 화답하듯 공주시는 무령왕 탄생 기념비를 제작해서 2006년 6월 25일, 가카라시마 항구 가까이에 건립하기도 했다.(공주대 미술교육과 김정헌 교수 디자인, 높이 3.6미터, 익산 화강암으로 제작)

백제와 왜의 문화적 유대감은 정치적 유대감으로 고양되고 있었다.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에 왜가 병사를 파견해서 백제 재건 움직임에 관여한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 의자왕의 사촌동생인 복신이 백제 왕조 재건을 위해 왜에 가 있던 왕자 부여풍을 백제 왕으로 옹립하고, 왜에 귀환을 요청하자, 왜는 661년 1월 3월에 군수물자를 지원했고, 9월에 부여풍을 백제로 보내면서 아베 히라후(阿倍比羅夫) 장수 휘하 병사 5천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663년 8월에는, 왜의 2차 지원병이 파견되기도 했다. 그 규모는 800여척의 군선과 병사 2만 7천명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들은 백촌강에서 당의 해군을 맞이하여 혈전을 벌였다. 이른바 백촌강(白村江) 전투라고 불리는 해전이다. 신라와 백제가 육지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당과 왜는 바다에서 전투를 전개했던 것이다. 이는 환황해권 4개국이 황해를 무대로 벌인 동북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이었다. 규슈 북부에 남아 있는 다자이후(太宰府)의 미즈키라는 수성(水城)은 백촌강전투에서 패배한 뒤 돌아와 나당연합군의 추적에 대비해 쌓은 백제식 토성이다.

이후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1274년, 1281년)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출병(1592년, 1598년)에 이르는 시기, 13세기말에서 16세기 말까지 300년 동안 황해는 긴 전란의 시대를 맞이했다. 두 가지 사건은 황해를 주전장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제전쟁이었으며, 두 사건의 사이에 끼인 시대에 황해는 왜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해적단인 왜구에 의한 약탈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문화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토양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문화로 피어나고 있었다. 조선 도공에 의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라쓰야키(唐津焼), 아리타야키(有田焼), 오이타(大分)의 다카토리야키(高取焼), 구마모토(熊本)의 아가노야키(上野焼)와 야쓰시로야키(八代焼), 쇼다이야키(小代焼), 야마구치(山口)의 하기야키(萩焼), 가고시마(鹿児島)의 사쓰마야키(薩摩焼) 등이 모두 조선 도공들에 의해 기틀이 마련되어 발전된 도자기들이다.

특히 아리타야키는 일본 자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자기로, 일본 자기의 시조로 추앙받는 이삼평(李参平, ?-1655)에 의해 확립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이삼평은 정유재란 때 사가번 번주인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嶋直重)에 끌려온 조선인으로, 금강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귀화하여 그 이름은 출신지 이름을 따서 가나가에 산페(金ヶ江三兵衛)라고 했다는 것이다.[3] 이삼평의 출생지는 충남 공주로 추정되었던 바, 1990년 10월 6일,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 33-1번지에 한일합동기념비가 세워졌다.[4]

3) 그러나 이에 대해 이론도 있음. 금강은 錦江이라 표기되기 때문.
4) 이상 유홍준의 위 저서를 참조. 참고로, 아리타야키의 수출용 브랜드가 이마리야키(伊万里焼)인데. 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종식되고 난 뒤, 조선과 에도 막부는 평화를 회복했고, 이 평화는 이후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서양 국제법 체제에 편입되기까지 250여년 지속되었다. 이 시기의 평화를 보증했던 것이 조선통신사였고, 이후 한일 교류의 길을 부산과 쓰시마를 통하는 길에 양보하면서 황해는 조용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황해의 평화를 깨는 사건이 운요호 사건이었다. 이후 황해는 동북아시아 전쟁의 무대로 전락했다. 1894년 9월 17일, 청일 간의 해전이 벌어졌다. 일본 해군 연합함대와 청의 북양함대 사이의 해전으로, 황해를 무대로 전개된 최초의 근대 전쟁이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04년 8월 10일, 러일 간의 해전이 발발했다, 일본 해군 연합함대와 러시아 제1태평양 함대(여순함대) 사이의 해전이었다. 이상 두 차례의 황해 해전과 한국전쟁 시기의 인천상륙작전이 식민과 전쟁의 동북아시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전쟁의 극복의 길이 황해의 평화에서 열린다.

3. 동북아시아 전쟁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황해의 비평화 구조는 두 차례의 연평해전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정전체제에 기인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한국전쟁 정전체제의 극복이 황해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당면 과제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역사적 층위를 생각하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전쟁은 근대화와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는 방법론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이 전쟁으로 귀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근대화는 청일전쟁으로 왜곡되고 실패했으며, 대한제국의 식민지 전락은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한 것이었다. 정전협정 체제의 종식으로 한국전쟁을 종료시킨다는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된 근대 이래 세 차례의 한반도 전쟁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세 차례의 전쟁에 일본은 두 번은 직접 당사국으로, 한 번은 간접 참전국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무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3·1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한반도 체제'의 문제의식이라면, 이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의 대전쟁들을 총괄해서 극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과정을 주도할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야 할 나라가 일본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과연 한일관계 악화를 방치하는 대일외교의 수정 없이 황해의 평화가 가능할까? 동북아 평화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이 성공하려면, 나아가 신한반도 체제를 그 플랫폼 위에 안착시키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을 조력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전쟁 극복의 과제와 식민지 극복의 과제는 중첩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개시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식민지 극복의 과제가 전면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식민 지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만들어진 1965년 체제가 일본의 식민 지배 책임을 묻지 않고 성립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본의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명청교체기의 중국의 혼란이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중국 경덕진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해 오던 중, 명청 교체기의 전란으로 입항이 금지되어, 그 대체품으로 일본의 아리타야키를 주문해서 유럽에 판매했던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개시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은 다시 1965년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신한반도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준 사건이었다.

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위치

일본은 평창 이후 남북대화가 지속되고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이는 예비적 협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을 통해 상황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은 북한의 '미소외교'가 한미일 연계를 분단하려는 의도라고 하여, 줄곧 남북 화해 분위기를 경계하며 견제하고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여 평가절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졸속 교섭과 타협에 경종을 울리고 냉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역할"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5]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인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는 트럼프 정권의 탄생을 '리버럴한 질서'의 위기로 규정하고, 장기적 안정정권으로서 일관된 외교전략을 전개하는 아베 정권이 리버럴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보다 더 지도적인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6]

그러나 TPP11이 칠레에서 서명된 바로 그날, 불과 몇 시간 후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사태였고, 1971년의 닉슨 쇼크 이래 일본 외교가 충격에 빠진 날이었다. 아베는 북미회담 실시에 대한 백악관 발표가 있던 9일 오전 방미를 즉각 결정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미국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여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북미정상회담 발표 직후부터 미일동맹론자들의 견제와 훈수는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일본의 보수 신문들, 산케이, 요미우리, 닛케이의 사설 들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대북제재 전선을 흐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7] 3월 19일(미국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이 주관하는 2018년 미일 안보 세미나(U.S.-Japan Security Seminar: Next Steps on North Korea)에서 그린은 불투명한 정세 속에서 굿 뉴스 중에 하나는 미일동맹이 건전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에 대해, 일본 측 패널리스트를 이끌고 참가한 노가미 요시지(野上義二, Nogami Yoshiji 전 주미대사이자,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북미교섭의 앞날에 우려를 표했다. 1990년대 이래 스스로 대북 교섭에 관여해 온 북일교섭의 역사를 '길고 긴 배신의 역사(long history of betrayals)'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긴 악몽의 역사에 기초해, 사람들은 매우 신중해졌다"면서, "이러한 신중함이 북미 정상회담에 임할 사람들은 이러한 신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8] 4월 6일의 아베-트럼프 전화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관계의 돈독함을 강조하며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해제의 타이밍을 오판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를

5) 『読売新聞』. 2018.3.10.
6) 細谷雄一, 「トランプ時代の国際秩序を『1917年』から考える：リベラルな秩序の回復に向けて」, nippon.com, 2017.1.13. https://www.nippon.com/ja/in-depth/a05303/
7) 『産経新聞』, 2018.3.21.
8) "2018 U.S.-Japan Security Seminar: Next Steps on North Korea. Monday, March 19", (2018 4:00 pm - 5:00 pm. CSIS Headquarters,) https://www.csis.org/events/2018-us-japan-security-seminar-next-steps-north-korea,

전하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한 뉴스 프로그램은 아베 총리가 외교 분야에서 트럼프의 개인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9)]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일동맹론자들은 여전히 비판적 여론의 배후지가 되고 있으며, 세계적 반 트럼프 정서에 편승하여, 한국 외교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이 이어지는 동안은 북한 비핵화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프로세스가 장기적인 과정임을 고려하면, 비핵화 속도가 지체되거나 그로 인해 북미관계가 이완되는 순간 미일동맹론자들의 반 트럼프 캠페인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프로세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여시키는 것은 이러한 구도를 깨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북일 국교정상화다.

5.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 개의 기초: 1998, 2000, 2002 공동선언

북일 국교정상화는 남북의 화해 협력 및 한일관계 발전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를 보증하는 세 기둥이다. 이 세 가지 양자관계는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의 핵심과제이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동아시아 화해협력 프로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본이 과거사에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한국이 미래지향의 관계 발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시점을 옮기는 데 현재 이룩한 성과를 서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은 한국이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전후의 평화적 발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와 비핵3원칙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임을 확인했다. 공동선언의 후반부에서는 한일 양국이 군축과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함께 노력할 것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때의 평화가 비핵평화의 가치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함과 함께 대화를 통한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오부치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화해 협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은 1992년 2월의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선언과 동시에 채택된 행동계획에는 북한이 핵불확산조약(NPT)의 의무를 이행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를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1998년 한일공동선언으로부터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2년의 북일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이 발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4월의 판문점 선언에서 6.15 공동선언이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1998년에서 2002년으로 이어진 동아시아 평화구축의 프로세스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바로 2002년의 북일정상회담 결과 납치 일본인 문제가 8명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드러나면서 북일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은 2002년 10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어서 2005년에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2008년에는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에서 시작되어 2000년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2002년 북일공동선언으로 이어졌던 동북아 평화프로세스가 2002년 이후 중단된 것, 이것이 2017년까지 이어진 15년 동안의 동북아 위기의 기원이었던 것이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프로세스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원칙들을 재가동하는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9) 『NHK ニュース』シブ5時, 2018.4.6.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가 1998년 한일공동선언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취임 이래 스스로 표방한 대일외교에서의 투트랙 접근이 '김대중-오부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해 있다고 하여 1998년의 공동선언 위에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10)] 한국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당초 시큰둥했던 일본이 한반도 화해 프로세스에 떠밀려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10월 8일 한일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아베 총리가 참석해서 공동선언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11)] 아베 내각에 들어 사문화될 뻔했던 1998년 한일공동선언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6. 북한 비핵화로부터 동북아시아 비핵화 구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개시되자, 전통적으로 반핵 평화운동을 해 왔던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왔다. 가장 이른 것으로 2018년 3월 15일에 발표된 일본 평화위원회의 성명이 있으며, 이 단체는 4월 28일에는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6월 13일에는 북미정상회담를 환영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 외 4월에서 6월 사이에 일본반핵법률가협회의,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및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일본 퍼그워시 회의, 일본AALA(Asia, Africa, Latin America) 연대위원회, ICAN 등 평화운동 단체,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일본위원회와 NCCJ(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일본 기독교협의회) 등의 종교인 단체, 나가사키대학 핵무기첼페연구센터(RECNA,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Nagasaki University)그리고 원코리아페스티벌과 코리아NGO센터 등 재일코리언 단체 등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12)]

이러한 단체들의 성명에 더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6월 21일, 위에 소개한 NCCJ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도달점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로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13)] 이는 2017년 6월 15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립을 요구하는 일본 종교인 성명(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RfP=일본위원회 협찬)이, 이에 찬동하는 종교인 124명의 명부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상에 전달했던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피스 데포(Peace Depot)가 외무성에 전달한 '동북아시아 비핵화 평화에 관한 요청서'이다. 2018년 4월 16일 피스 데포 공동대표 야마나카 에쓰코(山中悦子),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유아사 이치로(湯浅一郎) 등 세 명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이시카와 고지(石川浩司)와 북동아시아과 도다 다쿠시(戸田卓志) 등을 상대로 '북동아시아 비

10) 『読売新聞』, 2018.5.8.
11) 『産経新聞』, 2018.10.9.
12) 『佼成新聞』 Digital, 「『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の条約求め宗教者が外務省へ要請」, 2017.6.19. https://shimbun.kosei-shuppan.co.jp/news/7477/
13) 「米朝首脳会談・南北首脳会談に関するNCC声明」, 2018.6.21. https://ncc-j.org/米朝首脳会談・南北首脳会談に関するncc声明/

핵화 평화에 관한 요청서'를 전달했다.[14] 요청서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좁은 시점이 아닌 포괄적인 시점에서 접근할 것. 둘째, 교섭 실패의 역사에서, 그 책임을 북한에만 묻지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쌍방의 문제'로서 교훈을 찾을 것. 셋째, '서약 대 서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 넷째, 교섭의 원칙과 최종 목표에 대해 조기에 6개국 정상 간의 합의와 선언을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이끌어 낼 것. 다섯째 이 기회를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 외교의 기점으로 삼을 것 등이다. 특히 마지막 요구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개시가 북한과의 전후처리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회이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립 등 지속적인 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아시아 외교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1996년 피스 데포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2004년에는 피스 데포가 한국 시민단체들과 함께 '모델 북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안'을 기초한 바 있다. 우메바야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에 일본이 적극 참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세카이 2018년 9월호에서 다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전개하고 있다. 즉 그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만으로는 그것은 이 지역에서 평화의 'end picture'가 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지대'의 실현을 위해 일본의 참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은 '동북아 비핵지대화'로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15]

피스 데포는 2018년 11월 19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를 연계해서 한미일 시민 세미나를 기획 개최했으며, 2019년 4월 10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NPT 재검토회의에 관한 요청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16]

7.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

2012년부터는 나가사키대학 핵무기철폐연구센터(Nagasaki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RECNA)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 실현을 위한 '포괄적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RECNA가 6월 13일에 발표한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대한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17] '의견'은 '외교에 의한 비핵화'의 길을 열었다는 데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환영했다. 이로서 오래 주장해 왔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안이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 내용은 일본의 비핵3원칙을 모델로 남북한과 일본의 3국이 비핵지대화 조약을 체결하고, 이들 역내 비핵 3개국에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핵보유 3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을 보증하는 의정서에 서명하는 3+3의 방식으로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자는 구상이다. RECNA는 2019년 6월 1-2일에는 한국 세종

14) peace depot, 「4.16. 『北東アジアの非核化・平和』に関する外務省への要請行動」 2018.4.19. http://www.peacedepot.org/statement/2315/
15) 梅林宏道,「北東アジア新秩序へ一非核兵器地帯化への積極的関与を」,『世界』2018.9. 198-199.
16) peace depot, 日米韓市民セミナー 「朝鮮半島が変わる一非核兵器地帯の出番だ」, 2018.11.19. http://www.peacedepot.org/event/2436/ ; peace depot,「朝鮮半島の非核化とNPT再検討会議についての外務省要請」, 2019.4.11. http://www.peacedepot.org/statement/2581/
17) RECNA, 「『米朝首脳会談と共同声明』に関する見解」, 2018.6.13. http://www.recna.nagasaki-u.ac.jp/recna/eyes/no14

연구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동북아시아 비핵화로'를 주제로 한일공동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18]

나아가 가와사키 아키라(川崎哲) ICAN 국제운영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금지조약을 연계하는 구상을 제기했다. 가와사키는 채택한지 1년을 맞이한 핵무기금지조약의 성과를 검토하고, 핵무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등 다국간 조약을 한반도 비핵화에 살려나간다는 구상을 제기했다. 그는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일본에서 이러한 지역안보 구상 논의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가와사키가 제안하는 ICAN의 한반도 비핵화는 5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인 피폭자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남북한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여 핵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검증 하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넷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바로 서명해야하며, 미국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핵비확산조약과 국제사회에 복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도 NPT가 부과하는 핵군축 의무를 이행해야한다.[19]

한국에서도 비핵지대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다. 한국이 참가한 비핵지대 구상으로 동북아의 제한적 비핵무기지대(LNWFZ-NEA, Limited Nuclear Weapon Free Zone in Northeast Asia)안을 들 수 있다. 이 구상은 1991년 11월부터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 3월에 한미일중러 5개국 전문가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회의 개최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보르도, 모스크바, 헬싱키, 상하이 등을 거쳐 1999년 10월 일본 하코네에서 후속 고위급 위원회 회의 개최했지만, 진전 보지 못했다. 핵국과 비핵국의 활동을 함께 규제하려는 데에서 오는 의무의 불균형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현실에서 한국의 핵옵션 행사를 제한적 비핵지대화의 전제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20]

그러나 이는 2018년 이후 판문점선언과 북미합의로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협할 수 있어서 문제다. 이제야 말로 과감하게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에서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지적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21] 이를 위해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재음미와 계승을 통해 일본을 이 구상에 끌어들여야 한다.

8.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 각인된 기회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비핵평화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는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하고 있다. 남북은 이미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바 있었다. 북한은 2009년에 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했으나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1992년의 비핵화 정신이 부

18) ; RECNA, 日韓共同ワークショップ, 「朝鮮半島の平和から北東アジア非核化へ」, 2019.6.1-2. http://www.recna.nagasaki-u.ac.jp/recna/asia/jrj-workshop-20190522
19) 川崎哲,「朝鮮半島の非核化と核兵器禁止条約」,『世界』2018.9. 206-207. Kawasaki Akira.
20) 전성훈,「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와 비핵지대화 가능성」, JPI 정책포럼, 207호, 2017.
21) 정욱식 (판문점 선언 이행의 군사부문 쟁점과 출구전략, 시민사회단체 긴급 국민대토론회),「판문점 선언 이행과 평화통일 로드맵의 쟁점과 출구전략」, 2018.6.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608010003788

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 측 영어번역은 "핵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realiz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는 것인데 반해,[22] 판문점선언의 북한 측 영어번역을 직역하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전환한다(turn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a nuclear-free zone)"고 돼 있다.[23] 북한이 2009년에 폐기를 선언했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복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지를 확인했던 2002년 북일공동선언의 정신이 확인되면 남북한과 일본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018년 8월 9일, 나가사키 평화선언에서 다우에 도미히사(田上富久) 나가시키 시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24] "지금 한반도에서는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끈기 있는 외교 노력에 의해 불가역적 비핵화가 실현될 것을 피폭지는 커다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서, 일본과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북동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아베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도 "비핵3원칙을 견지하면서, 끈기 있게 쌍방의 교량이 되도록 노력하여, 국제사회의 대응(取り組み)을 주도해 나갈 결의"를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다.[25] 다우에 시장은 레이와(令和) 원년인 2019년의 평화선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을 받아서, '핵우산'이 아니라 '비핵우산'이 될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검토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26] 이에 대해 아베는 2019년의 인사말에서도 비핵3원칙의 견지를 다짐했다.[27]

1998년 한일공동선언으로 개시된 동북아 평화프로세스가 그로부터 20년만인 2018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기로 재개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연결하는 고리가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에서 확인된 일본의 비핵3원칙을 계승하는 데에서 마련될 수 있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일본이 비핵평화의 가치를 공유하여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지대 구축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대일 외교에서 중심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불가역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동북아 신안보질서의 상상력은 그 성과 위에 마련될 수 있다.

9. 환황해 역사문화공동체에서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로

22)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018.4.27.), Korea.net, Peace, A New Start, http://www.korea.net/Government/Current-Affairs/National-Affairs/view?subId=641&affairId=656&pageIndex=1&articleId=3412

23) Watanabe Takeshi,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North Korea: Nuclear Weaponry, Alignment, and Regime Competition, NIDS Commentary No. 74., 2018. 6.6. In this paper Watanabe cited the texts from a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repot on April 28, 2018. http://www.nids.mod.go.jp/english/publication/commentary/pdf/commentary074e.pdf

24) 田上富久, 長崎平和宣言(平成30年), 2018.8.9. https://nagasakipeace.jp/japanese/peace/appeal/2023.html

25) 安倍晋三, 長崎原爆犠牲者慰霊平和記念式典あいさつ, 2018.8.9.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0809nagasaki.html

26) 田上富久, 長崎平和宣言(令和元年), 2019.8.9. https://nagasakipeace.jp/japanese/peace/appeal.html

27) 安倍晋三, 長崎原爆犠牲者慰霊平和記念式典参列等, 2019.8.9.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908/09nagasaki.html

동북아 평화공동체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경험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일이다. 한일간에 이러한 인식이 공식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다. 탈냉전에 조응해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질서의 가능성이 부상하던 시기다. 거꾸로 말하면 동북아에 대립과 전쟁의 질서가 유지 강화되던 시기에는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동북아시아 경험은 전혀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일간 최초의 공동선언은 1960년 9월 6일, 정일형 외상과 고사카 젠타로 외상 간의 선언이다. 고사카 외상이 4.19 민주화혁명 이후 한국의 '신정부 수립을 축하하기 위해' 1960년 9월 6-7일 서울 방문한 것이다. 양국이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평등과 주권 존중의 기초 위에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양국간에 존재하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양국 간 협조의 기초 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다음에 나온 선언이 1965년 2월 20일, 시나 외상과 이동원 외무장관의 한일 공동선언이다. 여기서 이동원 외무장관은 과거 한 시기에 양 국민 간에 불행한 관계가 있었던 것 때문에 생긴 한국 국민의 대일감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나 외상은 이동원 외무장관의 발언에 유의하고, 이러한 과거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차례의 공동선언에 한일간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대에 대한 평가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가 그만큼 심각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한일국교정상화를 완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965년 6월 23일, 한일조약 조인에 즈음한 담화(日韓条約調印に際しての談話)에서 처음으로 한일간의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경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길고도 오랜 상호관계의 역사를 갖고, 일의대수 사이에 있는 일한 양국이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선린우호의 길을 걷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로부터 양국의 번영과 아시아의 평화 안정이 한 층 더 추진될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일조약 비준서 교환에 관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에는 오랜 역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과거에 대해서는 한 줄로 처리되었다. "지난 36년간 우리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분명히 구적관계(仇敵)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카소네 총리의 한국 공식방문에 즈음한 한일공동성명(1983년 1월 12일)에서도 한일간의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 전혀 없었다. 그러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표명되는 것이 노태우 대통령 주최 만찬회에서 미야자와 총리의 연설이었다(1992년 1월 16일). 이 자리에서 미야자와 총리는, 협력의 기초로 양국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신뢰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상호이해라면서, 이 때, "우리 일본 국민은 무엇보다도 과거 한 때, 귀국 국민이 우리 나라의 행위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사실을 상기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미야자와 총리는 "저는 우리 나라와 귀국이 상호 이해의 토대로 문화에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음 든든히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고래로 귀국과의 밀접한 교류 속에서 귀국 문화의 은혜를 받아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며, 에도 시대 유일한 외국 사절이던 조선통신사의 문화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날 미야자와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최초로 지방 도시인 경주를 방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만찬회에서 미야자와 총리는 "우리 나라 문화의 고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서 깊은 땅을 방문하여, 그 동안 한일간 교류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사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至誠天に通ず"라는 맹자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일본의 대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서 미야자와 총리는 1992년 1월 17일의 국회 연설 말미에 본인의 고장(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도모노우라鞆浦)이 조선통신사가 지나는 마을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곳에 후쿠

젠지라는 절에 그 때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가 아직도 있고, 거기에 対潮楼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소개했다. 통신사의 정사였던 홍계희가 이름을 붙이고, 그의 아들 홍경해가 쓴 글씨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결론으로 "일한 양국의 선조들이 남긴 이러한 교류의 역사 위에 '아시아 속의, 세계 속의 일한관계'로서 몇백년, 몇천년 이어질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을 기원한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배경에 미야자와의 발언과 인식은,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보구상이 미일동맹 중심주의에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것으로 재구성되는 한편 일본의 역사인식이 제고되고 있던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서 하나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하토야마 내각에 비하면 약화되었다고는 해도 민주당 내각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왕실의궤 및 도서를 반환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과 한국은 2천년 동안 활발한 문화 교류와 사람의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고 하여 한일 관계가 역사문화공동체로서 전개되어 온 역사를 높이 평가했다.

10. 지자체 중심의 환황해 비핵무기지대화 구상

동북아의 역사문화공동체가 황해를 매개로 성립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사문화공동체 추진의 기초 단위는 국가라기보다는 지역이다. 지자체가 역사문화공동체 형성의 주체들인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비핵평화의 공동체를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미 이 지역에는 일본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비핵평화자치체' 운동이 존재한다. 이에 호응하듯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제주 비핵-평화지대화 논의가 제기되고[28] 합천 비핵평화대회 개최가 개최되는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환황해 역사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심이었던 부여가, 일본 측 환황해권 지자체의 하나인 나가사키와 함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형성의 중심축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28) 진보정치연구소,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전망, 과제" 책자 작성 배포. (2006년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의 문제제기) https://www.betulo.co.kr/590 ; https://blog.naver.com/k2why/70017232990 ; https://cafe.naver.com/distribtiongrowth/464

동아시아사의 서술,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

류바오취엔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제 5 회 환황해포럼(2019) 발표문(20191031)

동아시아사의 서술,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

산둥대학 동북아학원 류바오취엔

【초록】

탈국가사(Transnational History)의 역사 서술 패러다임은 민족국가를 더 방대한 역사의 맥락 안에 놓음으로써 지속된 역사 연구 속의 민족국가라는 속박의 타파를 강조한다. 탈국가사 방법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사를 연구, 작성하고《동아시아사》과목을 교육하는 것은 삼국이 서로 눈을 맞추고 화해하는 시각에서 '국별사'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동아시아사 전모를 반영한 저술을 작성할 수 있고,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 의존 관념과 공동체 의식을 역사 교육 속에 심어 넣을 수 있다. 한, 중, 일 삼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편찬한《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중국 제목 : 국경을 초월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이하 한국 제목으로 표기)》및 한국 고등학교 단계에 개설한《동아시아사》는 삼국의 역사 인식 관련 국경을 초월한 노력을 구현하였다.

【키워드】동아시아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탈국가사 동아시아 평화

1. 서언

오늘날 동아시아 삼국 사이에는 역사에서부터 현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한일, 중일, 한중 사이에는 모두 양자 혹은 다자간의 복잡한 역사 갈등이 있고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는 줄곧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실 방면에서는 영토(독도, 댜오위다오), 외교분쟁(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화이트리스트' 등이 촉발한 한일 무역전쟁 등 경제 문제가 존재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포퓰리즘의 '부흥' 추세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수많은 역사, 현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인들의 큰 지혜가 필요하다.

역사는 거울이다. 문명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역사를 기술하고 연구하였다.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추구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학 연구의 이러한 정신은 일관적이다. 그러나 세계 역사와 각국 역사를 포함해 역사는 논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관점 역시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에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민족주의 사학의 발족 이후로는 민족사 작성이 매우 성행하여 논쟁 역시 더욱 치열해졌다.

민족국가(nation-state)의 대두로 생겨난 민족국가 역사의 작성은 그 기능의 많은 부분이 단일한 민족 신분과 국가 정체성을 형상화하기 위함이고, "역사는 이로 인해 민족국가사 즉, '국사(national history)'로 변하였고, 사학은 상당한 정도로 민족국가에 봉사하는 '시녀'가 되었다." [①] 1980~90 년대에 이르러 세계사(global history)와 탈국가사(transnational history) 등 새로운 사학연구 패러다임이 출현한 이후, 민족국가사의 통일천하는 비로소 점차 깨어졌다. 저명한 미국 역사학자인 윌리엄

① 왕리신 : "국가 밖에서 역사를 발견하다 : 미국사 연구의 국제화와 탈국가사의 대두", 《역사연구》 2014 년 제 1 기.

맥닐(William H. McNeill)의 세계사 이론과 이리에 아키라(Akira Iriye)의 '탈국가사' 이론은 역사 연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리에 아키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래의 역사 연구는 반드시 인류 역사를 지구와 우주 진화의 대배경 속에 포함해야 하며 인류가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지 토론하고, 나아가 진정으로 헤겔식의 민족국가 중심의 역사 서사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는 미래의 연구자들이 민족국가사학의 틀을 벗어나도록 장려할 뿐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반드시 인류 역사 자체를 바라보고 인류 공동의 역사 경험을 직면해야 한다고 제시한다.[①]

역사학계에서 '서양중심론'의 탈구축은 역사 서사를 탈중앙화, 탈국가화 하는 것으로, 더욱 글로벌화되고 국가 초월적인 연구 패러다임을 끌어안고 세계 역사를 일종의 각국과 사회를 설명하는 실현 가능하고 심지어 이상적인 해석의 틀로 보고 학계의 트랜드로 전향하기 시작하였다.[②] '동아시아사' 관련 담론과 편찬, 교육은 날이 갈수록 동아시아 삼국 정부와 민간, 특히 역사 연구와 교육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동아시아사 연구 분야에서 중국 국내는 서양 학자의 동아시아사 저서[③]를 번역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동아시아사 저서 [④] 를 편찬하고 출간하기 시작했으며, 세계사와 탈국가사의 학술 이념, 시야와 방법을 활용하고 국별사 연구 방법의 견제를 물리치며 동아시아 역사 논술을 객관적으로 전개하였다. 중국 학자들은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를 전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사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동아시아사 학과 건설을 강화하였으며 동아시아사의 체계, 기본 문제, 편찬 원칙 및 이론 분석 모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를 진행하였다.[⑤] 근래에 들어 중국의《중국역사》,《세계역사》교재 편찬과 교육 역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사, 탈국가사 시야 하의 중국사와 지역사, 세계사는 날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21세기초 한국학계 역시 동아시아사의 구조와 서술 등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년에는 한국 고등학교의《동아시아사》선택과목 개설을 추진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사의 작성과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결합해 연구하여 한국학계는 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백영서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 동아시아사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제창한 대표적 인물로서, 그는 동아시아사학이 서양 역사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한국 학원 체계의 근대 사학은 일본 식민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근대의 역사학은 국민국가를 정당화하는 일종의 이념적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 개념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장 주요한 문제는 근대 이래로 답습한 서양을 모방한 분과화와 전문화된 사학 학술 체제를 초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아시아사학

① 싱청지 : "이리에 아키라의 《세계사와 탈국가사 : 과거, 현재와 미래》를 평하다", 수도사범대학《세계사평론》 제 8 집(2015 년)
② [미]이리에 아키라(Akira Iriye) : 《세계사와 탈국가사-과거, 현재와 미래》, 저장대학출판사 2018 년, p.35~37 참조
③ [미]로즈 머피(Rhoads Murphey) : 《동아시아사》, 세계도서출판사공사베이징공사 2012 년
④ 양쥔 등 주편 : 《동아시아사 :선사에서 20 세기말까지》, 창춘출판사 2005 년. 동 서적은 중국에서 "첫 번째 지역사 시각 하의 동아시아사 연구 체계"
⑤ 하미시타 타케시, 천펑린 등 : "동아시아사 학과 건설 문제 정담", 《세계역사평론》2019 년 춘계호

학술체제의 '사학혁명'을 진행하였다.[①] 그는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역사와 동아시아인의 상호 인식을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 중, 일 삼국 학자들은 또한 공동으로 동아시아 삼국 근현대사의 역사 독본을 편찬하였고 《미래를 여는 역사(중국 제목 : 동아시아 삼국의 근현대사, 이하 한국 제목으로 표기)》와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②]를 연달아 출간하여 삼국 학자들의 역사 인식 관련 국경을 초월한 노력의 성과가 구현되었다.

동아시아사의 서술과 교육 문제에 관해 본문에서는 본국 역사를 초월하고 탈국가사의 시각과 방법으로 동아시아사를 서술한 것을 연구하고 토론한다. 즉, 동아시아 역사를 더욱 광활한 지역과 전세계라는 배경 안에 두고 고찰을 진행하고 국가간 연계와 외국 사태를 동아시아 역사를 만드는 역량으로 여겨 동아시아 예외론을 타파한다. 동아시아 각국 간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 영향을 중시하고 그리하여 동아시아 역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더욱 정확하고 더욱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역사의 진전을 이해한다. 이 분야에서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편찬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큰 걸음을 내딛었고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과목의 설립은 바로 국가를 초월해 공동의 역사 인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사 교육에서 구현된 것이다.

비록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아시아사가 서술 단원 혹은 독립된 교육 과목이 될 수 있는지, 동아시아사의 범주 및 구조와 서술 방식 그리고 어떻게 동아시아의 상호 연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가 등은 현재 여전히 학계에서 토론하고 있는 문제이다.

2. 동아시아사의 서술——탈국가사의 시각

20 세기말 세계사와 국가사의 대두는 '사학 편찬의 혁명(historiographic revolution)'을 야기하였다.[③] 역사학자들은 점차 기존의 역사 이해와 작성, 가르침에서 벗어났으며, 특히 근현대 역사의 방법과 관념이 그러했고 세계사와 탈국가사는 '전통 민족국가 역사 서사와 국제사의 연구 방법과 완전히 다른 뉴웨이브'로 파생되었다.[④]

국가-민족사 혹은 국별사와 '동아시아사'의 관계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거자오광 선생은 "만약 일국의 역사적 입장과 각도, 시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역사를 바라본다면 사각지대와 맹점이 출현할 것이다."라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왕조의 입장을 초월하고, 역사 서술에 여러 개의 원심이 있어 여러 개의 역사권을 형성하면 동아시아사는 여러 역사권의 교차점이 될 수 있다.[⑤]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교차하는 '주변'이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아시아라는 커다란 배경 안에서 새로 역사를 서술하면 실제로 탈국가사 패러다임의 또 다른 표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학 방법 혹은 패러다임으로서 탈국가사의 특징은 역사 연구 과정 중의 국가를 넘어선 배경, 교류 및 상호 영향, 다국적 시각 인입과 '하위정치' 관심 등

① 백영서, 리창리 : "동아시아사학 재구조", 《독서》 2005 년 04 기, p.38~46
② 동아시아삼국의근현대사공동편찬위원회 편찬 : 《미래를 여는 역사)》,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5 년. 한중일삼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편찬 : 《한중일 삼국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2),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3 년. 일본판, 한국판은 각 2012 년 5 월과 9 월 출간.
③ Akira Iriye : 《세계사와 탈국가사-과거, 현재와 미래》, 저장대학출판사 2018 년, p.1
④ Akira Iriye : 《세계사와 탈국가사-과거, 현재와 미래》, 저장대학출판사 2018 년, p.11
⑤ 거자오광 : "한 국가 역사와 동아시아사 사이——13~16 세기 동아시아 3 개 역사사건을 예로", 《중국문화연구》 2016 년 겨울호

요소를 강조하는 데 있다. 이 연구방법은 지속된 역사 연구 중의 민족-국가의 속박을 타파하고 역사를 전체 국제 체계 하에 놓는 것을 강조한다.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는 각도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논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민족사로 동아시아사를 이해하고 작성하며 가르치던 방법과 관념을 바꿀 수 있으며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적 의미가 있다.

탈국가사의 이해와 방법은 한중 양국에서 아직 많은 사람들의 중시를 받지도 응용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사 연구와 교과서 편찬 분야에서는 동아시아의 각도에서 관찰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일국의 관점을 타파하고 역사 인식의 초월을 실현하는데 한중일 삼국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편찬과 출판이다.

한중일 삼국으로 구성된 공동역사편찬위원회는 2002 년부터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독본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바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하고 후소샤가 출판하는 일본 우익 역사 교과서가 자태를 드러냈을 때이다. 한중일 삼국의 학자, 교사와 시민들은 역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세 차례 개최하였다.[①] 이와 동시에 각국이 각자 구성한 역사 독본 편찬위원회는 여러 차례 공동으로 편찬작업회의를 소집하였다. 각 측은 다음과 같은 의견 일치를 거두었다.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하여 우선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 즉 역사 인식의 공유이다. 역사 인식의 공유를 실현하려면 동아시아의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침략 전쟁과 식민지 통치의 역사 사실을 이해한다는 기초 위에서 과거의 반복된 대화와 토론을 반성하고 확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2005 년 반복된 토론과 조정을 통해 결국 삼국은 각자의 언어를 이용해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의 역사 독본을 출간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역사》이다.

제 2 단계의 성과는 다시 6 년간의 토론과 논쟁, 반복된 수정을 통해 한중일 삼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버전으로 각각 2012 년과 2013 년에 출판되었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출간 후 다음과 같은 일부 비판 의견이 있었다. "본국 학자들이 본국의 역사 흔적을 편찬하는 것이 여전히 비교적 명확하며, 국경을 초월하는 역사 인식을 구축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진함이 있다. 내용 서술은 전쟁 역사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과 분석이 부족하다." 새로운 버전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이러한 결점을 많이 보강하였다. 동 책의 1 권은 시간순으로 국제 관계 변천의 각도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근현대 구조 변동을 서술하였고, 국제 질서의 변천 묘사에 무게를 두었다. 2 권은 주제 부문별로 동아시아 민중의 생활과 교류를 연구하였고 동아시아의 제도, 사람, 사회 서술에 무게를 두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부핑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술한 두 권의 조직과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는 경제 글로벌화의 추세가 갈수록 인류 사회의 각 영역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글로벌화 시대의 역사 인식 역시 상응하게 변화가 발생하였으니 사람들은

① '한·중·일 역사공동부교재개발', https://www.nahf.or.kr/gnb07/snb08_04.do

반드시 역사 인식의 시각을 확대해야 하고 과거 본국사 중심으로 수립된 역사 인식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으니 좁은 역사 인식의 시각을 깨뜨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 인식을 구축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한다.①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편찬자의 시각이 동아시아 삼국의 시각에 서 있고 역사 발전의 전체성으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본국사 중심에서 벗어나 역사 인식을 확대하는 시각에서 탈국가사에 더 접근한 방법을 구현 또는 서술하였다. 동 책은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세계사의 발전 안에 놓고 시스템적 해석을 하여 동아시아 근현대사 구조 변화에 대해 서술하며 삼국의 근현대에서의 연대관계에 중점을 두고 즉, 동아시아 지역 국제관계 속에서부터 한중일 삼국의 국가 구조와 상호관계의 변동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 관계, 특히 구미 국가와의 관계 변동을 결합하여 역사를 서술하였다. 동아시아사 자체가 바로 지역사이고 초국가적 배경, 초국가적 교류 및 상호 영향을 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다국적 시각을 인입한 서술 방법은 큰 진전이었다. 민족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는 역사 관찰 방식을 통해 탈국가사는 역사학자의 시야를 확장하였고 역사 학자의 관념을 갱신하였으며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관한 전체 서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2 권에서는 동아시아의 도시화, 철도(현대화, 식민지 통치, 민중생활), 이민과 유학(사람의 이동과 교류), 가족과 젠더(남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 미디어(만들어진 대중의식과 감정), 전쟁과 민중 등 분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서술 대상의 변화는 탈국가사의 특색을 구현하였다.** 탈국가사의 학술 발전 맥락 속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 종족 연구, 타국으로의 이민, 인권 문제, 경제와 문화의 글로벌화, 지역 조직 및 수많은 비정부조직의 관심과 연구를 중시하고 있다. 연구 영역으로서의 탈국가사 혹은 국제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첫째는 사상, 정보, 상품, 기술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다. 둘째는 여성, 노동자, 종교, 환경, 평화 등 영역의 국경을 초월한 운동이다. 셋째는 국경을 초월한 행위체로 국제 비정부조직, 정부간 조직을 포함한다. 넷째는 국경을 초월한 사무 및 관련 다국적 협력이다. 국경을 초월한 사무란 질병의 전파, 인구 변천, 환경 변화, 인권 보장, 무기 확산 등 국제 사회 협력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무이다. 다섯째, 이민과 디아스포라(diaspora)이다.②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에는 이 분야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각 민족국가 역사 외에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를 작성하였다.

셋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문명(문화)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국가간 상호 의존 의식과 국제주의 관념을 키우고 공동의 문화 정체성과 '동아시아 시민' 신분을 형상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 구축의 도구로서 민족국가 사학의

①부핑 : "동아시아 역사의 서사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국경을 초월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읽다", 《중화독서보》 2013 년 06 월 26 일 09 버전

② 왕리신 : "국가 밖에서 역사를 발견하다 : 미국사 연구의 국제화와 탈국가사의 대두", 《역사연구》 2014 년 제 1 기.

임무는 국가 공동체 의식 형상화와 민족주의 관념 육성이고, 탈국가사는 글로벌 의식과 세계 시민 관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동아시아 관련 특히 중일, 한일 사이의 역사 문제를 해결할 때 역사 인식이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부핑 연구원은 전쟁 전후의 일본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특히 전후 일본이 전쟁 책임을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겪은 우여곡절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일본의 전쟁 책임과 전후 책임에 관한 논쟁은 시종 전후 일본 사회의 정치계, 사상계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일본 사회에서 침략 전쟁을 질책하는 정치 역량의 투쟁 역시 주목하고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대화와 교류를 중시하고, 상호 이해를 더욱 중시하여 민중과 학술 층면의 문제를 해결한다. 학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민중에게 더 많은 역사 지식, 더 넓은 역사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이 층면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긴박한 임무이다.①

3. 동아시아사의 교육——한국 고등학교 과정《동아시아사》의 실천

한국은 과거 한국사-서양사-동양사 교육 체계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고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동아시아사》 과정의 설치는 일종의 새로운 시도이다.

2007 년 한국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해 일부 개정을 진행하였고 한국사와 세계사 사이의 연계 문제를 강조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교량이므로 한국은 고등학교에 새로운《동아시아사》 선택과목 개설을 결정하였다. 그 이후 고등학교 단계에 한국사,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정을 동시에 개설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은 교과서 편찬자와 교사들을 조직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과목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집②을 편찬하였다. 2012 년 천재교육출판사와 교학사가 각각 편찬한 고등학교《동아시아사》 교재가 공식적으로 출판되고 동아시아사 과정은 정식으로 학교 교육 시스템에 진입하였다.

《동아시아사》 과정 내용의 설정은 단순히 시대순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주제를 중심에 두고 서술을 전개하였으며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균형적인 서술을 고려하였다. 2015 년 개정된《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Ⅰ.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1.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2.자연환경과 생업, 3.선사문화, 4.국가의 성립과 발전

Ⅱ.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1.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2.국제관계의 다원화, 3.유학과 불교。

Ⅲ.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1.17 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3.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① 부핑 : "동아시아 역사의 서사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국경을 초월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읽다", 《중화독서보》 2013 년 06 월 26 일 09 판

②'한·중·일 역사공동부교재개발', https://www.nahf.or.kr/gnb07/snb08_04.do

Ⅳ.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반제국주의의 민족운동

1.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2.제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3.서양문물의 수용

Ⅴ. 오늘날의 동아시아

1.제 2 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2.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3.갈등과 화해[①]

과거의 한국 동양사 연구와 교육은 (한)국사-서양사-동양사의 체계를 준수했고 단일한 동양사와 비교사의 동아시아 지역사를 강조했으며 한·중·일·베 4 국을 중심으로 한 서술 체계를 채택하였다. 당시 한국의 역사 인식과 역사교육의 문맥에서 본다면 동양사는 (한)국사를 제외한 아시아사였다. 새로 설립한 동아시아사는 한국사를 포함한 지역사이다.[②] 비록 동아시아사에 대한 범주와 동아시아사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서술 단원이 될 수 있는가 등 문제에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동아시아사 과목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고 주목 받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사는 원래 세계사 일부분으로서의 동아시아사가 분리되어 나와 하나의 독립된 과목이 되었다. 둘째, 동아시아사가 채택한 것은 본국사를 포함하는 지역사의 형식이다. 셋째, 과거의 통사 교육과 비교하여 동아시아사 교육이 취한 것은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식이다.[③]

동아시아사의 도입은 20 세기 90 년대 이후 일어난 지역주의와 점차 확산된 포스트모더니즘 및 세계사의 발걸음을 바짝 뒤따랐고 동시에 그 배경에는 일국주의적 본국사에 대한 반성, 서양 중심주의 및 중국 중심주의 세계사에 대체 가능한 방안의 모색, 주변 시각을 강조한 비판적인 동아시아론의 출현 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근대 국가 건설의 방략으로서 20 세기 90 년대 이후 출현한 동아시아를 주체적 상상의 공간으로 보는 사유 전통이다. 제국적(중국의 대국주의와 일본의 팽창주의)인 것에 대한 비판은 동아시아사라는 이 상상의 공간을 하나의 교육 과목이 되도록 만들었다.[④]

동아시아사는 한국사의 연장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 역사이다. 공간상에서 동아시아사는 한, 중, 일 삼국을 중심으로 하고, 시간상에서는 고대부터 당대까지를 포함하며, 내용상에서는 삼국의 교류와 갈등을 서술한 역사를 통해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였다.[⑤] 한국의《동아시아사》과정의 개설은 이전의《한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 모델을 약화시켰고 학생들의 주변 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유리하고 지역 사유를 가진 '동아시아인'을 육성한다.

비록 **한국의《동아시아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을 진정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 **한-중 역사 분쟁 및 중국의 부정적 이미지 등을 과도하게 과장하는 면이 있으나**[①] 그의 긍정적 의미는 여전히 인정할 만 하다.

[①][한] 남택범 : 《2015 년 개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교육과정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년, p.19. 정연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 호(2008 년 03 월)

② [한]유용태 :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동양사 연구 60 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역사교육》제 107 호, 2008 년

③ [한]오병수 : "한국, 동아시아사에 대한 탐구로 양호한 지역 질서를 희망하다", 《산시교육(행정)》 2013 년 제 6 기, p.16.

④ [한]오병수 : "한국, 동아시아사에 대한 탐구로 양호한 지역 질서를 희망하다", 《산시교육(행정)》 2013 년 제 6 기, p.16.

⑤[한]정 연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 호(2008 년 03 월)

4. 맺음말

동아시아 세계에 현존하는 수많은 역사, 현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역사 분야에서 말하자면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국제간 역사문제 논쟁의 해결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 경제 관계의 굴절이 더 많으며", 역사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의 노력, 공동의 역사연구와 교과서 협력의 전개를 통해 역사 분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②]

역사상의 동아시아 삼국은 발해-황해(소위 '동아시아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세계권을 형성하였다. 8~9 세기는 동아시아가 세계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었던 시기 중 하나로 중국의 고승 감진과 신라 '해상왕' 장보고, 일본 승려 엔닌(원인) 등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같이 묶여 있는 여러 유대와 상호 관계를 형성하였다. 과거를 통해 오늘을 알듯이 오늘날 한, 중, 일 각국의 국별사 및 동아시아 지역사로 보면 '국별사'라는 일국사관을 어떻게 초월하여 역사의 정체성을 파악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탈국가사는 우리가 '국사' 시각과 '동아시아사'의 시각을 어떻게 상호 결합하여 미래에 가능한 연구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지 도와줄 수 있다. 동아시아의 동일성, 정체성을 찾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하여 삼국이 서로 눈을 맞추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별사'라는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아야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동아시아사의 전모를 반영할 수 있다. 학술 연구와 역사 분석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모종의 공동의 역사 인식을 이루어야만 동아시아사의 각 역사 사건이 취한 모종의 '객관'적 인지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학술 정치화의 난관을 타개하여 역사의 진실과 역사 진실에 대한 이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탈국가사는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용될 뿐 아니라 역사 교육 중에도 스며들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역사 인식은 역사 교과서로부터 온 것이고 일부는 사회 교육과 가정 교육에서도 획득한다. 민족국가사학은 국가 구축의 도구이고 그 임무는 국가 공동체 의식 형상화와 민족주의 관념을 양성하는 것이다. 탈국가사의 교육은 국가간 상호 의지하는 인지와 공동체 의식을 양성하고《동아시아사》의 교육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과 '동아시아 시민' 관념을 키우고 공동의 문화 정체성과 신분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것은 분쟁을 줄이고 동아시아 평화로 통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① 잔더빈 : "주변에서 본 중국——한국《동아시아사》교과서 속의 당대 중국 이미지", 상하이사회과학원《사회과학》2014 년 제 10 기, p.28-36

② 쉬슈리 : "유럽경험의 중일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와 한계",《항일전쟁연구》2009 년 제 2 기. p.146

【参考文献】

著作：

1. 中日韩三国共同历史编纂委员会编著：《超越国境的东亚近现代史》（上、下），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 年。
2. 杨军等主编：《东亚史:从史前至 20 世纪末》，长春出版社 2005 年。
3. 入江昭：《全球史与跨国史-过去，现在和未来》，浙江大学出版社，2018 年。

论文：

1. Iriye, Akira (Harvard University), Excerpt from Global and Transnational History: The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ransnational American Studies* 5(1),2013.
2. 王立新：“跨国史的兴起与 20 世纪世界史的重新书写”，《世界历史》2016 年第 2 期。
3. 白永瑞、李长莉：“再造东亚史学”，《读书》2005 年 04 期。
4. 步平：“东亚历史的书写能否跨越国境——读《超越国境的东亚近现代史》”，《中华读书报》2013 年 06 月 26 日 09 版。
5. [美]入江昭：“从民族国家历史到跨国史：历史研究的新取向”，南开大学《世界近现代史研究》第四辑（2007 年）。
6. 邢承吉：“评入江昭《全球史和跨国史：过去、现在和将来》”，首都师范大学《全球史评论》第八辑（2015 年）。
7. 남택범, 2015 년 개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의 교육과정 분석: 2011 년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8. 정연,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東北亞歷史論叢》19 號（2008）。
9. 柳鏞泰,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동양사 연구 60 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歷史教育》107 輯(2008)。
10. [韩]吴炳守：“韩国对东亚史的探究冀望良好的区域秩序”，《陕西教育（行政）》2013 年第 6 期。
11. 詹德斌：“从周边看中国——韩国《东亚史》教科书中的当代中国形象”，上海社会科学院《社会科学》2014 年第 10 期，pp.28-36。
12. 徐秀丽：“欧洲经验对解决中日历史问题的启示及其局限”，《抗日战争研究》2009 年第 2 期。
13. ‘한•중•일 역사공동부교재개발’, https://www.nahf.or.kr/gnb07/snb08_04.do
14. 葛兆光：“在‘一国史’与‘东亚史’之间——以 13-16 世纪东亚三个历史事件为例”，《中国文化研究》2016 年冬之卷。
15. 滨下武志、陈奉林等：“东亚史学科建设问题鼎谈”，《世界历史评论》2019 年春季号。

후쿠오카 대학의 중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과제

안도 준코 후쿠오카대학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준교수

제 5 회 환황해 포럼 발표

후쿠오카 대학의 중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과제

안도 준코(安藤 純子)
(일본: 후쿠오카 대학)

서문

”아시아의 현관문”... 이는 대외적으로 규슈, 후쿠오카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수식어이다. 실제로 규슈, 후쿠오카는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대륙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후쿠오카시 추오구에는 7 세기부터 11 세기까지 약 400 여년 동안 견당사나 신라 사절단, 상인들을 맞이했던 영빈관 “홍려관(鴻臚館, 고로칸)”[1] 등의 유적이 있으며, 예로부터 중국, 한국과 교류해 왔다. 이는 지금도 가령 후쿠오카시와 부산처럼 지자체 간 협력이나 교류, 그에 따라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객이라는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특히 일본을 찾는 한국인 방문객이 대폭 줄었고 다양한 교류 사업이 중지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예로부터 이어져 온 교류를 단절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일 양국 정부나 한일 양국의 국민에게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비록 양국 정부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지방 차원이나 일반 국민, 특히 향후 한중일 관계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간 협력이나 교류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10~20 대 젊은이는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여행각도 증가하고 있다.[2] 이들이 한국, 그리고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접해 나갈지, 과장해 말한다면 향후 일본의 대 한국, 대 중국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이에 본 발표에서는 특히 한국과 중국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일례로 “아시아의 현관문” 후쿠오카에 위치한

[1]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헤이안쿄(교토), 난바(오사카), 츠쿠시(후쿠오카) 등 3 곳에 설치된 영빈관 중 유일하게 후쿠오카 유적만 확인되었다. 문헌상에는 688 년 ‘츠쿠시관’으로 처음 등장했다가 헤이안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풍의 ‘홍려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니혼쇼키(日本書紀)」에는 688 년 신라 국 사 전상림(全霜林)을 츠쿠시관에서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다. (후쿠오카시 공식 시티 가이드 <YOKA NAVI> https://yokanavi.com/spot/27133/, 후쿠오카시 문화재 http://bunkazai.city.fukuoka.lg.jp/). 현재 ‘홍여관’ 부지에는 전시관이 만들어져 옛 건축물 등을 볼 수 있다.

[2] <산케이신문> 2019. 06. 03.

후쿠오카 대학의 중국어, 한국어 교육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향후 바람직한 협력과 교류 자세 및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후쿠오카 대학[3]은?

후쿠오카 대학의 전신은 1934 년에 창립된 후쿠오카 고등상업학교이며, 1949 년 후쿠오카 상과대학의 설립 인가, 대학으로의 승격을 거쳐 1951 년 학교법인 후쿠오카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2019 년 올해로 창립 85 주년을 맞이하였다. 2019 년 현재 9 개 학부(상학부(1 부, 2 부), 법학부, 경제학부, 약학부, 공학부, 인문학부, 스포츠과학부, 이학부, 의학부: 창설순으로 나열) 31 개 학과와 대학원(법학연구과, 경제학연구과, 상학연구과, 약학연구과, 공학연구과, 이학연구과, 의학연구과, 인문학연구과, 스포츠건강과학연구과, 법과대학원: 창설순으로 나열)을 거느린 서일본 최대 규모의 종합 사립대학이다. 학생수는 19,755 명(학부생 19,151 명, 대학원생 604 명: 2019 년 5 월 1 일 현재), 교직원수는 4,104 명(교원 1,463 명, 직원 2,641 명: 2019 년 5 월 1 일 현재)이다. 소재지는 규슈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조난구 나나쿠마이며, 후쿠오카의 육지의 현관문인 하카타역에서 후쿠오카 시영 지하철로 약 30 분 거리에 있다.

창립 80 주년을 맞이한 2014 년, 향후 10 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구체적 시책, 전략을 제시한 “후쿠오카 대학 비전 2014~2023”을 수립하고 4 대 중점 항목을 내걸었다. 4 대 항목 가운데 국제관계, 특히 아시아에 주목한 항목이 바로 “③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의 세계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재의 육성은 대학의 중요한 임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후쿠오카의 아시아 현관문으로서의 특성을 중시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으로부터 우수한 유학생을 적극 수용하고 일본인 학생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 대학을 중심으로 어학 연수와 유학을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일본인 학생을 해외에 파견함으로써 국제적 시야와 활동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아시아의 현관문”인 후쿠오카의 지리적 장점을 살리고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자세를 천명하였다.

2. 인문학부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약칭: LA)

후쿠오카 대학이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중시”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부·학과가 바로 인문학부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4]이다.

인문학부[5]는 1969 년 창설되어 2019 년 50 주년이라는 기념비적 해를 맞이하였다. 학과 수는

[3] 상세 내용은 후쿠오카 대학 홈페이지(https://www.fukuoka-u.ac.jp/)를 참조할 것

[4] 상세 내용은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홈페이지(http://la.hum.fukuoka-u.ac.jp/)를 참조할 것

[5] 상세 내용은 인문학부 홈페이지(http://www.hum.fukuoka-u.ac.jp/)를 참조할 것

8 개 학과(문화학과, 역사학과, 일어일문학과, 교육·임상심리학과, 영어학과, 독일어학과, 프랑스어학과,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로 학생수는 2,487 명, 교원수는 136 명이다.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이하, LA)는 인문학부 중에서는 가장 새로운 학과로 1999 년에 창설되어 올해로 20 주년을 맞이했다. 1 학년 정원은 금년도부터 65 명(작년까지는 60 명)이며 현재 1~4 학년(4 년차 이상 재학 유급자 포함) 269 명이 재적 중이다. 대학원으로 인문학연구과가 있는데 LA 전공 분야의 대학원은 없다. 남녀비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학생 8 : 남학생 2 정도로 통상적으로 9 : 1 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남학생들에게는 우스개소리로 "너희들은 LA 에 없어서는 안되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니 여자들 등살에 못 이겨 퇴학 같은 거는 하지 않도록 힘내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코스는 LA 창설 초창기부터 중국 코스, 한국 코스 등 2 개 코스가 있고, 2 년차부터 각 코스별로 소속이 정해진다. 전임 교원은 중국 코스 5 명, 한국 코스 4 명으로 총 9 명이다. 각 코스에 1 명씩, 중국국적 및 한국국적의 교원이 있다.

LA 의 학생들은 1 년차에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중국어와 한국어 양쪽 모두를 배우게 되어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필수 수업(일부 선택 필수이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필수)은 1 과목 90 분 수업을 주 4 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어·한국어를 합쳐 1 주일동안 8 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 외에 필수 수업으로 "중국 사정 개설", "한국 사정 개설" 등 한중 각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배우는 강의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수업을 수강한 후, 1 년차 가을학기에 2 년차부터 소속 코스를 선택하게 된다.

코스별 학생 비율은 2~4 년 모두 중국 코스, 한국 코스, 각각 약 50 : 50 이다. 입학 직후에 1 학년 전체와 교원들은 "대면식"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흥미, 그 중에서도 K-pop 이 좋아 LA 를 지망했다고 발언, 중국에 관심이 있어 LA 에 지망했다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 년 가까이 중국어나 중국 관련 기초지식을 배운 후에는 "중국어가 재미있다", "중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학생이 일정수 생겨나므로 2 년차에 코스별로 나눌 때에는 한중이 각각 절반의 비율을 이루게 된다. 여담으로 학생들은 자기 소개 시에 좋아하는 K-pop 그룹 또는 가수명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령 "방탄소년단"처럼 유명한 그룹은 차치하고, 전혀 모르는 그룹명(게다가 매년 새로운 그룹명이 나옴)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교원들은 유행을 못 따라가고 멍하고 있을 때가 많다. 또한 이는 한반도와 가까운 후쿠오카라는 물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부모와 본인을 포함해 재일 코리안, 한일 혼혈인 학생이 매년 몇 명씩 입학한다. 그들은 자신의 뿌리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LA, 그리고 한국 코스를 지망한다.

다만, LA 창설 초창기부터 재직한 교원에 따르면, 창설 당시부터 몇 년간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중국 코스를 희망했다고 한다. LA 가 창설된 1999 년은 그 바로 전 해인 1998 년 10 월 오부치 게이조(小渕 恵三)와 김대중 두 정상이 "21 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천명하면서 한일간 밀월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나, 일본내에서는 아직 "제 1 차 한류붐"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여전히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그러한 풍조를 반영해 한국 코스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야 코스로 성립시키기가 어려우므로 한국 코스 교원들이 몇몇 학생들에게 "앞으로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해 두면 도움이 될 때가 올 것이다", "한국은 흥미롭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지 내켜 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반 억지로 한국 코스로 끌여 들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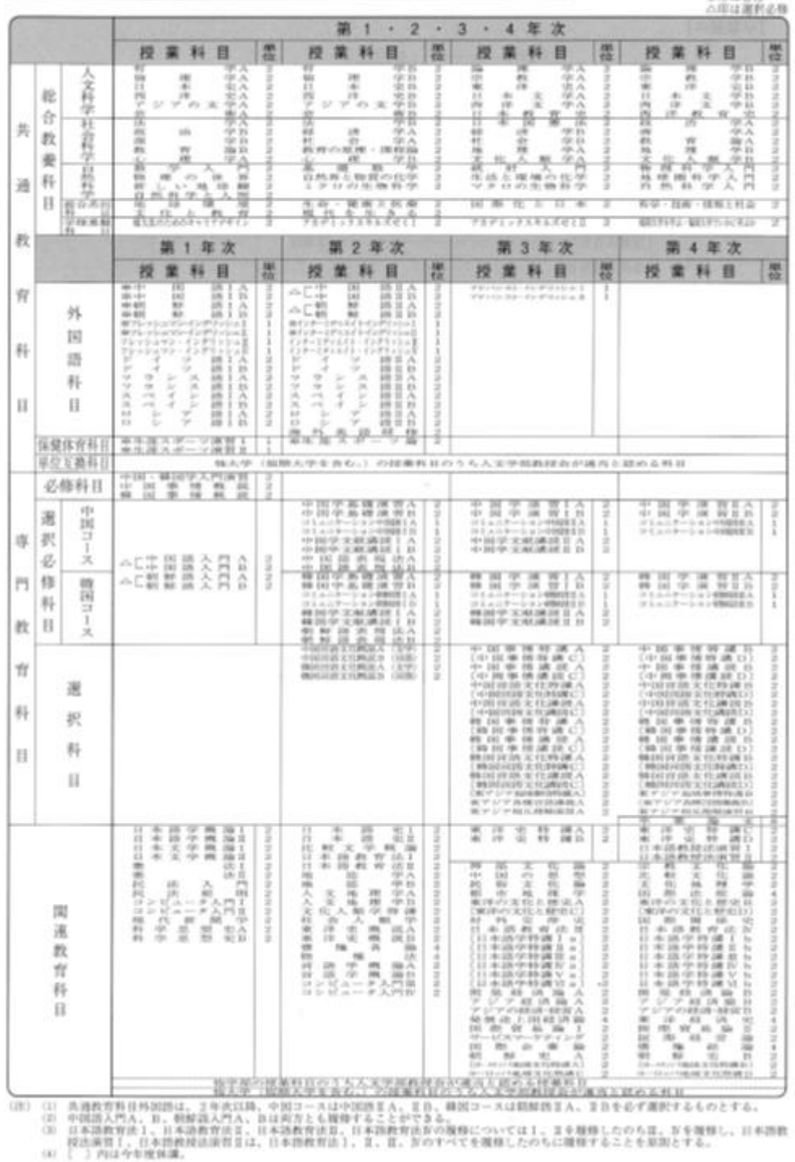
최근에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또 대학생 연령에 상당하는 세대의 경우, 그 부모가 한국을 좋아하거나 K-pop, 한국 드라마, 요리, 패션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란 세대인 탓인지, 어릴 적부터 한국에 흥미를 갖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는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독학으로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중국 코스를 선택해 한국어와 중국어 양쪽 모두가 가능한 "바이링걸(bilingual)"을 지향하는 학생들도 있다. 한편, 한국 코스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한국에 흥미가 있어 처음부터 한국 코스만 생각했다", "중국어를 배우다가 어려워서 좌절했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국 코스 학생들 중에는 중국어와 한국어 양쪽 모두 가능한 학생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한국 코스의 학생들은 한국어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각 코스에 소속된 2 년차 이후에는 코스별로 개강 과목을 수강하고, 3~4 년차에는 여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한국 코스 소속이라고 해서 중국 코스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양 코스의 과목을 수강 가능하며, 학생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한중 양국의 전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다. LA 의 학생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 및 선택 가능한 개강 과목은 아래 표[6]와 같다. (또한 2020 년도 이후, 커리큘럼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수업 시간 및 수업 시수, 수업 내용이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6 후쿠오카 대학 <2019 년도 학습 가이드 인문학부> p. 263.

연차별 수업과목표 (학과 이수 규정 제 4 조 별표)

인문학부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 2019 년도 입학생(LA 19 대)



第 1 ・ 2 ・ 3 ・ 4 年次

		授業科目	単位	授業科目	単位	授業科目	単位	授業科目	単位
共通教育科目	総合教養科目	人文科学							
		社会科学							
		自然科学							
	保健体育科目								
	単位互換科目								

		第 1 年次		第 2 年次		第 3 年次		第 4 年次	
		授業科目	単位	授業科目	単位	授業科目	単位	授業科目	単位
専門教育科目	外国語科目								
	必修科目								
	選択必修科目 中国コース								
	選択必修科目 韓国コース								
	選択科目								
	関連教育科目								

(注) (1) 共通教育科目外国語は、2 年次以降、中国コースは中国語ⅡA、ⅡB、韓国コースは韓国語ⅡA、ⅡBを必ず選択するものとする。
(2) 中国語入門A、B、朝鮮語入門A、Bは両方とも履修することができる。
(3) 日本語教育法Ⅰ、日本語教育法Ⅱ、日本語教育法Ⅲ、日本語教育法Ⅳの履修については Ⅰ、Ⅱを履修したのちⅢ、Ⅳを履修し、日本語教授法演習Ⅰ、日本語教授法演習Ⅱは、日本語教育法Ⅰ、Ⅱ、Ⅲ、Ⅳのすべてを履修したのちに履修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4) [ ] 内は今年度休講。

"동아시아지역언어학과"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은 어학 관련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 "특강"과 "실습"을 통해 그 외의 분야를 배우게 된다. 학생들 대부분의 니즈도 "어학"의 습득에 있으나 어학 스킬만 습득하고 싶다면 굳이 대학에 올 필요가 없으며, 중국 및 한국 관련 폭넓은 지식의 습득이나 시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학은 단순한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공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학생의 흥미 관심이 어학 이외의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그로부터 폭을 넓혀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교원의 전문 분야가 약간 편향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일 관계, 한일 관계, 한국 문학 등 재적 교원의 전문분야의 폭이 넓어지면서 "특강"이나 "실습"의 내용도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를 통해 입학 당초, 어학에만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도 "특강"이나 "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배우고 또 최근 중일 관계의 개선, 미중 무역마찰, 홍콩 데모, 한일 관계의 악화, 남북·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핵실험·발사체 발사 등 일상적 뉴스를 접합으로써 다소나마 시사 문제나 그 배경 역사 등에 조금씩 흥미를 가지게 된 듯하다. 필자의 수업에서는 주로 한일 및 북일 관계를 테마로 다루며 2 학년이 3 년차 이후 "실습=세미나"를 선택할 때 참고하게 되는 "세미나 소개"에서 그러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한다. 그럼에도 매년 필자의 세미나를 희망하는 학생이 일정 수 존재하며, 실제로 세미나에서 한일 문제를 테마로 논의를 시켜 보면,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서투른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정치나 외교 등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다.

또한 작년도부터 새로이 개강한 "동아시아 상호 이해 실습 A, B"라는 강의가 있다. 이 강의는 LA 뿐만 아니라 타 학과·타 학부 학생도 수강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필자는 "A"를 담당하고 있다. 타 학과·타 학부 학생 중에는 오히려 LA 학생보다 한일 관계에 흥미나 관심이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러한 학생들은 타 학과·타 학부 전공이라는 점에서, 즉 제 3 자적 시점에서 한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논하므로 심층적 내용의 발표나 논의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해당 과목이 개설된 초창기에는 유학생의 수강을 염두에 두고,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 쌍방의 "이문화 이해","이문화 커뮤니케이션"도 기대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2 년간 유학생 수강은 전무하다.

유학생의 강의 수강에 대해 말하자면, LA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한국인 유학생이 매년 몇 명 정도 있다. 필자가 지난 학기에 담당한 수업 중 3 개 과목에 유학생 수강자가 있었다. 한국인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차이는 뭐니뭐니 해도 적극성이다. 한국인 유학생은 대체로 앞자리에 앉아(일본인 학생은 뒷자리부터 앉기 때문에 맨 앞 2~3 줄은 비어 있음), 교원이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구하면,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에 이끌리듯 일본인 학생들은 시간차를 두고 손을 드는 패턴이 통상적으로 개강 초기에 반복된다. 그러나 강의 회수가 거듭될수록 한국인 유학생의 적극성이 전염된 것처럼 몇몇 일본인 학생들이 적

극적으로 손을 들게 된다. 한국인 유학생의 적극성은 일본인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3. LA 의 독자적 국제 교류나 행사, 수업 이외의 어학 학습

대학이 주체가 되는 국제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LA 가 학과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제 교류·행사나 강의 이외의 중국어 및 한국어 학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스피치 콘테스트＞

LA 1, 2 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12 월에 실시한다. 명칭은 "스피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암송" 콘테스트이다. 교원이 과제문(B5 1 장 정도의 분량)을 제시하면, 필수 중국어·한국어 수업에서 전원이 연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학생 투표를 통해 대표 5 명을 선출한다. 그 5 명이 1 명씩 과제문을 암송하고 외부 심사원 2 명(주로 중국어·한국어를 가르치는 비상근 네이티브 교원)과 학생이 심사해 최우수상, 우수상, 학생상을 선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품도 부여된다.

먼저 소개한 바와 같이 LA 1 학년은 중국어·한국어 양쪽 모두를 배우므로 혼자서 두 언어의 대표로 선출되는 학생도 있다. 이 콘테스트의 목적은 중국어·한국어 리듬에 익숙해지고 발음 체크,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훈련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길이의 외국어 문장을 발음에 주의하면서 암송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듯하다. 다만, 선출 인원수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능숙한 학생들 앞에서 발음이나 암송 자체에 주눅이 들어 일찌감치 포기하는 학생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영화 자막 발표회＞

중국 문화·중국어를 전공한 중국 코스 교원이 10 년 전부터 시작한 행사이다. 자막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중국 단편 영화에 일본어 자막을 다는 작업인데 해 보고 싶어하는 학생을 모집해 강의시간 외에 교원과 학생, 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졸업생, 중국인 유학생이 참여해 작업을 한다. 작년부터는 일본 단편 영화에 중국어 자막을 달아 발표하는 활동도 시작했다.

이 작업은 4 월 신학기부터 시작해 9 월에는 후쿠오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홀에서 발표를 겸한 상영회를 연다. 학점 취득 대상 과목은 아니므로 정말로 중국어나 중국 영화에 흥미가 있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만 모여 교원이나 유학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착실하게 작업을 한다. 작년에는 새로이 중국어 전공 중국인 교원이 부임해 더욱 정확하게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의 뉘앙스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국어 표현 능력의 향상이라는 점 이외에 참가 학생들 간에 연대감이 생겨나는 효과도 있다.

＜제 11 회 자막제작 성과 발표회 홍보 포스터＞

제 11 회 후쿠오카대생 동아시아 영화자막 제작 성과 발표회

입장무료, 예약 불필요

2019 년 9 월 28 일(토)
13:00~15:45(12:45 오픈)
후쿠오카 덴진 다이마루 엘가라 홀

7 층 다목적 홀



중국 코스 담당 교원들로부터 '한국 코스도 마찬가지로 한국 영화에 자막을 넣어 한중 합동 발표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한국 영화는 일본어 자막이 붙어 있는 작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나 실상은 교원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LA 의 교원수는 대학생 대비로 따지면 인문학부 중에서 가장 적고, 이 때문에 교원 1 인당 담당 수업 시수가 많은 데다가 학내 행정 부담도 크다. 게다가 최근 대학들은 대학 행정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 지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주소이다. 한국 코스의 학생들로부터 '한국 코스도 영화 자막을 해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교원들 사이에서는 향후 교원 증원이나 업무 부담 경감이 이루어진다면 실시도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국어 탠덤(tandem) 학습＞

중국 광저우 대학 외국어학원이 실시 중인 프로젝트로 LA 는 금년도부터 참가했다. 광저우 대학 및 후쿠오카 대학 학생(희망자만)들 2 명이 1 조를 이뤄 일본어·중국어 학습 뿐만 아니라 서로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 후쿠오카 대학 학생들에게는 같은 세대의 네이티브와 교류함으로써 최신 유행이나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가르쳐 주는데 '즐겁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중국인 학생의 일본어 능력에 비하면, 후쿠오카 대학생들의 중국어 능력은 초급에서 중급 레벨자가 많기 때문에 중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딘지 조금 부족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매회 시간을 정해 실시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맞지 않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는 그룹도 있는데, 초년도이므로 계속해서 궁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 탠덤 학습의 진행방법

＜강연회 및 연구회＞

주로 한국인 교원이 주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강연을 하거나 연구자로만 이루어진 연구회를 실시한다. 금년도는 KF(한국국제교류재단)와 케이오기주쿠 대학이 실시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 6 월 일본 최고의 한반도 연구자인 니시노 준야(西野 純也) 교수님의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최근 한일 관계를 테마로 한 내용으로 유학생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일본인 학생들도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 10 월에는 연세대의 김항 교수님이 "타자(他者) 없는 민주주의-현대 한국의 장기 민주화와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은 외부 홍보도 실시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회는 연구자만 출석하는데 LA 교원 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에 홍보해 관심 있는 타 학과·타 학부 교원도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 한정이었지만 머지않아 이 포럼처럼 한중일 3 국의 연구자, 관계자가 모이는 포럼이나 심포지엄을 개최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국문학 독후감 콘테스트 및 시상식·기념 강연회＞

한국문학번역원을 주체로 주최를 희망하는 대학이 사무국을 맡아 진행되는데, 작년에는 후쿠오카 대학 LA 가 사무국을 맡아 실시하였다. 동 번역원이 공동 개최자이고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작년에 10 회를 맞이했다. 콘테스트 내용을 살펴보면 4 권의 과제 도서를 지정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전국으로부터 독후감을 모집, 외부심사위원이 심사해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을 선출한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도 한국문학이 인기를 끌면서 특히 『82 년생 김지영』은 일본에서도 여성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LA가 콘테스트 주최를 희망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문학을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한국문학 전공 교원의 강의나 공통 교육 과목인 "아시아 문학"에서 한국문학을 소재로 강의를 하기는 하나 스스로 책을 읽는 습관이 거의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므로, 어떠한 행사와 '상품'이 제시된다면 조금은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응모자 중 후쿠오카 대학 재학생 '전무'라는 참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고 당연히 수상자는 모두 대학 외부 사람들이었다.

콘테스트 시상식 때 과제 도서였던 『7 년의 밤』의 작자, 정유정 작가가 강연 차 일본을 방문했는데, 출판사에 부탁해 후쿠오카 대학에서 기념 강연과 사인회를 실시했다. 기념 강연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가해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향후 재차 콘테스트를 주최할지 어떨지는 미정이나 그 전에 어떻게 든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원들의 절실한 희망이다.

<교류회 실시>

매년 후쿠오카 대학을 방문하는 1~2 개 학교(주로 협정을 맺은 대학)와 LA 학생간 교류회를 실시한다. 각 대학 학생의 연구 발표, 양 대학생을 섞어 그룹으로 나눈 후 퀴즈 형식으로 한일 사정 관련 지식을 배우는 등 공부를 겸한 교류, 쌍방 교원의 강연이 주된 내용이다. 그 후 식사모임(회식) 교류나 다음날에는 LA 의 뜻있는 학생들이 후쿠오카 시내를 안내하기도 한다. 특히 LA 의 학생들은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 후쿠오카 대학에는 한국 유학생도 있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학생이 강의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점잖은' 일본인 학생들은 나서서 유학생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드물다. 친구가 되거나 어학을 배우는데 유학생과의 교류가 큰 플러스로 작용하리라 생각하면서도 먼저 나서지 못하고 결국 '선생님이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교류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서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교류회는 '그때 뿐'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끼리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지 않는 한 하루나 이틀 '즐거웠다. 한국어도 좀 했다'는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소이기도 하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교생 교류회를 실시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의 대학이 아닌 곧바로 일본의 대학에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들이 후쿠오카 대학도 견학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LA 가 받아들였다. 고교생들이 능숙한 일본어로 발표를 하고 LA(1, 2 학년)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그룹을 만들어 얘기를 나누고 캠퍼스를 안내하기도 했다. LA 학생들은 '형이나 오빠, 누나나 언니'가 된 기분으로 학습해 온 한국어를 사용해 대학을 설명하기도 하는 등 좋은 경험이 되는 듯하다. 올해에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측에서 올해는 중지하겠다는 연락이 있었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수용하는 측에 서서 실시해왔는데, 올해 9 월 거의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LA 학생이 상하이를 방문하는 교류회를 실시했다. 중국인 교원의 소개로 상하이 재경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했고, 그에 맞춰 중국 코스 교원들과 참가를 희망한 학생들이 3 박 4 일 일정으로 상하이 재경대학교를 방문해 교류를 실시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후쿠오카에서의 교류도 물론 좋은 경험이지만 중국이나 한국을 방문해 실시하는 교류는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번 상하이 방문을 계기로 교원들 사이에서는 '중국, 대만, 한국을 돌며 실시하는 교류회'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를 실시할 때 최대의 장애물이 바로 자금 문제이다. 후쿠오카 대학에서는 학생의 해외 방문에 대한 금전적 원조가 거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학생 자기부담이다.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는 외부 자금 등을 활용해 학생의 자기부담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4. 유학과 '유학생과 룸 쉐어'

LA 학생과 타 학과 학생의 큰 차이는 LA 의 경우 교환 유학생이 많다는 점이다. 교환 대학은 대학간 협정을 체결한 대학과 학부간 협정을 체결한 대학 양쪽 모두 있으며, 2019 년 현재 중국·대만 21 개 학교, 한국 18 개 학교와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교환 유학은 2 년차부터 인정되는데 3 년차의 1 년간 혹은 반년동안 유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LA 학생에게 국한하면(분기만 /및 인정 유학 포함), 금년도 33 명(중국·대만 12 명, 한국 21 명)이 유학중이며, 3 학년 학생수는 중국 코스 26 명, 한국 코스 32 명이므로 특히 한국 코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유학중이라는 셈이다.

교환 유학을 경험하고 온 학생은 1 년 후, 4 년차에 복학하게 되는데 학생 대부분이 어학능력이 향상되고 그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듯해 어학 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의 태도나 적극성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여행으로 며칠간 방문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현지 생활을 통해 중국·대만, 한국의 다양한 면을 알게 되어 오히려 객관적 견해를 키우게 되는 듯하다. 네이티브 친구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학생들도 많으니 그야말로 젊은 친구들이기에 가능한 것이리라.

교환 유학은 후쿠오카 대학에서 협정 체결 대학에 파견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협정 체결 대학으로부터 학생들(유학생)을 받고 있다. 수용 주체는 LA 가 아닌 대학이므로 유학생의 소속학부는 다방면에 걸친다. 이 때문에 유학생이 LA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한 교류할 기회가 없다. 유일하게 학부간 협정 체결 대학으로부터 와 있는 한국인 유학생(1~3 명)은 실질적으로 LA 에서 받아들였고, 이들을 LA 1, 2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의(필수)에 조교로 고용해 수업 보조를 받고 있다. 이는 일본인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 유학생과의 교류, 유학생에 대한 금전적 보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히 교류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유학생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적 효과가 향상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 향후 검토 과제이다.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교류라는 점에서는 4 년 전부터 인문학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학생과 룸 쉐어(츠츠미 단지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UR 도시기구(이하, UR)와 후쿠오카 대학이 계약을 맺고 UR 이 관리하는 단지의 집 몇 개를 빌려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7] 인문학부라고는 하나 업무(학생의 모집, 유학생 수용, 집 배정과 생활 관리, 단지 자치회와의 연락이나 교류 행사)를 담당하는 것은 주로 독일어학과, 프랑스어학과 및 LA 이고 모집 학생은 인문학부의 전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희망 언어에 따라 집을 배정한다.

현재, 계약한 집의 수는 5 개이며, 각각 2~4 명의 일본인과 유학생이 1 개의 주거에서 공동

[7] UR 규슈지사의 대학 연계의 경우, 후쿠오카 대학 외에 후쿠오카 여자대학, 나카무라학원대학에서도 실시중

생활을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교류”와 “지역 공헌”이라는 2 가지 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 학생이 유학생을 지원하면서 생생한 외국어와 국제 감각을 익히고 넓은 시야를 획득하며, 한편 유학생은 일본인 학생이나 지역 주민과의 생활을 통해 일본을 더욱 깊게 이해한다. 또한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단지의 행사에 참가해 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에 공헌한다는 목적도 있어, 실제 단지 자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 일반 시민과의 교류를 도모한다. 고도 경제성장기, 많은 이가 꿈꾸던 이 “단지”는 현재 거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츠츠미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일까, 젊은 학생들이 단지에 입주해 단지의 행사에 참가, 교류하는 활동에 대해 특히 고령의 거주자들이 비교적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1 년에 1 번, 단지 자치회의 후원으로 단지 자치회가 “국제 교류의 날”을 제정해 교류회를 개최해 주는데, 그곳에서는 유학생이 자신들의 출신국가나 대학을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하기도 하며 이는 매우 호평을 얻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매우 드물게 생활비 분담이나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교원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케이스가 있다. 또 일본인 학생과 유학생의 교류도 목적 중 하나인데, 일본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4 년동안 결정적으로 틀어지거나 하는 케이스는 없다. 오히려 유학생이 귀국한 후에도 친구처럼 계속 관계가 이어지거나 유학을 하지 않고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6 급을 취득할 정도로 어학능력이 향상된 학생도 있다. 올해에도 LA 중국 코스의 학생이 중국인 유학생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학생에게 생활이 어떻냐고 물으면 “엄청 즐겁습니다!”라며 웃으며 바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 비교적 순조롭고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실감하는 바이다.





(출처: UR 정보지 <푸른 하늘> 2018 년 12 월호, Vol. 224)

5. 타 대학이나 자치체의 사례

＜부산-후쿠오카 8 개 대학 교류 프로그램＞

후쿠오카와 부산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경제계, 도시간 협력·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협력·교류의 움직임은 대학 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후쿠오카 대학이 참여한 최근의 사례로는 작년에 실시한 “부산-후쿠오카 8 개 대학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2008 년, “부산-후쿠오카 대학간 컨소시엄”의 창설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특별히 어떠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된 지 10 년이 되던 작년 2018 년, 부산의 동서 대학으로부터 규슈 대학에 컨소시엄을 본격적으로 시동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실시에 즈음해 우선은 소규모에서 시작했는데, 후쿠오카-부산으로부터 각각 4 개 대학이 참가하고 후쿠오카 대학도 참가했다. 참가 대학의 경우, 일본측은 규슈 대학, 후쿠오카 대학, 후쿠오카 여자대학, 규슈 산업 대학, 부산측은 동서 대학, 부산 대학, 동아 대학, 부경대이다.

규슈 대학과 동서 대학이 각각 간사를 맡고 2 개 대학이 중심이 되어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면서 5 월 후쿠오카에서 8 개 대학 학장 회의를 실시,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구하자”라는 점에서 교류 프로그램의 실시가 정해졌다. 기본적으로 간사 역할을 맡은 2 개 학교간 협의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타 대학이 협력하는 형태가 취해졌다. 정확히 9 월 1 일에 부산에서 후쿠오카시와 부산시의 산학계 리더의 제언기관 제 13 차 “부산-후쿠오카 포럼” 회합이 열린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도 참가해 학생들도 제언을 했다. 프로그램 개요를 살펴보면, 일정은 1 주일 정도(8 월 26 일 ~9 월 2 일)로 각 대학으로부터 2~3 명의 학생을 모집해 전반은 후쿠오카, 후반은 부산에서 한일 양국과 관련된 장소를 돌아 다니며, 한일 교류의 역사와 향후 협력에 대해 학생들이 논의를 하고 포럼에서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한일 협력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참가자는 학생 18 명(후쿠오카 11 명, 부산 7 명)과 담당자 5 명이었다.

우선은 후쿠오카에서 한일 경제 교류의 현황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듣거나 다자이후(太宰府),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는 시설이 있었던 아이시마(相島), 명란젓 업체를 방문하고, 부산에서는 조선통신사 역사관이나 르노 삼성, 부산항을 견학, 그 후 학생들은 역사와 경제로 나뉘어 논의하면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한 제언을 정리했다. 그리고 드디어 9 월 1 일 “부산-후쿠오카 포럼”에서 시간을 할애 받아 학생들이 각각 일본어·한국어로 제언을 발표했다. 산학계의 리더라는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이야기는 엉뚱한 내용으로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학생이기에 가능한 발상이나 발언도 있었을 것이다.


西日本新聞

제 13 차 후쿠오카–부산 포럼

国境を越えた連携へ“実践”

大学間協力

8大学でサマースクール ■ 若者に投資を ■「日韓海峡圏学」創設

(출처: <서일본 신문> 2018 년 9 월 15 일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국에 대해서는 막상 잘 알지 못한 채 자국의 가까운 곳에 한일과 관련된 역사나 협력의 장이 있음을 새로이 발견한 것, 역사나 경제라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에 대해 논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자 한 것, 상호 협력해 제언을 정리하는 등 값진 경험이 된 듯하다. 다만, 언어 면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 측면이 있어 거의 일본어로만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일본인 학생, 또 지도하는 교원 입장에서 향후 큰 과제이며 커다란 자극을 받았다.

프로그램의 취지나 내용은 규슈 대학과 동서 대학 덕택에 매우 유익했고,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지만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반성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프로그램 실시가 정식으로 결정된 후 실시되기까지 그다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도 하거니와 일본측과 한국측이 완벽한 의사 통일을 보지 못했고, 또 대학별 사정으로 인해 참가 여부나 열의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사정들이 끝까지 해소되지 못한 채 프로그램 종료 후로 예정되어 있던 반성회를 겸한 회의나 향후 방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올해는 실시하자는 의견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8 개 대학이 정식으로 포럼을 창설하고, 그 후에는 각각의 교원을 파견해 강좌를 실시하는 썸머스쿨을 실시하는 등을 통해 실적을 쌓아 장래적으로는 참가 대학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 이야기 또한 전혀 진전이 없다.

또, 학생들이 제언한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올해에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 월 13 일 연기가 결정되었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영향 탓인지 부산 측으로부터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멤버들이 불참하겠다는 의향을 전해 최종적으로 양 시의 사무국이 상의 끝에 연기하기로 했다.

후쿠오카 대학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규슈 대학, 서울대, 부산대, 하와이 대학이 주관이 되어 '국제 체험형' 공동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아시아 태평양 칼리지" 등 한일 양국 대학의 교류나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의 만족도 또한 높다.

끝으로

이상 후쿠오카 대학 및 LA 의 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그 중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교류'이다. 학습한 중국어·한국어의 성과를 살려 보고 싶은, 순수하게 어학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통했다'는 기쁨은 커다란 자신감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교류 상대가 같은 세대라면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경우도 많고, 또 각국의 유행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사정"을 서로 나누면서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흥미·관심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 학생은 일반적으로 얌전하고 적극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교류회를 실시하더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된다"는 학생이 대부분, 당연히 개인차는 있으나 교류가 궤도에 오르거나 친구 관계로 발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가 많은 듯하다. 따라서 대학은 교류회를 실시할 때 처음부터 대규모 인원이 아닌 소수정예로 며칠에 걸친 교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 한일 관계로 눈을 돌리면 정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한일 관계의 악화는 젊은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쿠오카 대학을 예로 들어 말하면,9월부터 올 예정이었던 한국인 유학생이 유학을 포기했고, 내년 3월 후쿠오카 대학에서 협정 체결 대학에 파견할 예정이었던 학생이 유학을 단념했다. 그 밖에도 작년 교류회를 실시한 고등학교와 대학 또한 올해는 일본에 오지 않는다. 모두 "학부모의 반대"가 그 이유인데, 부모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양국 모두에 일부 과격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나 국민 차원에서 상대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적어도 필자 주변에는 험한 데모나 한국 제품 불매운동도 없고, 대놓고

한국과 한국인을 욕하는 사람도 없다. 대학은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교류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이는 일반 시민·국민도 마찬가지이며 당연히 한국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부모의 걱정'에 불을 붙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일부 매스컴의 과장되고 편향적인 보도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그 정보를 믿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의심은 의심을 부르게 된다. 그 결과, 유학을 하고 교류를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어 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한다. 그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리라.

위와 같은 개인 차원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교류도 영향을 받고 있다. 후쿠오카의 경우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연기되었고 몇몇 지자체는 교류 사업이나 행사, 직원 파견 중지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 한국 지자체가 "전범 기업"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노력 의무를 마련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인 듯하다. 이번 포럼의 주최자인 충청남도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 검토를 이유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9 월에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들었다. 한국에는 한국의, 의원의, 그리고 지자체의 사정이 있어 일본에서 볼 때 '반일(反日)'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 듯한데, 이를 보고 듣는 일본 국민은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을 좋아하고 자주 한국을 찾으며 한국인 친구가 있고, 한국과 친밀하지 않았던 세대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없고 '정치와 개인의 관계는 별개'라고 확실히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학생들조차 "No ABE", "BOYCOTT JAPAN"나 조례 제정(한국인이 아무리 일본국민이 아닌 일본정부·아베 정권에 대한 데모라고 말해도)에 대해서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든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국을 이해하는 젊은이들 사이에도 한국 기피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후쿠오카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한일, 중일 등 양국 대학간 교류와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지자체간 교류도 양국간 자매도시나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중일 3 국간 교류·협력이 의외로 적다. 한중일은 때로는 정치적으로 대립할 때도 있지만 지리적·역사적으로는 가까운 관계이고 경제적 관계도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으로서 향후 한국·일본·중국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3 국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대학 차원에서도 가능한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하며 지자체에도 협조를 요청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가령 '부산-후쿠오카 8 개 대학 교류'에 후쿠오카나 부산 같은 중국의 지방도시대학이 참여하고, 나아가 각각의 도시 지자체가 협력하는 프레임은 불가능할까?

3 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차세대 리더가 될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장래 산업계, 학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로서 활약할 때, 젊은 시절에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는 문제 발생 시 해결로 이끄는 유용한 툴이 될 것이다.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번영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청장년 창업, 취업) 활성화

좌 장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관리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 부소장
요코야마 겐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토 론 **전향란**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 산업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이덕재*

1. 서론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학적 변화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물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많고 복잡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학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는 사람들의 기대수명을 늘렸을 것이며 빠르게 늘어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출산-양육-교육 등 지체된 사회복지제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미친 변수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가 이처럼 보편적인 특성을 띄긴 하지만 특히 한·중·일과 같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나라들에서 매우 뚜렷하다. 아마 그동안 이 세 나라에서 뚜렷하게 경험한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가 이와 깊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변동은 자본축적의 운동과 리듬에 보다 더 긴밀하게 종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적 공통점 및 지리공간적 근접성 때문에 주로 문화, 역사, 정치, 군사, 안보, 경제 및 산업 등의 측면에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오늘은 시론적이긴 하지만 산업구조변화와 같은 거대한 구조변동이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갖는 연관성, 그리고 이것이 향후 세 나라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적 방안의 시사점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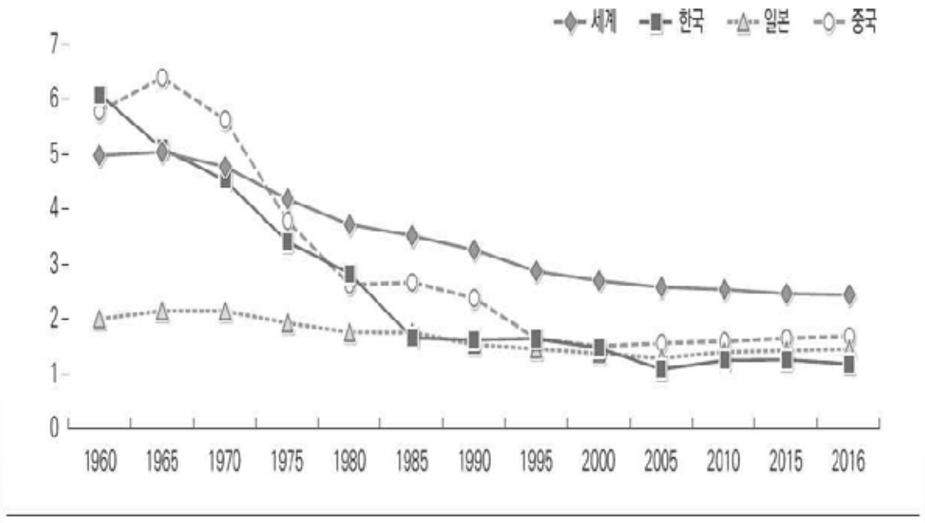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3국의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 경제의 서비스화를 중심으로 이 현상의 이면을 살펴본다. 이러한 산업구조변동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러한 변동이 초래하는 과제 및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의 필요조건 등을 논의한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condjlee@hanmail.net

2. 한·중·일 저출산·고령화의 몇 가지 패턴

우선 한·중·일 세 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1〕은 1960년에서 2016년까지 56년 동안 한·중·일 세 나라에서 진행된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른 시기에 산업화를 경험한 일본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산업화의 안정적 성숙도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 및 탈산업화의 충격을 저출산 현상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의 드라이브가 추진된 한국의 경우 산업화의 힘이 정점에 이르는 198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대단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하락 속도는 1980년대 초중반부터 크게 둔화되면서 일본의 궤적과 거의 일치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중국도 유사한 궤적을 보이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흐름에 합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3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세계평균보다 낮아진 이래 지속적으로 평균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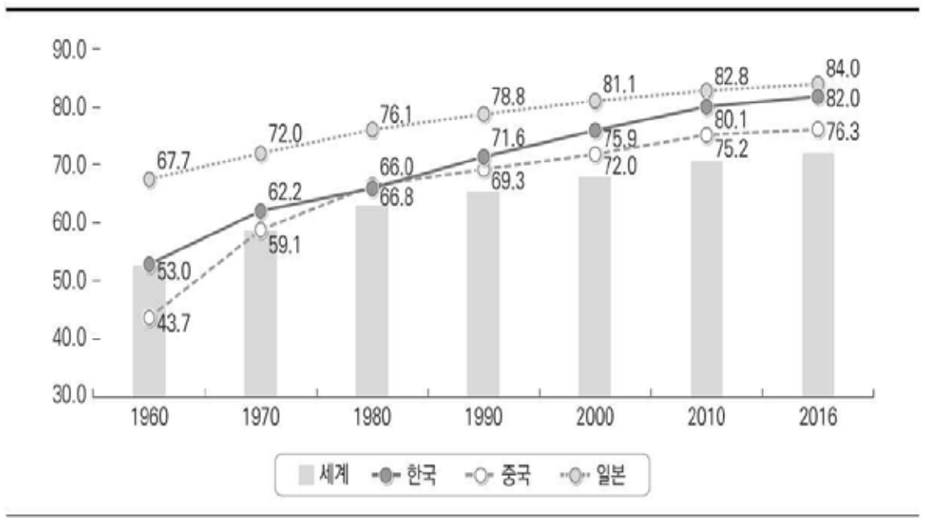
[그림 1] 한·중·일 합계출산율 추이(1960-2016)



출처: 이강호(2018: 72)

한편, 의학기술의 발달 및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한·중·일 3국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화 현상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를 보면 일본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1960년부터 세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한국은 1970년에 중국은 1980년에 세계 평균을 웃돌기 시작하면서 2016년 현재 3국 모두 80세 안팎의 높은 기대수명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60년 한국과 중국이 각각 53.0세 및 43.7세에서 82.0세 및 76.3세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 2] 한·중·일의 평균 기대수명 추이



자료: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DVD Edition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출처: 이강호(2018: 72)

<표 1>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국가	1950년	1975년	2005년	2025년	2050년
서유럽	**10.6**	**14.1**	**17.2**	**22.4**	**26.2**
독일	9.7	14.8	18.9	25.1	28.4
영국	10.7	14	16.1	19.4	23.2
프랑스	11.4	13.5	16.5	22.6	27.1
동북아시아	**4.1**	**5.3**	**12.3**	**20.8**	**31.2**
일본	4.9	7.9	19.9	29.7	35.9
한국	2.9	3.5	9.3	19.3	34.2
중국	4.5	4.4	7.6	13.4	23.6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select variant: medium
출처: 신성호(2012: 4)

이러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인구의 비율을 빠르게 끌어 올렸다.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서유럽의 경우 1950년에

10.6%였으나 2025년 현재 22.4%로 2배 증가한데 그쳤다. 그러나 한·중·일의 경우 1950년에 불과 4.1%에 지나지 않던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에는 20.8%로 거의 5배로 증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속도가 2050년이 되면 완만하게 증가하는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중·일의 경우 30%를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특히 위의 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34.2% 및 35.9%로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러한 급속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고령사회로의 속도를 빠르게 당기고 있다. 아래의 〈표 2〉는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혹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각각 걸리는 시간을 서유럽 선진국들과의 대비를 통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확연히 알 수 있듯이 한·중·일 세 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표 2> 초고령사회 도달 시기(년도)

국가	고령화➡ 고령 (7퍼센트) (14퍼센트)	고령 ➡ 초고령 (14퍼센트) (20퍼센트)	고령화➡ 초고령 (7퍼센트) (20퍼센트)
유럽	67 년	43 년	110 년
독일	(1932) 40 (1972)	37 (2009)	77
영국	(1929) 46 (1975)	51 (2026)	97
프랑스	(1864) 115 (1979)	41 (2020)	156
동북아시아	22 년	10 년	32 년
일본	(1970) 24 (1994)	11 (2005)	35
한국	(2000) 17 (2017)	9 (2026)	26
중국	(2001) 25 (2026)	10 (2036)	35

※ ( ): 고령화, 고령, 또는 초고령 사회 도달 년도

출처: Japan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www.ipss.go.jp); 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출처: 신성호(2012: 4)

예컨대 유럽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평균 6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는 43년이 걸린 반면 한·중·일 3국 평균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3~4배 빠르다.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기간 역시 서유럽 3국이 110년이 걸렸다면 한·중·일 3국은 32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3.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의 서비스화[2)]

2) 3절과 4절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이덕재(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발췌한 것임을 밝힘.

우리는 한·중·일 3국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급속한 인구구조변화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탈산업화라는 산업구조 변동과 연관하여 살펴보자.

아래의 <표 3>은 제조업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을 기점으로 전후 1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제국들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은 -8.0%p로 가장 크다. 제조업 고용비중도 비교 국가들 중 19.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대만과의 비교는 눈에 띄는데 전형적인 후발산업화 국가인 대만의 경우도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이 -7.0%p로 빠르지만 그럼에도 제조업 고용비중은 28.0%로 우리와 크게 대조된다. 양국 간 대규모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 부문 중심의 산업구조와 노동집약적 중소자본 중심의 산업구조의 차이가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탈산업화와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속도

	시작 연도(T)	제조업 고용비중(%)			변화(%p) (T-T+10)	1인당 국민소득			소득변동률(%)*	
		T-10	T	T+10		T-10	T	T+10	상승기	하강기
한국	1989	22.8	27.8	19.8	-8.0	3,322	6,130	10,117	84.5	65.0
미국	1966	25.4	26.1	22.1	-4.0	-	16,417	20,671	-	25.9
일본	1973	23.8	27.0	23.7	-3.3	10,616	20,575	25,290	93.8	22.9
서독	1970	36.9	38.1	33.7	-4.4	-	12,336	15,702	-	27.3
프랑스	1974	27.0	27.0	22.6	-4.4	9,552	13,720	16,574	43.6	20.8
이탈리아	1980	26.9	27.0	22.0	-5.0	9,558	12,998	16,176	36.0	24.4
영국	1970	33.5	33.5	27.7	-5.8	11,657	12,916	15,493	10.8	20.0
핀란드	1980	22.8	24.9	20.2	-4.3	11,166	15,431	19,970	38.2	29.4
대만	1987	29.5	35.0	28.0	-7.0	-	-	-	-	-

출처: 이홍식.강성진(2006: 52)에서 재인용 및 일부 재구성
* 소득변동률은 필자가 별도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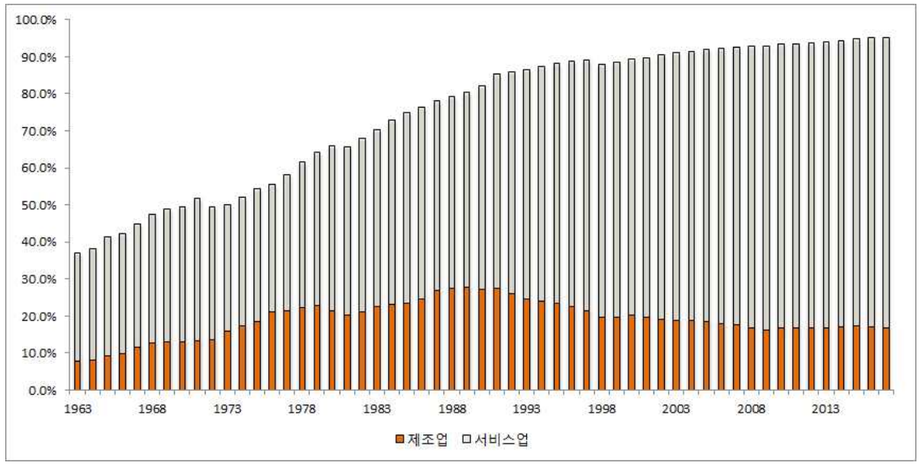
그런데, 제조업의 고용비중의 정점을 중심으로 한 이후의 변동, 즉 탈산업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의미를 남긴다. 탈산업화 이후의 세계는 흔히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지배하는 세계로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사회제도가 부조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마치 농업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제조업이 지배적인 세계로 이행할 때 나타났던 여러 갈등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관생산 및 테일러리즘에 의한 대량생산 방식과 과학적 관리방식의 결합은 노동의 동질화, 표준화 및 탈숙련화를 낳았다. 이는 대체로 '케인시안적 복지국가체계(Keynesian Welfare State)' 하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체계, 이른바 포디즘(Fordism)과 맞물려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지배적인 생산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등에 의한 케인시안 체계의

붕괴와 함께 컴퓨터 및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더 이상 과거의 생산방식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래 산업구조의 가파른 서비스화, 즉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학적 변화,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등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심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고용구조 및 노동편성 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포디즘적 노동편성원리는 외부노동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전면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수요 및 공급 측면 모두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림 3] 산업구조변동에 따른 고용비중의 장기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은 급속한 후발산업화만큼 이러한 변화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위의 [그림 3]은 1963년부터 2017년까지 54년 동안의 장기 산업구조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림·어업 부문으로 흔히 1차산업의 영역에 해당하는데 그림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의 고용구조는 1차 산업의 급격한 비중 축소와 이를 왕성하게 흡수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특징지어진다. 물론 제조업은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놓이지만 이 하락분이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흡수되는 추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요 시기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래의 <표 4>는 본격적인 산업화의 드라이브가 걸리기 직전인 1963년, 제조업이 정점에 이른 1990년,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2017년의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지난 50여

년 동안 전통적인 산업구분에 따른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으로 발전해나가는 경제발전의 패턴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4〉 주요시기별 산업별 고용비중의 변동(단위:천명)

	1963	1970	1980	1990	1998	2010	2017
계	**7,563**	9,617	13,683	18,085	19,938	24,033	**26,725**
농림어업	4,763 **(63.0)**	4,846 (50.4)	4,654 (34.0)	3,237 (17.9)	2,397 (12.0)	1,586 (6.6)	1,279 (4.8)
제조업	601 **(7.9)**	1,268 (13.2)	2,955 (21.6)	4,911 **(27.2)**	3,917 (19.6)	4,078 (17.0)	4,504 **(16.9)**
서비스업	2,199 **(29.1)**	3,503 (36.4)	6,074 (44.4)	9,937 (54.9)	13,624 (68.3)	18,369 (76.4)	20,942 **(78.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베이스

예컨대 1963년 농업 부문의 종사자수는 무려 63.0%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은 7.9%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의 경우 농업 부문은 불과 27년 만에 17.9%로 크게 준 반면 제조업은 27.2%, 그리고 서비스업도 29.1%에서 54.9%로 증가하여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완벽하게 탈피하고 있다. 또한, 2017년의 경우 꾸준하게 진행된 경제의 서비스화는 지속되는 농림어업 부문의 감소에 제조업 부문의 탈산업화의 힘이 더해져 농림어업 부문은 이제 4.8%에 지나지 않고 제조업도 16.9%로 하락하면서 무려 78.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산업구조로 재편된 것이다.[3)]

경제의 서비스화가 고용비중의 증대라는 양적 측면을 넘어서 고용체제 전반에 체계적인 연관을 갖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주목할 점은 생산성이 정체적인 성격을 띠는 서비스업에서 양적으로 막대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고용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용의 '질', 결국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4. 저출산 고령화와 트릴레마

1950년대부터 이미 경제구조의 변화, 즉 탈산업화 및 경제의 서비스화 등에 대한 논의가 깊게 이루어져 왔다.[4)]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명론적 관점에서도 '제4의 물

3) 최근 김준(2017)은 2000년대 초·중반의 '고용 없는 성장'을 지나 2010년대는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도 거대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의 한 특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4) 로드릭(D. Rodrik, 2015)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고용비중이 정점기였던 시기가 미국 1953년, 영국 1961년, 덴마크 1962년, 스웨덴 1961년 등으로서 이 시기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에 주목할 물적 조건이 여물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결'(알빈 토플러), '후기 산업사회'(다니엘 벨)등으로 표현되면서 그 구조변화의 혁명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갖는 경제학적 함의가 명확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면에서 보몰(Baumol, 1967)의 논의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왔다. 보몰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두 유형화에 기초하여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초래할 사회경제 정책적 함의를 명확히 제시해주었던 것이다.

주로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정체로 이끌 것인지 생산성 변동 논의에 집중하였던 반면, 복지국가체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통 제조업에 기반한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국가체계와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연관성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사람은 에스핑-앤더슨(1990)이었는데 실제 그는 복지국가체계와 노동시장구조 양자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들 논의들은 결국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경험적 검출 부분과 연결되어 한국과 같이 공공서비스의 고용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는 주로 저임금 일자리가 포진되는 일종의 '재미 일자리(fun job)'[5]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보몰의 비용질병은 경제의 서비스화에서 직면하게 될 비용질병의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국가의 개입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도록 하였다.[6] 이 논의를 애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체계 논의와 결합하여 경제의 서비스화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풍부하게 문을 열어 준 논의가 아이버슨과 렌(1998)이었다. 이들은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에서 각국들의 정책목표 우선순위 세 가지(재정건전성, 평등, 고용성장)를 다 달성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에 직면한다는 점을 주장한다.[7]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정체에 따라 서비스 부문의 광범위한 고용에 대해 일자리의 질(평등)과 양(고용창출)의 문제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4〕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에 따라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평등에 집중하는 점을, 독일 등 대륙형 기독교 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재정건전성과 소득평등에 집중하는 점을,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형 시장주의적 복지국가체계는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하는 트릴레마를 제안한다.

5) 재미일자리(fun job)는 에스핑-앤더슨이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 속에서 서비스를 민간시장 영역에 맡길 때 나타나는 저임금 일자리를 지칭한다.

6) 예컨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일부 서비스(예로 교육)은 공공 부문에 의해 제공된다. 그렇지 않다면 증가하는 상대가격 비용은 이들 서비스에 대한 사적 구매를 위축시킬 것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하위최적생산(suboptimality)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부문에 복지국가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하는지는 복지국가 유형론에 일관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7) 이러한 비관론은 이미 에스핑-앤더슨도 통찰력을 보여준 바 있다: "선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 가지 점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그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완전고용과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제로섬 갈등을 유효적절한 교섭으로 유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한되어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복지국가는 완전고용 성과와 분배상의 조화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의 굴레를 쓰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기능은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에스핑-앤더슨, 1990[2007]: 287-288, 강조는 원문).

[그림 4] 경제의 서비스화와 트릴레마



자료: Iversen&Wren(1998).
출처 : Iversen & Wren(1998)
출처: 이덕재(2018: 35)

한편, 아래의 <표 5>는 위의 트릴레마 논의에 기대어 김상호 외(2016)의 내용을 중심으로 OECD 34개국 중 에스핑-앤더슨이 말한 대표 복지국가 세 나라와 한국의 지표를 비교하였다. 대체로 보면 아이버슨과 렌의 주장대로 각 지표가 명확하게 맞지는 않는다. 이는 이들도 이미 말한 부분으로 하나의 이념형적 경향성으로 이해해야 하며 특히, 이들 지표는 시간의 흐름의 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제의 서비스화가 강제하는 보편적 흐름에 각국들의 대응양식들의 군집화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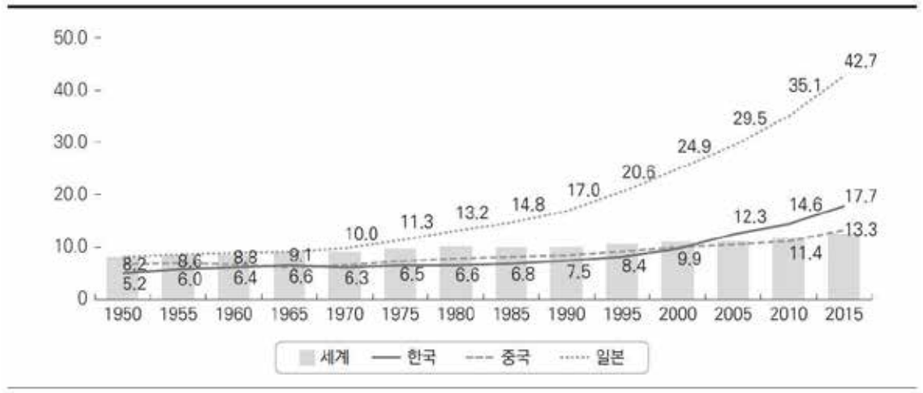
<표 5> 주요 복지국가체계별 트릴레마 지표(괄호안은 순위)

구 분	재정건전성		소득평등		고용성장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비율	상대빈곤율	공공사회지출비중	고용률	실업률*
덴마크	58.6(14)	-1.6(10)	5.4(2)	30.1(4)	72.9(6)	6.2
독 일	83.5(20)	-1.0(9)	9.1(14)	25.8(9)	72.8(7)	4.1
미 국	99.7(27)	-8.3(31)	17.5(33)	19.2(24)	67.2(15)	4.9
한 국	33.0(4)	1.1(2)	14.4(25)	10.4(32)	64.2(21)	3.7

출처 : 김상호 외(2016)에서 재구성함
* 실업률 부분은 필자가 추가함

우리는 앞에서 한·중·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재정제약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의 [그림 5]는 한·중·일의 노년 부양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일본은 1970년에 세계평균을 넘어섰고 2015년 현재 세계평균의 세 배 이상 높은 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이제 막 세계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 이미 17.7%로 역시 세계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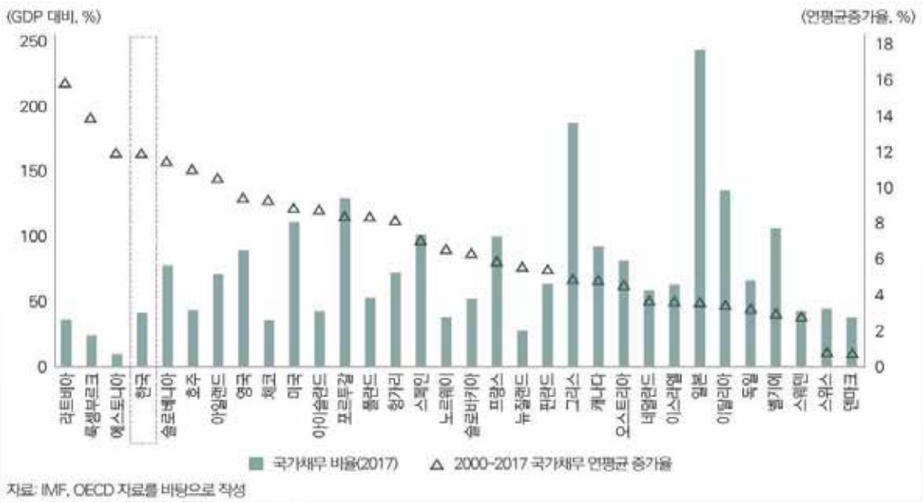
[그림 5] 한·중·일의 노년 부양비 추이



자료: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DVD Edition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출처: 이강호(2018: 76)

[그림 6] OECD 32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자료: IMF,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 116)

그러나 위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한·중·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2017)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2000~2017년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꽤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반대로 국가채무 비율은 매우 높지만 증가율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결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에 직면하여 각국들이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력에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출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시장의 활성화(activation)를 위한 재원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소결: 한·중·일 국제일자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

오늘날 한·중·일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다. 한·중·일 3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의 고도화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의 양상도 과거와 동일하지 않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일자리의 양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처럼 이러한 고용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및 급격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 속에서 진행되면서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일의적인 해법을 가능케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각국들의 특수성에 따라 노력해야 하겠지만 한·중·일 세 나라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일자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선행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날 가장 행복한 나라들로 꼽히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가능했던 조건으로 이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안정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북유럽 소규모 국가들과 복지국가 간의 연관성을 해명하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한 Katzenstein(1985: 84)는 이들 나라들의 국제적 전문화가 정치적 부담보다는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작용한데는 2차 세계대전 이래의 평온한 국제정치적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살펴 본 바처럼 저출산·고령화는 앞으로 노후보장을 위한 상당한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요구함에 따라 재정제약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제약은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부담과 함께 한·중·

일 세 나라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개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세 나라에서 재정제약의 문제는 크게 보면 이들 세 나라가 수출 등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1997년 IMF외환·금융위기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높은 국제무역 의존도에 따른 재정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적 조건들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기반과 병행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변화는 한·중·일 3국에게 있어서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중·일 3국 간의 국제경제적 구조는 상호 경쟁적 측면도 있지만 보완적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은 서비스업 일반이 갖는 낮은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면서 3국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예컨대 최근 일본의 경우처럼 경제활성화 국면에서 저출산의 지속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대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한국 등의 나라로부터 인력공급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 압력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중·일 세 나라가 동일한 경제권역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및 산업화의 시차를 오히려 기회로 잘 활용하여 노동시장 불균형의 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2006년 부산에서 개최된 IL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의 논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대신하고자 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은 없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은 있다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현실, 문화,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나 발전 단계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근로권과 원칙이 있다. 바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남녀차별과 같은 각종 차별철폐,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충관계(trade-off), 올바른 대응책 등 자국에 적절한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회적 대화이다.

이외에도 지역 통합 강화, 거시경제와 교역, 투자, 노동과 사회 정책의 조화,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킹, 이주노동 관리, 재난 및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책 수립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식과 경험, 통계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취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출처: ILO 아시아태평양 사무국(2006: 7)

끝으로 한·중·일 3나라의 강력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통해 아시아의 북유럽과 같은 강력한 동맹체제가 형성되길 기원한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크워크(SDSN)'은 소득·자유·신뢰·기대수명·사회적 지원·관용 등 6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매년 각국들의 행복지수를 발표한다. 예년처럼 금년의 경우도 156개 국 중 1위 핀란드를 필두로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국가들인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순으로 차지했다. 한국은 작년 57위에서 54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58위, 중국은 93위를 차지하였다. 한·중·일 세 나라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물질적 수준 향상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한·중·일 세 나라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상호 간의 큰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일자리 및 복지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중첩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세 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9),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김상호·정해식·임성은·김성아(2016),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준(2017), "성장 없는 고용: 7개 국가의 비교 연구", 『질서경제저널』, 제20권 2호, 한국질서경제학회, pp. 131-154

신성호(2012), "인구노령화와 동북아 안보", 《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 2020 한국 외교 10대 과제》

(ILO)아시아 태평양 사무국(2006),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14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
이강호(2018),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분석”, 『보건복지포럼』(2018. 8)
이덕재(2018), “경제사회양극화와 ‘트릴레마’:산업구조 및 고용체제의 변동”, 『경제와사회』, 비판사회학회, pp. 14-41.
이홍식・강성진(2006),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재준(2007), “한국경제 서비스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 51-80
황수경(2008),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 pp. 27-62

Baumol, W. J.,(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No. 3, pp. 415-426.
Esping-Anderso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박시종 옮김,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Iversen, T. and Wren, A.(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July), pp. 507-46
Katzenstein, P.(1985),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Cornell Univ. Press.
Rodrik, D.(2015),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NBER working paper.

<부록> 보몰의 ‘비용질병’(Cost Disease)

보몰은 노동의 활동을 그 자체 목적인 노동(서비스)과 수단으로서 노동(제조업)으로 구분한다. 중간재투입물로서의 노동활동이 기술진보적이고 따라서 생산성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최종재로서 서비스 활동은 그 본질적 성격상 생산성이 정체된 활동으로 이해한다. 이 때문에 보몰은 이를 ‘불균형팽창(unbalanced expansion)’으로 부르는데 문제는 경제적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서비스 활동들은 각각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적 구조의 특성 때문에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따르는 실질 비용의 누적적인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각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화해 내는지는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주요한 판단 준거를 제공한다. 간단히 보몰의 2부문 모형을 살펴보자.[8)]

(1) $Y_{1t} = aL_{1t}$

(2) $Y_{2t} = bL_{2t}e^{rt}$

(3) $W_t = We^{rt}$

[여기서 W는 임금, Y는 산출물, a와 b는 투입계수이며, 1과 2는 각각 서비스 부문과 생산재 부문이다]

위의 식(1)과 (2)는 각각 2부문의 경우 생산성 진보에 따라 산출량이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1부문은 노동투입량에 비례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조건에 따라 도출된 최종적 결론은 아래의 식(4)와 (5)로 나타난다.

(4) $C_1/C_2 = (L_{1t}/Y_{1t})/(L_{2t}/Y_{2t}) = be^{rt}/a$

[여기서 C는 비용이며, L은 노동량이다]

(5) $L_2 = L - L_1 = L/(1+Ke^{rt})$

위의 (4)식은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1부문의 비용은 생산성이 성장하는 2부문에 비해 상대비용이 급증하여 상대가격이 더 비싸지게 된다는 점을 가리킨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비용은 제조업 부문보다 비싸지면서 이에 따른 수요의 지속적 감소 및 실업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몰이 ‘서비스의 비용질병(cost disease of services)’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한편, (5)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성이 정체된 서비스 부문의 노동이 전체 노동을 차지하게 된다는 귀결을 보여준다.[9)] 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부문의 노동은 전체노동 L로, 반면 2부문의 노동은 0으로 수렴해갈 것이라는 것인데 결국 제조업 부문 종사자들은 점점 더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보몰의 논의는 탈산업화라는 일반적 패턴에 대한 경제운동 법칙적인 명쾌한 논리를 제공했지만,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확장되었다. 예컨대, 위의 두 부문 간 임금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1960~70년대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의 성공과 관련하여 고생산성 분야의 제조업 팽창기에 고임금-저물가-고납세-완전고용 회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반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지배적인 시기에 이 회로가 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지 명료한 논리를 제공해주었다(Iversen & Wren, 1998).

8) 보몰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제시한다. 1)노동 이외의 모든 지출은 무시한다. 2)두 부문의 임금은 함께 변동한다. 3)화폐임금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부문에서 시간당 산출물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9) 우리나라에서도 허재준(2007)은 “…1990~2005년 기간의 한국경제 구조변화는 ‘보몰(Baumol)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허재준, 2007: 78)고 주장하며 황수경(2008) 역시 이에 동의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중일 고령층 소비 비교와 전망

관리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유통소비연구소 부소장

한중일 고령층 소비 비교와 전망

관리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Comparison and Outlook of the Elders Consump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GUAN Lixin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Ministry of Commerce, P.R.C

인구 구조의 고령화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는 거대한 고령 소비군이 형성되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8 년 말까지 중국의 65 세 이상 인구는 이미 1.67 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노인부양비율은 17%에 이르렀다. 소비는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는데, 중요한 소비 구성 부분으로서의 고령층 소비는 중국 주민 소비의 업그레이드, 나아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에 있어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중국 고령층 소비 시장을 한층 개선하고, 고령층 소비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인가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 중국 고령층 소비 현황

노인 소비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노인들의 물질 및 정신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며 인구 고령화 문제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하여 2015 년 7 월 상무부연구원의 도시 고령층소비촉진과제팀은 샘플 조사 방법을 통해 도시 노인의 소비 상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소비 습관, 생활필수품 소비, 식음료 소비, 보건의료용품 소비, 가사 관리 서비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온라인 쇼핑과 대책 제안 등 8 대 항목에 관하여 1 선 도시 베이징, 광저우, 2 선 도시 선양, 3 선 도시 옌지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400 부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도시 고령층 소비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1) 소비 가격 민감도가 높음

고령 소비자는 퇴직 후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게다가 근검절약하여 가계를 꾸린다는 생활 관념을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과거 5 년 곡류, 기름류, 육류, 알류, 채소류, 우유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폭 변화는 노인 소비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 가격 상승폭이 너무 높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응답한 노인이 44.5%, 가격 상승폭이 높은 편이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응답자는 38.5%이다. 92.5%는 외출하여 식사를 자주 하지 않으며, 그 중 53.3%는 외식 가격이 높은 것이 외식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54.5%는 현재 보건의료용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겨우 5.3%만이 현재의 가격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가사 관리 서비스 혹은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역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44.3%이다.

(2)보건의료 소비 비율이 높음

노인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비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한다. 노인들은 신체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건강 소비 영역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 보다 뚜렷하게 높다.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은 도시 고령층 소비에서의 비중이 53.3%에 이르고 이는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도시 노인 비율인 50.8%와 부합하며 보건의료류의 식품 혹은 약품을 사용하는 비율은 더 높아 61.8%에 이른다. 94.7%에 달하는 피조사 도시 노인은 비록 의약·건강보조식품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노인들의 건강 소비에 대한 의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38%는 매월 보건의료 방면의 지출이 500 위안 이상에 달한다.

(3)커뮤니티 서비스 개선 수요가 강함

노인들은 신체 기능의 퇴화 때문에 대민 편의와 관련하여 주민 소비를 만족, 촉진시키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현재 도시 노인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서비스 불편과 자녀가 곁에 없다는 것으로 각각의 비중은 39%, 32%이고 다음으로는 정신적 공허함과 노인 제품이 너무 적다는 것이 각각 19%와 10%를 차지하였다. 커뮤니티 내 개선이 필요한 소비 서비스 시설 영역에서 노인 소비 전용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45%, 제품 배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37%, 17%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무장애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커뮤니티가 제공해야 하는 양로보건서비스 영역에서는 의무

봉사, 양로기구와 노인 재활센터가 응답자의 첫 번째 선택이었으며 비중은 각각 36%, 35%, 29% 이다.

(4)서비스 소비 수요가 왕성

비록 도시 고령 인구의 소득 증가는 완만하지만 가사 관리 서비스, 음식, 여행 등 서비스 소비 영역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왕성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3%의 노인이 퇴직 후 고정 소득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여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밝혔으며, 42.5%는 현재의 소득이 안정적인 편이어서 삶의 질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도시 노인 인구의 소득 수준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소비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사 관리 서비스, 외식과 여행의 소비 표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응답자의 39.3%는 향후 이 세 영역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중 여행 소비 의향이 특히 현저하며, 매월 생활 지출 순위에서 여행 소비를 5 위에 배치한 응답자가 22.3% 였다.

(5)온라인 소비가 빠르게 침투

현재 도시 노인의 소비행위는 이미 점진적으로 변화가 발생하여 전통형, 보수형 소비 모델에서 신형, 개방형 소비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근래에는 도시 노인의 온라인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피조사 노인 인구의 휴대폰 보급률은 이미 상당히 높아, 80.3%의 노인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8.4%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동통신의 응용을 노인들이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설명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또한 소비 영역에서 현대 도시 노인 그룹의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정도가 예상보다 높고, 26.8%에 달하는 노인이 평소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노인 중 40%는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소비 모델은 노인들에게 이미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고령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2. 일본과 한국의 고령층 소비 촉진 경험

(1)노인 법률법규 정책 체계 개선

일본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법률법규와 방침, 정책을 제정하여 고령층 소비에 양호한 법제 환경을 조성하였다. 1960 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일본은 연이어 10 개에 가까운 고령 인구 관련 법률법규를 내놓았다. 1963 년 반포된 《노인복지법》은 일본이 추진한 사회화 양로의 발단이자 일본의 '노인헌장'이다. 이후 반포한 《노인보건법》은 노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규정하였다. 1989 년에 나온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 개년 전략》은 커뮤니티의 양로 서비스 중의 주체적 지위를 재차 명확히 하였다. 2000 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개호보험법(介護保險法)》은 지방정부를 계약자로 규정하고 만 40 세의 국민은 간호보험비를 납부하고 연로한 후의 간호 문제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다. 《복지 인재 확보법》은 법률상에서 복지 인재(人才)의 양성과 필수적인 경제, 사회적 지위에 대해 보장을 하여 인재 공급 면에서 양로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이 실현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 등 많은 법률이 일본 양로 서비스의 법률과 정책 보장 체계를 함께 구성하였다. 한국 정부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포함한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노인 업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과 보건산업진흥원이 산업 발전 추진을 책임지도록 일임하고 재정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동하였다.

(2)사회보장은 양로를 위한 강력한 버팀목 제공

일본의 잘 갖춰진 사회 보장제도는 고령층 소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준다. 2000년 이후 일본은 '노인간호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였고 이는 일본 전후(戰後)의 '전(全)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이은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동 제도하에서 노인은 전문기구의 건강검진을 통해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등급의 재택 개호와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원, 탁노소, 너싱홈, 양로원 등의 입주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개인 주택 개조, 구입 혹은 임대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용품의 비용 역시 동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007년 일본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설립하여 '노인간호사회보험제도'와 매칭하였다. 동 제도로 인해 256억 엔의 관민(官民) 투자가 이루어져 노인의료 인프라가 개발되고 기술 연구 및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공과사가 결합되고 비교적 잘 갖춰진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3)노인 사무 협조 관리 부처 설립

일본은 노인 사무를 겨냥하여 총괄, 협조,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일본 후생성이 설립한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은 노인 시장 관리를 책임졌다. 동시에 통산성(通産省, 현재의 경제산업성) 역시 양로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 조치, 예를 들어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 법률', '장수사회에 대응하는 주택설계 지침' 등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법률 등 정책 조치를 통해 복지용구 산업 발전에서부터 착수하여 시장 제품 구조를 조정, 인도하고 신흥 산업을 육성하였다. 노인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은 노인 생활 현황 조사를 중시하고 매년 전문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4)업계 표준과 전문화 수준 제고

일본은 업계 가이드 구축, 업계 표준 설립, 직업 자격증 제도 시행 등 방식을 통해 고령 소비 시장의 표준화, 규범화 발전을 이루었다. 일본의 '실버서비스진흥회'는 일본 후생성과 통산성의 지도 하에 설립되었으며, 업계와 기업의 자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버서비스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버마크제도'를 실시하였다. 동 제도하에 소비자와 생산자 대표 및 학자 등으로 구성된 '실버마크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 양로기구, 노인 제품과 서비스 및 생산업체 등에 대한 인증을 책임지고 인증 결과를 대중에게 공포하였다. 일본은 동시에 종사자의 전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의 양로간호서비스는 '개호서비스'라 칭하며,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은 양로간호 종사자가 규범에 따라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라는 두 항목의 직업 자격증시험을 실시하였고, 개호사는 응급구조, 식이영양, 심리자문, 기능재활지도 등 13과목의 전문지식을 학습한 후, 전국 일제고사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한국 정부는 고령 산업 제품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 훈련을 개설하였는데 그 대상은 의료간호종사자, 가정간호사, 부양 및 복지 업무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건축설계사, 노인 정책 제정자 등이다.

(5)사회화 기구의 풍부한 소비 공급 육성

일본은 사회기구의 실버 산업 참여 장려를 통해 고령층 소비 공급을 확대했다.

일본의 양로 서비스 기구는 주로 정부조직, 정부 후원 하의 민간조직, 자원봉사자조직과 기업조직의 4종류가 있으며 그 중 뒤쪽 두 종류는 비정부 조직이다. 정부는 비정부 조직의 노인 서비스와 부양 참여를 크게 지원하고 일련의 우대 조치를 내 놓았다. 예를 들어 노인 관련 기업에게는 기한이 더 길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을 제공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노인 서비스 기업에게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도시 계획 중 노인 관련 기업과 서비스 기업에게는 개발 용지를 사전 보류하여 주었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앞장서서 정기적으로 노인 제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고령층 소비품의 영향력을 제고하며 노인 제품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구축하는 이러한 효과적인 조치들은 일본의 고령층 소비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였고 일본 고령 소비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은 고령친화산업, 간호, 노인용품 및 기계, 약품, 장례 등 업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3. 한중일 고령 소비 협력의 전망

연령 증가에 따라 노인은 활동이 불편해지고, 건강 관련 소비가 증가하며, 편리 관련 개조 수요와 서비스 소비 수요가 강화되는 등의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상 소득, 제품과 서비스 공급, 소비 환경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고령층 소비에는 아직 비교적 큰 상승 공간이 존재하며, 한중일 고령층 소비 시장의 협력에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1)고령 소비 인프라 건설 영역

의료간호 영역에서 고령층 소비 중 보건 서비스, 가정에서의 보살핌, 의료간호 방면의 수요는 기타 연령대 보다 훨씬 높지만,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커뮤니티의 양로기구, 보건 스테이션, 노인재활센터 등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고 경로당, 노인 아파트 등 양로기구를 구비하지 못한 커뮤니티의 비율이 48.5%에 달한다. 비즈니스 시설 영역에서는 현 단계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광범위하게 모든 커뮤니티 주민의 일상 생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 소비군의 심신 특징에 부합하는 제품, 서비스와 비즈니스 영업점 및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활동시설 영역에서 도시공원, 녹지, 건설 기자재, 활동센터 등 노인 휴식, 여가, 피트니스 등 활동 장소의 공급 능력이 부족하고 노인에 적합한 문화활동 시설, 레저 장소 등 하드웨어 시설이 보편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투자 주체가 고령 사회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 추세가 되었다.

(2)고령 제품과 서비스 공급 영역

먹고, 입고, 사용하는 등 물질소비 영역에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저당, 저염, 저지방 등의 전용 상품이 거의 없고 품종이 단일하며 현재 중국 고령 식품 종류는 아동 식품의 1/8, 여성 식품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노인 전용 의류 매장이 매우 적고, 일반 매장에서 노인 의류 전용구역 면적은 10%도 되지 않으며, 의류 스타일, 컬러, 사이즈 등은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노인이 자주 사용하는 노안경, 돋보기, 휴대용 재봉기, 노인 전용 좌변기, 성인용 기저귀,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가정용 산소호흡기, 약용 베개, 경추 베개, 자석치료기 등 생활 및 보건 제품은 선택 가능한 품종과 색조가 단일하다. 정신소비 영역에서 노인 그룹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적고, 문화 활동이 부족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두드러진다. 서비스 소비 영역에서 개인 간호, 가사 관리, 유지보수, 보건컨설팅 등에 대한 노인의 서비스 수요는 매우 큰데 상응하는 서비스 제품 개발은 낙후되어 있어 효과적인 공급이 부족하다. 가사 관리 서비스업, 가정간호서비스업, 문화여가산업, 고령교육산업, 고령여행업 및 정보컨설팅서비스업 등 많은 영역에서 향후 한중일에게는 거대한 발전 공간이 존재한다.

(3)고령 소비 관련 산업 체계 영역

중국의 고령산업 발전은 아직 시작 단계에 속하고 대부분의 고령 관련 기업은 규모가 작고 규범화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노인의 소비 수요가 주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먹고, 거주하고, 이동하는 등 영역을 만족시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문화, 여가, 서비스 등 향유형, 발전형의 소비 수요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역시 고령 산업 발전 레벨이 낮아지도록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고령 산업의 규모화, 전문화 수준이 비교적 낮고, 노인 서비스 전문 기구가 부족하며 간호 상식, 재활 지식 등 전문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매우 부족하여 이러한 것들 모두가 노인 소비 시장의 확대를 극도로 제한하였다. 한중일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 업종의 고령 서비스 인재 영역, 가정 간호, 커뮤니티 간호 등 양로 서비스 업계의 협력 전망이 아주 넓다.

(4)고령 소비 시장 관리 및 표준 영역

현재 중국은 고령 소비 시장과 관련된 법률법규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업계 규범도 완전하지 못하여 고령 산업은 발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병목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은 《미국노인법》, 《노인복지법》 등 기초 법률을 제정하여 고령 산업을 규범화하고 있으나 중국은 입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동시에 고령시장 운용의 규범화와 표준화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으며, 기업의 주체가 우대정책을 누리는 자격, 고령 산업 중 각 업계 관리의 표준근거, 고령 서비스가 준수하는 업계 표준 등 많은 영역에 대해 모두 규범화를 진행할 통일된 표준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고령 소비 시장 환경의 발전을 뒤처지도록 만들고 고령 소비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였다. 이 외에, 노인 소비 시장의 관리감독 역시 큰 허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노인 건강 관련 TV 홈쇼핑, 건강강좌, 홍보관 영업 등은 노인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방식이 되었고 관리감독의 부실은 노인 소비 시장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고령 소비 시장의 규범화와 법제화 관리를 부단히 강화하고 규범화, 표준화를 추진하여 한중일 협력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의 출산율 감소 대책

요코야마 겐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일본의 출산율 감소 대책

요코야마 겐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교수, 부학장

1. 서론

일본의 GDP 는 1968 년부터 2010 년까지 세계 2 위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에 뒤쳐지면서 세계 3 위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신뢰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일본의 GDP 가 2050 년에는 세계 4 위 또는 8 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미래 대책과 관련해 인구 감소, 낮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GDP 순위는 계속 하락할 수 있다.

안보 환경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과 같은 요소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위의 세 가지 문제를 정치적 안건으로 삼아 일본의 국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아직 어떤 정책에서도 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합계 출산율 1.57 명의 충격으로 일본은 미래에 중요한 인구 문제 해결에 즉각 착수하기 시작했다. 1990 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디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인구 문제라는 것은 인구통계학자들에게는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은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바뀌어 인구 감소 문제는 미대응 상태로 남아 있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eget and Multiply (낳아서 번성하자)'라는 슬로건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2. 정부는 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피해 왔다.
3. 후생노동성은 출산율 감소보다는 자녀 양육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4. 후생노동성은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닌 여성 근로자 문제에 집중했다.

위와 같이 후생노동성은 인구 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를 주저했다. 인구 감소 문제로 시작된 대책들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국내 자녀 출산 대책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자녀 출산 대책으로부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내 자녀 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인구 감소 문제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인구에 대한 통계학적 추정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013 년 인구: 일본 10 위, 중국 1 위, 미국 3 위
2050 년 인구: 일본 16 위, 인도 1 위, 미국 4 위
2100 년 인구: 일본 29 위, 인도 1 위, 미국 4 위

중국과 인도는 미래에도 인구가 많을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미래에도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최소 향후 80 년간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및 군사에 큰 영향력을 지닐 것임을 암시한다. 한편, 현재 세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일본은 인구에서 순위가 10 위로 하락하고 중소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일본이 중국, 인도 및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임을 의미한다.

국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인구이다. 선진국은 인구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우수한 가족 대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는 인구 관련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강력한 인구통계학적 바탕을 자랑한다. 반대로, 일본의 인구 감소 대책은 저출산 대책에 편승해 왔고, 인구통계학이 정책의 기초로서 인정되지 못했다.

2. 제안

2.1. 인구 정책에서 사회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GDP 및 사회 복지 예산보다 2.5 배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 역시 여기에 더해져야 한다. 안보는 인구, 경제, 그리고 재정 상황으로 구성된 국력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와 같다면

부채, 사회 복지 및 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인구 정책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인구 문제가 사회 정책으로 다뤄졌지만, 전시 동원에 인구 문제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후 사회 문제에서 제외되어 왔다. 일본의 인구 문제는 사회 정책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는 항상 요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 근로자 문제로 바뀌고 탁아소 문제 등으로 지엽적으로 다뤄졌다. 게다가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인구통계학이 중시되지 않았고, 인구통계학자들은 미국 등 타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했다.

인구 통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1. 개인의 학력과 혼인 연령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2. 여성은 지위가 높은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 급여가 높을 수록 결혼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더 많이 실시되어야 한다.

일본은 인구 정책을 사회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동시에 인구통계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2. 저출산율 정책에서 탁아소 정책 제외하기
우선 저출산율 정책에서 탁아소 정책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저출산율 문제와 탁아소 문제는 다르다. 탁아소의 증설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탁아소 관련 대책이 여성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건전한 양육이라는 개념은 결여되어 있다.

2.3. 일본 사회에 더 적합한 정책
인구 정책에 대한 모델 국가란 없다. 사회 복지가 스웨덴식, 프랑스식 혹은 영국식이어야 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과거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바탕으로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사회 복지를 주창했다. 사회가 발전하고 정책 초점이 노인 복지와 모자 케어로 바뀌자 스웨덴식 모델이 각광받았고 스웨덴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과연 스웨덴식 모델이 일본에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스웨덴의 풍요로운 복지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거운 세금 부담이다. 또한 스웨덴의 총 인구는 950 만명으로 도쿄도 지역 총 인구보다 적다.

그렇다면 스웨덴보다 큰 프랑스는 어떨까? 프랑스는 인구 정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 수립했으며 이러한 선례는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태도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와 일본 사회는 매우 다르고 따라서 정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식 모델은 일본에게 적합할까? 일본의 복지 정책은 영국식 제도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최근 일본은 일과 삶의 균형이나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등과 같은 개념을 영국으로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스웨덴과 프랑스를 모델로 삼았지만 아직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두 국가의 여건과 일본의 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른 국가의 선례를 따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일본 사회의 여건에 보다 더 적합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4. 인구 정책 전담 부처 및 기관 설립
1990 년대에는 후생성이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고 이후에는 내각에서 처리되었다. 따라서 실행의 측면에서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선 새로운 전담 부처 또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출산율 감소 대책을 담당하는 내각은 각 부처와 부서마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내각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경로 대신 직접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다.

내각에 권한이 없는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출산율 감소 대책을 위한 예산은 다양한 부처의 관련 예산을 합한 것이다. 정치 세계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각이 효율적인 대책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전담 부처의 신설, 즉 '인구성'의 설립부터 시작해야 한다. 후생성에 속하는 모든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새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문부과학성의 해당 예산도 새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인구성 장관은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2001 년 일본은 적절한 기회를 맞아 부처와 부서를 대폭 개혁했다. 그 당시 인구성을 설립했다면 지금처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후생성과 노동성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율 감소 대응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구체적 제안
3.1. 국민 인식 개선

3.2. 초등학교 취학 연령 1 세 낮추기

3.3. 출산 간격 정책

3.4. 비생식 건강 정책

3.5. 교육 무상화

3.6. 복합 이민 정책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공생 1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좌 장 **이수훈** 전 주일대사, 경남대학교 교수

발 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다와자르갈 울란바트로시 대기오염 절감 부서 팀장
하야시 가즈미치 기타규슈시 일중대기오염대책 담당

토 론 **정연앙**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김남춘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 센터장, 선임연구위원

목 차

Ⅰ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와 지역협력이슈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Ⅲ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Ⅳ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강화 방안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2019. 10. 31

추 장 민(sinoeco@kei.re.kr)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Ⅰ. 동북아 미세먼지문제와 지역협력이슈

- "나는 숨 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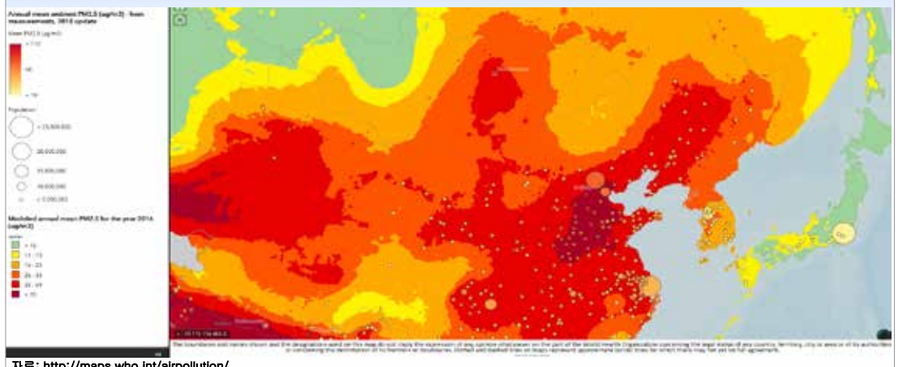


자료: 중국 自然之友 홈페이지(http://www.fon.org.cn)

2

Ⅰ. 동북아 미세먼지문제와 지역협력이슈

WHO 추정 연평균 PM2.5 농도(㎍/㎥) 지도(2016)



자료: http://maps.who.int/airpollution/

화석연료사용 등으로 인해 대량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사막화로 인한 황사의 국가간 장거리 이동과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발생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시기별 변화과정

	1990년대 초~2000년대 초	2000년대 초~2010년대 초	2012년 ~ 현재
배경사건	-국제환경협력(리우회의) -유럽 및 북미 지역경험 -일본환경ODA/중일협력 -동북아환경협력한일경쟁	-중국 사막화 -극심한 황사 빈발 -대기오염/기후변화 연계 대응	-재난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빈발 -대기오염/기후변화 연계 대응
대기이슈	아황산가스 등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이동 및 영향 규명	-황사 발생, 이동 및 영향 규명 -일국/ 지역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발생, 이동 및 영향 -단기수명가스 저감
협력이슈	-모니터링, 정보공유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대응 지역협약체결 -환경산업 및 기술 협력	-황사관측 및 실시간 정보 공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co-benefit 협력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 -미세먼지 실질적 감축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co-benefit 협력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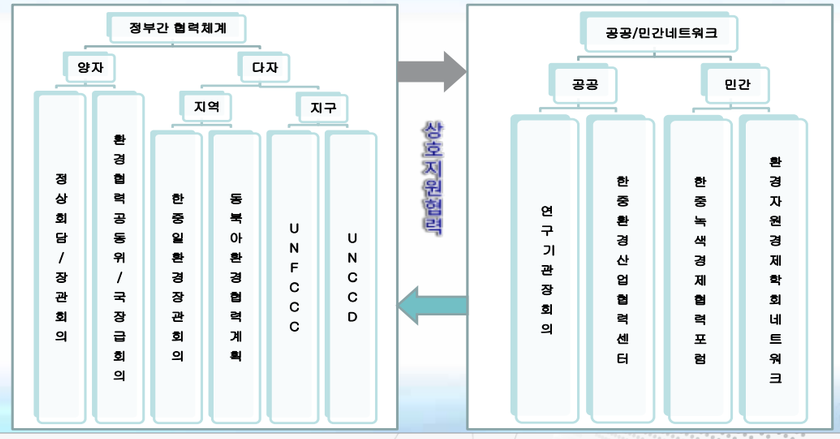
국내추진체계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지역협력체계

❖ 정부간 협력체와 공공/민간부문 협력체로 구성, 부문 및 협력체간 상호 지원협력 관계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 다자간 협력

추진체/사업	추진내용
한중일환경장관회의 (TEMM)	● 99년부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17년 제19차) ● 주요활동: - 제1차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0~2015) 완료 - 제2차 한중일 환경협력 실행행동계획(2015~2019) 실행 (대기오염 포함 9개 우선협력분야 37개 사업)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 한, 중, 일, 몽, 러 및 북한 6국 참여, 포괄적인 환경협력체 ● 주요활동 :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완화 프로젝트 등 - '14년부터 러시아 주도 관련 프로젝트 수행 * Development of the Technical and Policy Frameworks for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ssessment and Abatement of North-East Asia - 2018년부터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 활동 전개(한, 중, 일, 러, 몽 5국 참여)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 다자간 협력

협력체/사업	추진내용
TEMM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 대기오염대응 협력채널 구축 ● 대기오염 정책 및 사례 공유, 초미세먼지 저감 협력 논의
동북아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 제21차 NEASPEC 고위급 회의(2017.3.17), 한국정부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 제안 ● 제22차 NEASPEC 고위급회의(2018. 10.26), NEACAP 공식 출범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 (EANET)	● 동아시아 지역 13개국 참여 산성비 대응 지역간 협력체 ● 주요활동 : 산성침적물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 ● 모니터링 대상물질 미세먼지(PM2.5) 오존 등 확대 논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 (LPT)	● 한중일 3국 연구기관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00년부터 4단계 공동연구 ● 주요활동 : 한중일 3국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산성 침적물) 모니터링과 국가간 배출원-수원지 관계 모델산정 연구활동 ● LTP사업의 국제프로그램화, 오존, 미세먼지, 중금속 등 측정항목 확대 논의
한중일 황사대응 국장급회의(TDGM) 및 황사공동연구단	● 황사에 대한 공동연구 및 3국의 범정부간 황사대책협의를 목적으로 설치된 황사대응 다자간 협의체 ● 황사모니터링 분야와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공동연구사업 수행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 다자간 협력

❖ 다자간 협력체 참가국 현황

Countries	TEMM	NEASPEC	EANET	LTP
China	O	O	O	O
Japan	O	O	O	O
RO Korea	O	O	O	O
DPR Korea		O		
Mongolia		O	O	
Russia			O	
Cambodia			O	
Indonesia			O	
Lao PDR			O	
Malaysia			O	
Myanmar			O	
Philippines			O	
Thailand			O	
Vietnam			O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 양자간 협력

❖ 1993년 이후 2019년 2월 말 현재 총 16건 양자간 협정(합의서, 의향서 등) 체결

체결일	협정 명칭	종료여부
1993.10.2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유효
2003.07.08	대한민국 환경부와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종료
2005.06.07	한중 황사관측과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	유효
2007.4.1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
2008.8.25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유효
2012.08.30	한중 폐기물협력 양해각서	유효
2013.06.27	한·중 공동 따오기 보호 협력 양해각서	유효
2014.07.03	한·중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유효
2014.07.03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유효
2015.01.29	한중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	유효
2015.10.31	한중 판다 보호협력공동 추진 양해각서	유효
2015.10.31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	유효
2016.4.27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	유효
2017.12.14	한중 환경협력 계획(2018~2022)	유효
2019.02.26	미세먼지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협력사업 업무계획 양해각서	유효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업무계획 양해각서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양자간 협력

	추진내용
한중	●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15.6) -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 협력분야: 대기질 예보모델에 대한 연구, 대기오염물질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 한중 대기질·황사 측정자료 공유 MOU('15.10) 및 실시간 공유 - 중국 11개 성 35개 도시와 한국 수도권 도시 SO2, NO2, PM10, PM2.5, CO, O3 6개 대기오염물질 1시간 평균농도 상호 실시간 전송 ● 한중환경협력계획(2018~2022) - 청천프로젝트, 한중 광역대기환경관리 정책교류, 한중 인공강우 협력연구사업 등 7개 사업 - 기존사업 6개, 신규 1개 ● 미세먼지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협력사업 - 중국 베이징시 등 21개 성·시, 한국 17개 시·도 24시간, 48시간, 72시간 대기질 지수범위 및 주요 오염물질 정보 교환 ●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및 저감기술 적용 실증사업 지원 - 하북성 등 4개 성 미세먼지 저감기술 사업(철강/석탄), 노후경유차 배출저감 장치 - 발전소, 제철소 등 대형시설에서 중형보일러 등 중규모 시설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Ⅱ.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중앙정부 협력

양자간 협력

	추진내용
한일	● 한일 환경장관회의 -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 평가방법, 예보정확도 향상 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월경성 및 배출량 인벤토리 공동조사, 환경기준 달성 대책 관련 협력 논의
한몽	● 한몽 환경정책협의체 개설 및 대기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사업 추진 합의('19.6.27) ● 대기오염 - 황사 공동감시 및 모델링 기술 개선 사업 - 울란바토르 대기질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 국립환경연구소 확충사업 타당성 조사 ● 기후변화 -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 - 매립장 LFG 및 태양광 발전사업 - 페이퍼리스 몽골 조림사업 -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Ⅲ.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충청남도

❖ 1996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29개 지자체가 설립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가입
- 환경분과위원회 회원 지자체로 참여

❖ 2004년, 중국 장쑤성과 '환경행정교류협약' 체결

❖ 2018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가입
-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컨퍼런스('18.10) 개최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81002070000063

Ⅲ.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서울시

❖ 서울시-베이징시 협력

● '14.4.3.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에 환경팀 증설 등에 관한 MOU 체결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에 '환경팀' 신설 및 대기질 관련 포럼 등 행사 공동 개최

● '18.3.19.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간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MOU

● '18.11.26.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업무방안 MOU 체결
- 협약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북경시 환경보호과학연구원, 환경보호모니터링센터
- 협약목적 : 기술 연구개발 및 정책 연구 공유 및 협력

※ 서울시-산동성 대기질 개선 협력 MOU 체결('14.4.12)

❖ 서울시-울란바타르시 협력

● '14.2.24. 서울-울란바타르 대기질 개선 협력 MOU 체결
- 양 도시간 대기질 정보 실시간 공유
- 대기질 개선 우수 정책 교류
- 동북아 대기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양 도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참여 및 대기 전문가 역량 강화



자료: http://news.seoul.go.kr/env/archives/36189

Ⅲ.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서울시

❖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 2010년부터 동북아 주요도시 대기담당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 참여
-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19.5.22-23) 개최, 아시아 35개(중국 16개) 도시 참가
- 동북아 도시에서 아시아 전역과 전세계로 확대 추진



자료:: http://airforumseoul.com/city, 자료의 지도를 활용하여 2019년 포럼 발표자의 소속 도시를 표시함



자료:

Ⅲ.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경기도

❖ 중국 동북3성 환경협력 포럼(2017), 청정대기 국제포럼(2019) 등 개최

❖ 미세먼지대책 '알프스프로젝트' 사업으로 중국 동북3성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MOU 추진



자료:



자료:

Ⅲ.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

중일 도시간 협력

❖ **2013년 양국 환경부처간 '중일 대기질 개선 도시간 협력 프로젝트' 협력양해각서 체결**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가 협력사업 진행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협력양해각서 체결 및 도시간 협력프로젝트 계속 추진

❖ **참가 도시**
- 일본: 동경도, 토야마현, 미에현, 욧카이치시 등 10개 지방도시
- 중국: 베이징시, 광둥성 등 16개 성시

❖ **주요 협력사업**
- VOC 감축 정책 및 기술, 오존오염연구,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술 등



자료: http://www.sohu.com/a/163145854_355578



자료: http://www.sohu.com/a/231119413_276127

동북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협력 평가

지역협력 평가

주요 이슈

❖ 중국 배출/발생하여 국가간 장거리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이동/침적,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관측정보 실시간 공유,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력 방식

❖ 한국과 일본 양국은 구속력 있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력체 지향
❖ 하지만, 공동연구조사,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프로젝트 위주의 접근, 오염물질 침적량에 대한 기여율관계의 실태파악 및 증거확보, 대기오염 예·경보를 위한 측정데이터 실시간 전송에 주력
❖ 오염자-피해자부담원칙 관점이 아닌 우리나라 피해저감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중국에 장비 등 지원(황사)
❖ 소규모 연구사업 위주, 대기오염물질 저감 환경산업기술 협력, 저감정책 상호전파를 통한 정책동조화 유도

협력 성과/한계

(성과)

❖ 회의체 및 공동연구를 통한 실태 및 현황 파악
  - 오염물질 배출원-수원지간 관계 부분적 규명
❖ 정책대화 채널 등을 통한 협력 필요성 공감대형성
❖ 대기측정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 환경산업 및 기술 협력 및 시장진출 지원기반 구축

(한계)

❖ 구속력 있는 감시/감축체제 부재
❖ 국가간 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전통적 방식 대응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모델링
  - 재난형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미비
❖ 일본대비 한국 지방정부와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 미미, 기존 도시협력체 활용 수준
  - 정책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단계, 실질적 감축협력 부재

Ⅳ.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강화 방안

‘(가칭) 탈석탄 에너지전환 환황해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 동북아 지역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협력메커니즘 구축

❖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리더이자 핵심주체로서 지방정부 역할 수행

❖ 국제 ‘탈석탄동맹’와 연계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활동 추진

❖ 주요 참여대상 지방정부

- 한국: 충남도, 인천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 중국: 랴오닝성, 톈진시,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저장성 등
- 일본, 러시아, 몽골의 지방정부에도 문호 개방

❖ 주요 협력 사업

- 매년 ‘환황해 탈석탄 에너지전환 포럼’ 개최
-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 석탄발전소 폐쇄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및 기술
- 인력교류 및 능력개발 협력

19

Ⅳ.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강화 방안

‘한중 푸른 하늘 지방정부 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국민정책제안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긴밀한 협력 추진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 ㅇ 한-중 환경 당국간 인적교류 및 전용선 설치를 통하여 고농도 예·경보, 비상저감조치 등 정보 공유
- ㅇ 서울-북경 고농도계절 공동협력, 한-중 푸른하늘 우호도시 MOU 등 지역 차원의 정책 및 기술 협력 강화
- ㅇ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현행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지역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 및 발전
- ㅇ 산업단지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 도모를 위해 ‘저탄소 푸른하늘 생태산업단지’ 건설 및 ‘친환경 항만’ 공동 구축

둘째,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증진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 ㅇ 특히, 금년 고농도 계절에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

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홈페이지(2019) , 제1차 국민정책제안 요약본

21

Ⅳ.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강화 방안

‘한중 푸른 하늘 지방정부 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

[추진 방안]

✓ 한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합의서 체결, ‘동북아 미세먼지저감 협력단’ 구성

✓ 미세먼지저감 협력사업은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구축 및 이행

[주요 사업]

❖ 고농도 미세먼지 응급대응 공동행동(Emergency Activity on Severe Air Pollution)

- 지방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저감 응급대응 비상조치 정보 상호 전달/공유
- 지방정부의 공동행동 지침서로서 비상조치 공동메뉴얼 개발 및 현지화 적용
- 조업중단, 차량2부제 등 비상조치 협력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응급대응 공동행동 시행

❖ 푸른 하늘 스마트도시 사업(Blue Sky Smart City Project)

- 동북아 각국의 도시 주도, 중앙부처 및 기업 지원 및 참여
- 한국의 수도권, 충청권 등 지역 도시와 중국의 황해 연안, 북경-천진-화북(京津冀) 및 주변지역, 분위평원(汾渭平原) 등 지역 도시 참여 및 도시간 양자 파트너십 구축
-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발전협력사업으로 추진

20

Ⅳ.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강화 방안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참가 및 국제기구화 주도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EACAC, East Asia Clean Air Cities)

- 2016년, 서울시와 ICLEI 동아시아본부가 공동으로 창설, ICLEI 동아시아본부 사무국 담당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4개국 10개 도시, 유엔환경계획,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등 22개 기관 참여

* 참여도시: 한국 2개 도시 (서울, 수원), 중국 4개 도시(베이징, 구이양, 지난, 선전),
일본 2개 도시 (도쿄, 기타큐슈), 몽골 1개 도시(울란바타르)

*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간 협력메커니즘 구축

* 대기질 개선 지역 능력배양 및 해결대책 지원

* 우수정책 사례 공유

❖ 2020년, EACAC를 동아시아 대기질 국제기구 격상 계획

- 환황해 주요 도시의 EACAC 회원 가입 및 국제기구화 주도

22



몽골의 모래 먼지 폭풍과 대기 오염

다와자르갈 울란바트로시 대기오염 절감 부서 팀장

제5회 환황해 포럼

몽골의 모래 먼지 폭풍과 대기 오염

다와자르갈.G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 저감부

2018.06.18

몽골의 지리와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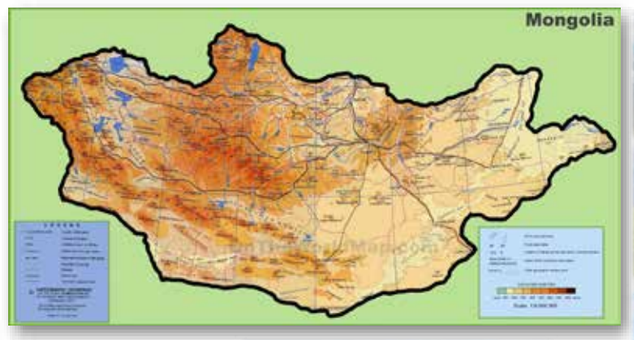
위치: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북아시아 (내륙 국가)

총 면적: 1,564,114 Km² (99%가 육지, 수면은 1% 미만)

육상 국경: 8220 km (중국 간 국경 4677 km, 러시아 간 국경 3543 km)

총 인구: 320만 명
도시 인구: 67.9%
촌 인구: 32.1%
인구 밀도: 1 Km² 당 1.76명

지리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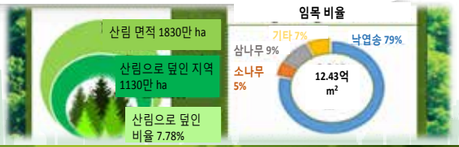


몽골의 산림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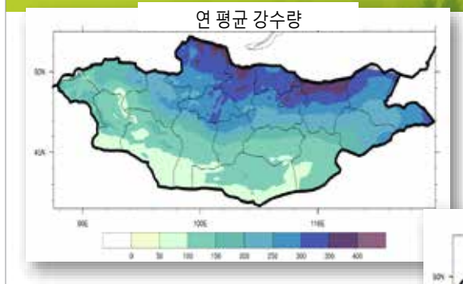
임목 비율
낙엽송 79%
삼나무 9%
소나무 5%
기타 7%
12.43억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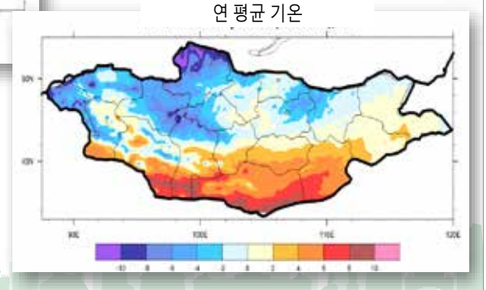
몽골의 기후

연 평균 강수량



- 본토는 평균 고도 1500미터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음
- 매우 건조하며 극도의 대륙성 기후를 특징으로 함
- 강수량이 부족하고 및 기온 변동이 심함
- 연 평균 강수량은 50-400 mm

연 평균 기온



몽골 국립 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 기관
(National Agency for Meteorology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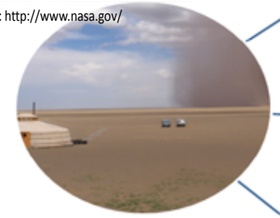
1924 – 최초의 독립적 기상 기관이 과학아카데미(Academy of Sciences, 현존) 내에 설립됨. 역사 자료에 따르면 1869년 이후부터 몽골에 여러 기상 관측소가 운영되기 시작함.
1936 – 국가 수준의 체계적 기상 관측의 시작과 함께 국립기상청(National Meteorological Service) 설립.
2006 – 정부 실행 기관으로서 몽골 국립 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 기관(NAMEM) 설립.
1963 – 몽골의 세계기상기구(WMO) 가입

- NAMEM – 몽골 환경관광부 산하 기관
- NAMEM –수문, 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 서비스 기관

모래 먼지 현상



출처: http://www.nasa.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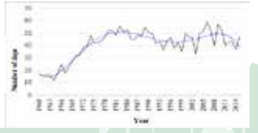


생성
- * **대기 조건**(바람, 강수량)
- * **토양 특성**(질감, 유기물)
- * **지표**(지형, 수분, 식생 등)
- * **토지 사용**(농업, 방목,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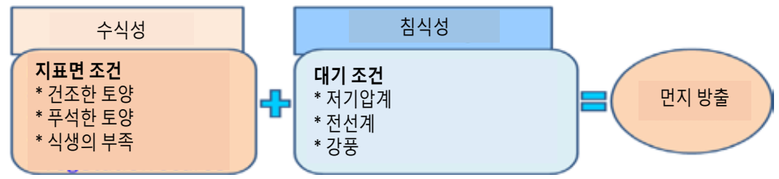
영향
- * **인간의 삶**
- * **인간의 건강**
- * **재산 피해**

빈도
- * 공간적 빈도
- * 시간적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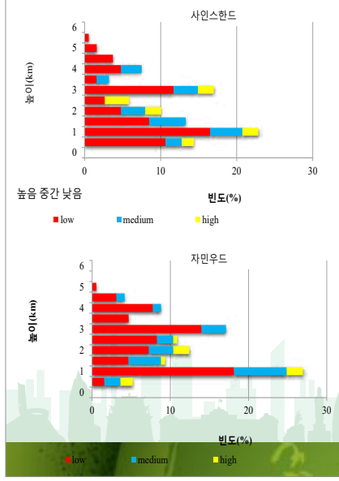


수식성 및 침식성과 먼지 방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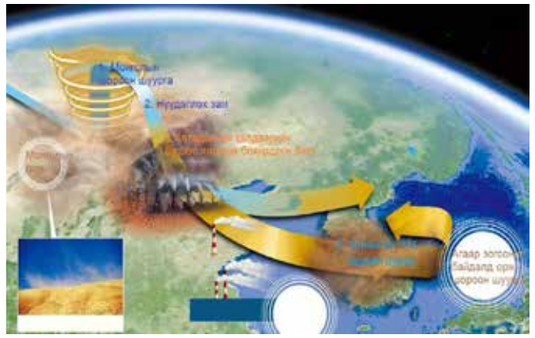
- 풍식 작용은 지질과 기후 현상으로 사막과 건조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다.
- 풍식 작용이 발생하면 고비 사막의 먼지는 지상 5,000 m까지 상승하며 동풍을 타고 아시아 대륙으로 날아간다.

최고 높이 먼지층의 발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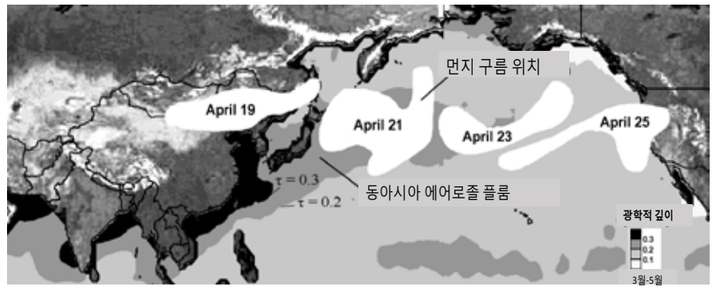
- 고비 사막에서 먼지 발생 기간 동안 대기로 상승하는 먼지의 최대 높이는 0.5-5.5 km다.
- 고비 사막 지역에서 먼지 발생 기간 동안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 입자의 평균 최대 높이는 약 2.0-2.2 km AGL이다.
- 이 두 지역에서 먼지의 수직 분포는 23-28 %의 빈도(최대 빈도)로 1km 높이에서 발생했다.
- 먼지 발생 수준이 심해지면 대기로 상승하는 먼지층의 최대 높이가 감소했다.

먼지와 모래 폭풍



피해:
- 농지, 주거지, 주택 및 인프라의 파괴;
- 전원 공급, 통신, 운송 서비스 중단;
- 공기질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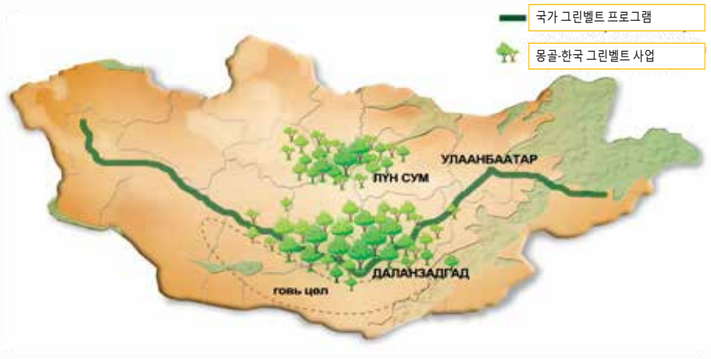
먼지의 이동



1998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몽골과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심한 먼지 폭풍이 발생했다. 다음 날 먼지 폭풍은 중국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기 시작해 4월 23일과 24일에 걸쳐 태평양을 가로질러 4월 26일에서 27일경 북미에 도착했다(Husar et al. 2001).

환경 부문 국제 협력의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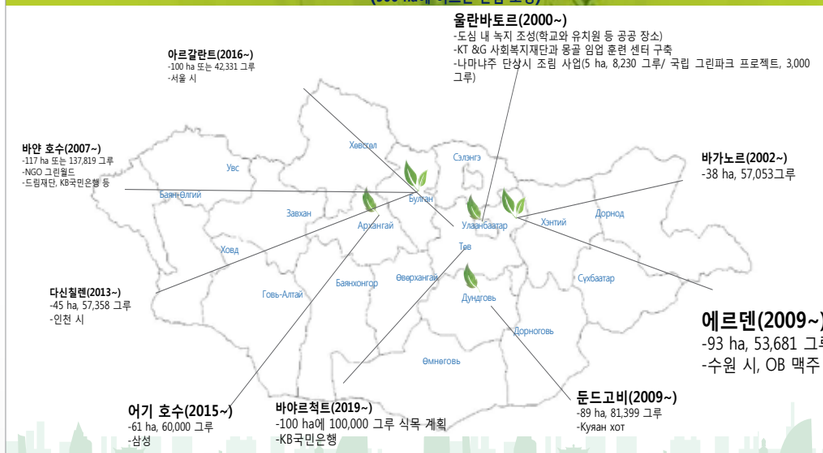
1. 몽골-한국 그린벨트 사업



이 프로젝트는 황사 폭풍의 근원지인 스텝 지대 및 고비 지역(우문고비 및 투브 지방)에 산림 및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GO 그린 아시아 네트워크(GREEN ASIA NETWORK)

(500 ha에 이르는 산림 조성)



아르갈란트(2016~)
-100 ha 또는 42,331 그루
-서울 시

울란바토르(2000~)
-도심 내 녹지 조성(학교와 유치원 등 공공 장소)
-KT &G 사회복지재단과 몽골 임업 훈련 센터 구축
-나마냐주 단상시 조림 사업(5 ha, 8,230 그루/ 국립 그린파크 프로젝트, 3,000 그루)

바얀 호수(2007~)
-117 ha 또는 137,819 그루
-NGO 그린월드
-드림재단, KB국민은행 등

바가노르(2002~)
-38 ha, 57,053그루

다신칠랜(2013~)
-45 ha, 57,358 그루
-인천 시

에르덴(2009~)
-93 ha, 53,681 그루
-수원 시, OB 맥주

어기 호수(2015~)
-61 ha, 60,000 그루
-삼성

바야르첵트(2019~)
-100 ha에 100,000 그루 식목 계획
-KB국민은행

둔드고비(2009~)
-89 ha, 81,399 그루
-Куяан хот

조림 지역



에르덴 숨, 투브 주/ 2011년에 조림 시작/ 98 ha/ 수원 시민의 숲

바얀누르 숨, 불간 주/2017년에 조림 시작/ 117 ha/ 국민은행의 모두를 위한 푸른 하늘 숲

울란바토르 시





몽골의 수도:

- 울란바토르시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이며, 46%의 몽골 인구가 이 도시에 거주한다(약 140만 명).
- 툴강 계곡에 위치
- 주요 에너지원은 원탄
- 총 면적: 470,000 ha
- 평균 고도: 1350 m

울란바토르 시



추운 계절은 약 7개월간 지속됨
지리적으로 4개의 산에 둘러싸여 있음

기후

- 연 평균 습도는 70-75%
- 연 평균 강수량은 240 mm
- 우기는 40~70일, 눈이 오는 기간은 25~30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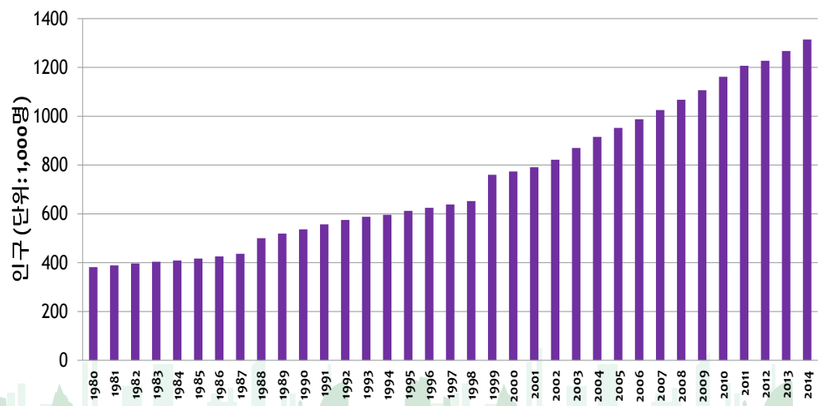
기후 변화

- 연 평균 기온이 2.6℃ 상승(몽골 전체 평균 기온보다 0.4 ℃ 높음)
- 연간 강수량은 5% 감소

계절별 기온 변화 폭

- 겨울 – 3.7 ℃
- 봄 – 2.5 ℃
- 여름 및 가을 – 2.2 ℃

울란바토르의 인구 증가 추세



출처:
http://1212.mn/StatTable-20

환경 오염



대기 오염
연 평균 PM 농도는 WHO 기준보다 이미 2-3배 높음



수질 오염
2000년 대비 지하수 오염 수준이 4-10배 정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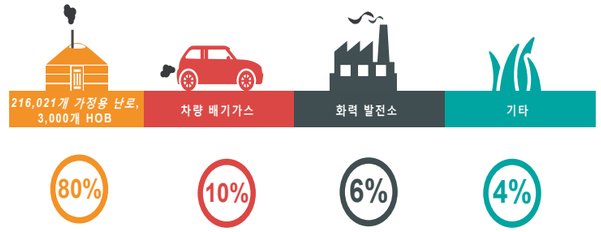


토양 오염
울란바토르 시 토양의 50%가 화학 독성 물질, 중금속, 박테리아에 의해 오염됨



쓰레기
도시 지역 오염원 중 하나는 고체 쓰레기

대기 오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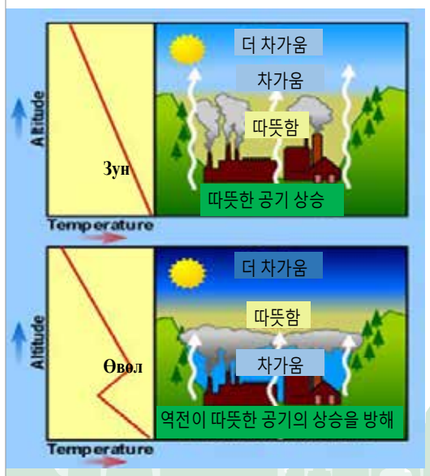
게르 지역 내 215,156 가구, **2,742개** HOB, 연간 석탄 소비량 **1천만 톤** 이상

차량 **383,263**대, 그 중 **73%** 가 10년 이상된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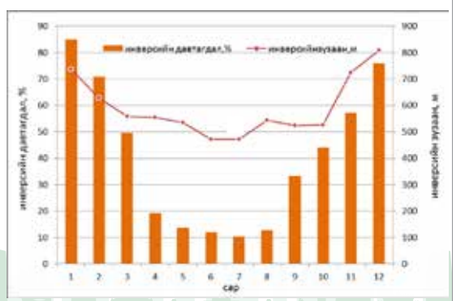
4개 발전소, 연간 석탄 소비량 **5백 1십만 톤** 이상

흙 먼지, 고체 쓰레기 소각, 부유 먼지, 공사, 광업 등

기온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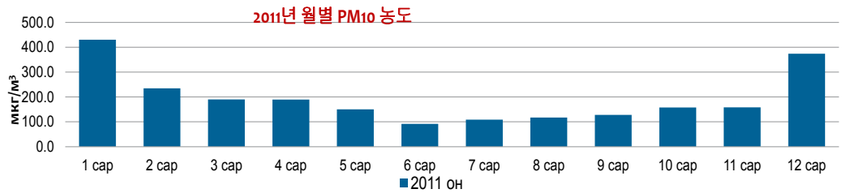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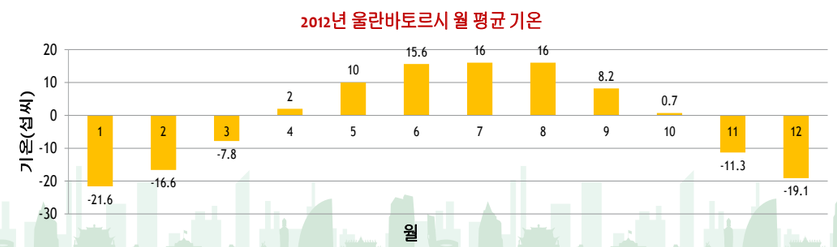
지구 표면에 가장 가까운 대기권 영역에서 온도의 정상적인 흐름이 역전되어 표면의 시원한 공기층이 따뜻한 공기층 아래 놓이는 현상(정상적인 조건에서 기온은 일반적으로 높이에 따라 감소)



출처: NAMHEM

기온과 대기오염





Source:http://www.airquality.ub.gov.mn/

2016년 1월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소	위치 특성	측정되는 오염원	측정 방식
UB-1	산업 지대	SO_2 NO_x CO, PM10, PM2.5, O_3 WS,WD,T air, W air, P air	지속적 자동 측정
UB-2	도로변		지속적 자동 측정
UB-3	게르 지역		수동
UB-4	도시 지역/ 아파트 지역		지속적 자동 측정
UB-5	게르 및 아파트 지역		지속적 자동 측정
UB-6	도시 지역/ 아파트 지역		수동
UB-7	산업 지대		지속적 자동 측정
UB-8	백그라운드		지속적 자동 측정
UB-9	게르 지역		수동
UB-11	게르 지역		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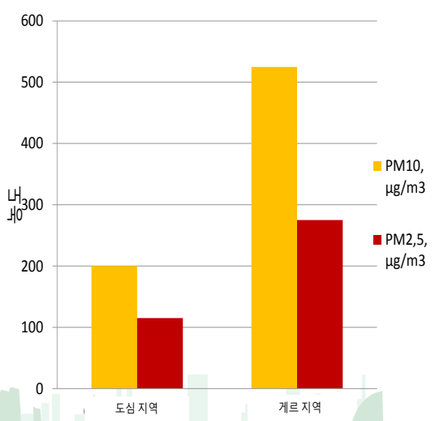
➢ 웹사이트: ww.agar.mn
➢ 모바일 앱

24

게르 지역과 도심 지역의 대기질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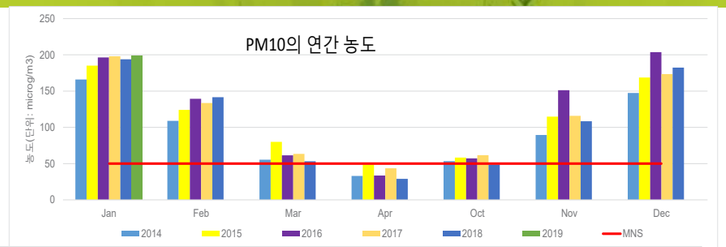
울란바토르시 연평균 PM 농도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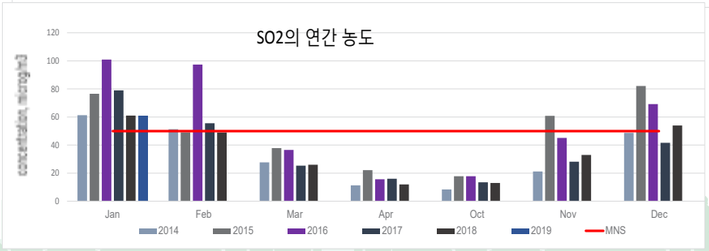
장소	PM_{10}, μg/m³	$PM_{2.5}$, μg/m³	AQSs와 비교	
			몽골	WHO
도심 지역	150-250	75-150	3-6배 높음	7-15배 높음
게르 지역	350-700	200-350	7-14배 높음	17-35배 높음



출처:http://www.airquality.ub.gov.mn/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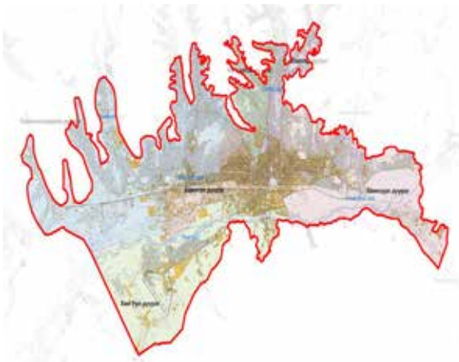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법, 정책,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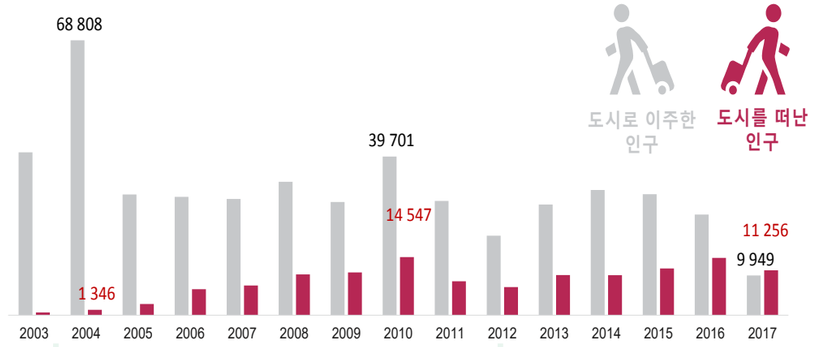
- 대기질 법(2012)
- 울란바토르 2020 마스터 플랜 및 2030년까지의 개발 계획
- 2018년 1월 국가대회의에서 02 결의안
- 2016-2020년 몽골 정부 실행 계획
- 2016-2020년 울란바토르 시장 실행 계획
- 대기 및 환경 오염 저감 국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 on Reduction of Ai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몽골 정부 결의안 62호
- 기후 변화 국가 실행 프로그램(National Action Program on Climate Change)

인프라 및 게르 지역 경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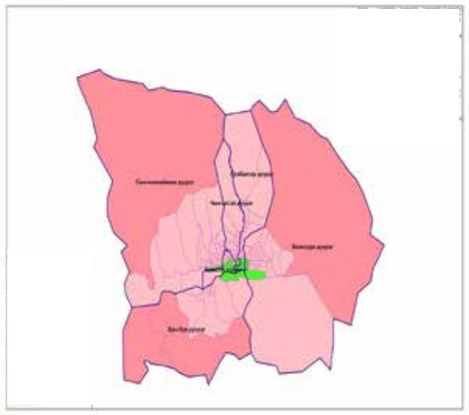
인프라 지역 및 게르 지역의 총 면적은 **35,206 ha**로 확정되었다.



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일시적 제한



대기질 개선 지대



지대

1 전통식 난로 금지 지대(원탄 사용 규제는 없음)

2,3 원탄 금지 지대

4 아파트 지역

MNS5216:2016 표준

울란바토르 시에서 **MNS5216:2016 표준**에 미달되는 가정용 난로의 판매 및 사용이 2017년 4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MNS5679:2019 표준

업그레이드된 고체 연료. MNS5679:2019 **표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의거, 울란바토르 시에서 원탄 사용이 2019년 5월 15일 이후로 금지되었다.



원탄 소비 금지

원탄 사용 금지(2019년 5월 15일부터)











15종 제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그린 인증
에코 마크

열 펌프, 전기 히터 및 공기 청정기를 포함한 15종의 제품에 대한 VAT 및 세금 면제 혜택 제공



실내 공기질 개선

130개 유치원

125개 학교

15개 병원

142개 가족 건강 센터

4개 보육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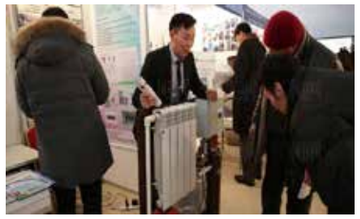




야간 전기 요금 할인

- 114,512명 고객 – 33억 투그릭
- PM 2.5와 PM 10 절감 – 5-8배
- 전기 히터 소비 15.2% 증가





울란바토르시 클린 에어 프로젝트

단열 시공 캠페인





교통 분야 개혁



CNG 버스
2018 년 2 월 7일부터 CNG 버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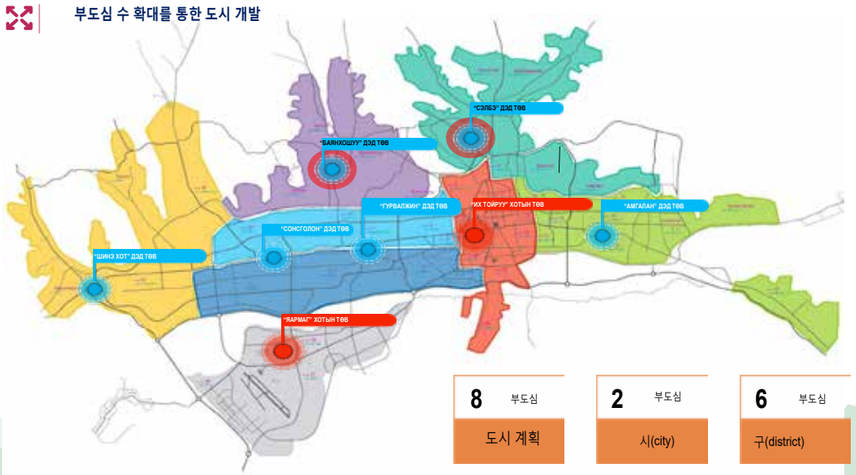
간선 급행버스(BRT)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

전기차
도로 이용 제한과 정체로부터 자유로운 전기차

U바이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00대의 전기 자전거 보급
60.4km 거리의 자전거 도로 조성

울란바토르시 분산 정책

부도심 수 확대를 통한 도시 개발



8 부도심	2 부도심	6 부도심
도시 계획	시(city)	구(district)

인프라스트럭처 센터 프로젝트

50 인프라스트럭처 센터



БАРИЛГА, ХОТ БАЙГУУЛАЛТЫН ЯАМ

18동(khoroo) 수흐바타르 구
15.8 he

7동 청결테이 구
12.0 he

2018 – 2개소 설립

소형 폐수 처리 시스템

난방 공급



- 중앙 난방 시스템과 연결
- 고체 연료 난로
- 전기 보일러
- 가스 보일러

물 공급



- 중앙 난방 시스템과 연결
- Гүний эх үүсвэр
- Зөөврийн эх үүсвэр

폐수 관리



- 중앙 난방 시스템과 연결
- Бие даасан

전기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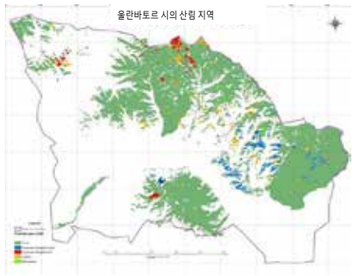
- 중앙 난방 시스템과 연결
- Бие даасан /сэргээгдэх эрчим хүч бүхий/

재조림

울란바토르 2020 마스터 플랜과 2030년까지의 개발 계획

1인당 30 m²

- 산림 지역: 95,233 ha (울란바토르시 면적의 22%)
- 연간 재조림 지역: 200 ha
- 2018년 기준 1인당 녹지: 2.5 m²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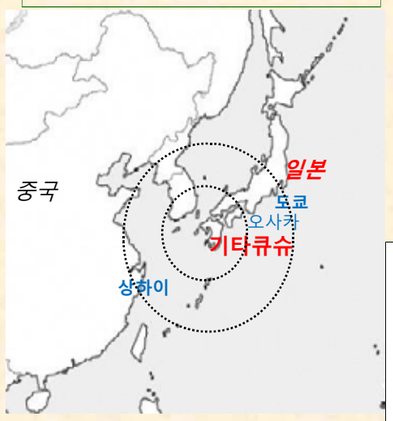
중국 대기질 향상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계획

하야시 가즈미치 기타규슈시 일중대기오염대책 담당



기타큐슈시 소개

아시아로의 관문, 기타큐슈



산업도시로의 발전

철강산업 공사(1901년)



국제무역항(1889년-)



철도네트워크 (1890년-)



인구: 956,000 (2016년 기준)

총 면적: 487.88 km2

GDP: 약 324억 달러 (2016년 기준)

인구 평균 연령: 46세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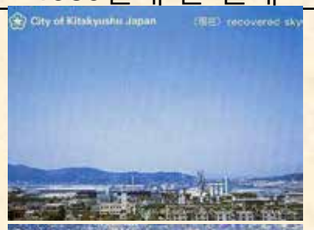
기타큐슈시의 환경오염 극복

1960년 경





1980년대 말-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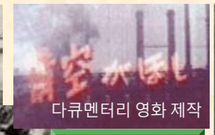




오염 극복을 위한 노력



공장점검





초청 대학 교수들과의 연구 모임



정부와 기업에 환경 관련 요청 엽서 보내기

주민

파트너쉽

지역정부

기업





환경 모니터링 및 인프라 개발



오염 방지 합의 체결



에너지 절약 생산 프로세스와 오염 방지 장비 도입

4

중국 대기질 향상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계획의 배경

중국 도시의 극심한 대기 오염



((출처: 주중 일본 대사관)



TEMM15
일중한 3국 환경장관 회의
(장소: 기타큐슈시)

➢**TEMM15(2013년 5월 개최)**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정책적 대화에 대한 합의 도달

➢**TEMM16(2014년 4월 개최)**
기타큐슈시에서 중국 도시 대기질 향상을 위한 활동 시작

도시 간 협력을 위한 기타큐슈시의 노력

자동차, 화력 난방, 그리고 공장 매연 등으로 인한 중국의 대기오염(PM 2.5 등 기준)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

★기타큐슈의 환경오염 극복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한 중국 도시의 대기질 향상 노력★

◆ **5개년 계획(회계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 프로젝트 활용(국가 예산)

◆ **6개 도시와 협력**
상하이, 톈진, 우한, 탕산, 한단, 다롄
*일본 내 11개 참여 도시 중
기타큐슈만 유일하게 다수 도시와 협력 진행 중

◆ **주요 활동**
1) 기타큐슈 내 전문가들을 해당 지역에 파견
•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대책 세미나를 중국에서 개최
• 대기질 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세미나 개최
(2) 중국 엔지니어 초청 일본 내 연수 개최
• 대기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과 오염원 식별 방법에 대한 교육
• 공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3) 지역 연구소와 공동 연구 실시
• 미세먼지(PM 2.5) 내 중금속 실시간 모니터링
• 중국 도시 내 광화학 산화제에 대한 적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연구

세미나 / 전문가 파견



회사 탐방 / 일본 내 연수



PM 2.5 분석 장비 / 공동 연구



대기질 향상 계획의 틀

＝추진 체계＝

중국
도시: 베이징, 톈진, 상하이, 셴양, 우한, 한단, 탕산, 다롄
성: 쟝수성, 허베이성, 관둥성, 랴오닝성, 샨시성

City-to-city cooperation

일본
현: 도쿄현, 사이타마현, 도야마현, 나가노현, 효고현, 후코오카현
도시: 가와사키, 요카이치, 고베, 기타큐슈, 오이타

중재, 조정, etc.

중재, 조정, etc.

도시 간 협력 플랫폼
국제환경전략연구소(IGES)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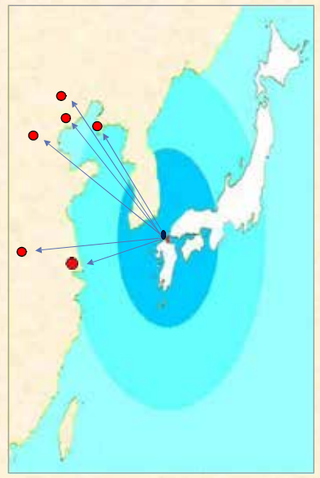
지도, 자문

정부 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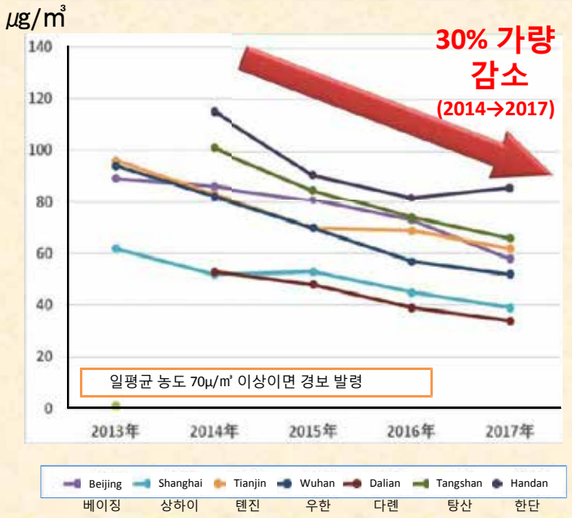
재정 지원, 지도, 자문

중국(생태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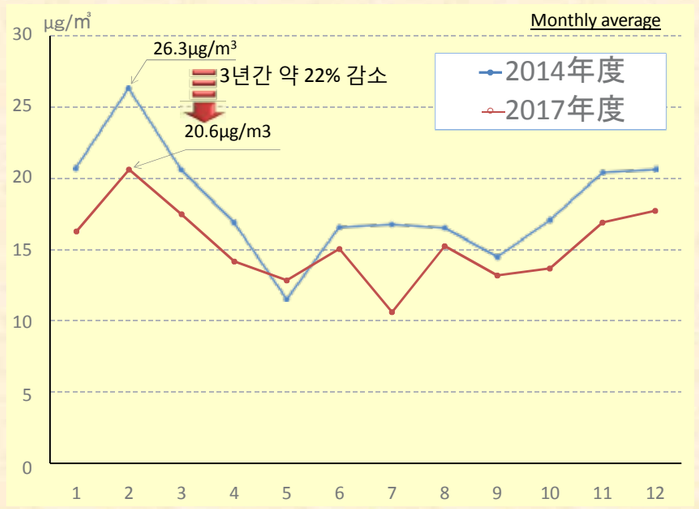
일본(환경부)



결과(1): PM 2.5 농도 절감



기타큐슈 내 PM 2.5 농도 감소



결과(2): 중국의 환경 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

지난 5년간 파견된 전문가 수: 총 421명(107회)
일본 내 연수 수료자 수: 총 222명(37회)
공동 연구: 총 4 개 프로젝트

◎일본 내 모든 참여 도시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됨

【일본에서의 연수】
텐진: 대기질 개선에 대한 연수
텐진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법 및 정책 교육을 실시, 행정 기능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전문가 파견】
다롄: 대기질 표준 달성 계획 지원
전문가들은 2018년 2월에 발표된 다롄시의 공식 대기질 개선 계획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



【공동 연구】
상하이: PM 2.5 내 중금속 실시간 모니터링
상하이와 주변 도시의 중금속 구성 요소의 특성이 연구를 통해 규명됨.



10

결론(3): 국제적 환경 사업 추진



사업 협상



중국 내 시범 사업

★현재 다수의 사업 실시 중★



중국에서의 기술 교류 모임

11

결과(4):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일본 환경 백서
(회계연도 2017년에 발간)



기타큐슈시의 대기질 향상 계획이 일본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2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대기질 향상 계획

【지난 5년간의 성관에 근거한 새로운 협력 활동】
2018년 6월 중국 쑤저우 시에서 열린 중일 장관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중국의 모델 도시들과의 협력 활동이 중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기질 개선은 양국 공통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양국은 2021년 회계연도까지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협력의 방향】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델 프로젝트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큐슈는 이러한 모델 프로젝트 실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TEMM21】
올해 환경부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일중한 3국 환경장관 회의(TEMM21)를 기타큐슈시가 주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3

아시아 도시들이 푸른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14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공생 2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좌 장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발 표 **김지운**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승훈 중국 닝보대학교 교수, 동하이연구소 연구원
이소베 아쓰히코 규슈대학 대기해양환경연구센터 교수

토 론 **가세로** 태안군수
박창호 세한대학교 기획처장, 교수
강겸심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전공 교수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김지운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5회 환황해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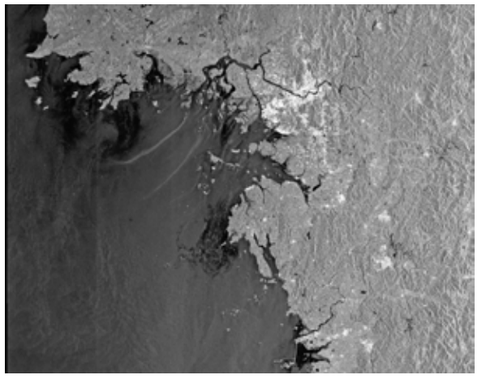
공생2:
지자체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지운 교수

황해의 오염 실태*
-예시-

삼성1호-허베이스피릿호(河北精神號) **원유 유출** 사고 (한국 태안, 2007년)

"당시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1년에 1500번 정도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
(권혁범, 2008)



*황해의 지리적 범위는
"Yellow Sea" *GIWA Regional Assessment* No. 34(2005), p. 15 (Figure 1) 참조

황해의 오염 실태
-예시-

Alga(해초, 藻類)의 번식 (중국 청도, 2013)

7,300여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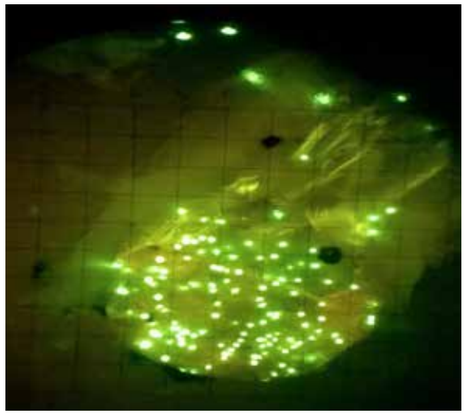
농공업 폐수와 생활 오수에서
흘러온
인산염(phosphate)과
질산염(nitrate) 등의 영양소를 먹고
번식,
햇빛을 가로막고 산소를 빼앗아
결국 해양생물을 죽게 만듦.
(Karl Mathiesen, 2013)



청도에서는 2007년부터 보고되어 옴.

황해의 오염 실태
-예시-

mysid shrimp(곤쟁이목)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황해의 오염 실태
-예시-

미세플라스틱 (5mm 이하) (김정수, 2016; 이동수, 2017; Greenpeace, 2016)

출처:
화장품이나 치약 등 생활용품에 첨가된 1차 미세플라스틱 – 하수를 통해 바다로
플라스틱 쓰레기들, 양식장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이 등이 바다로 유입, 풍
화에 의해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문제:
*플랑크톤-물고기-인간 또는 굴/홍합/새우/-인간 등의 먹이사슬 경로를 통한
확산성
*지속성
*물속에 녹아 있는 오염물질을 흡착, 농축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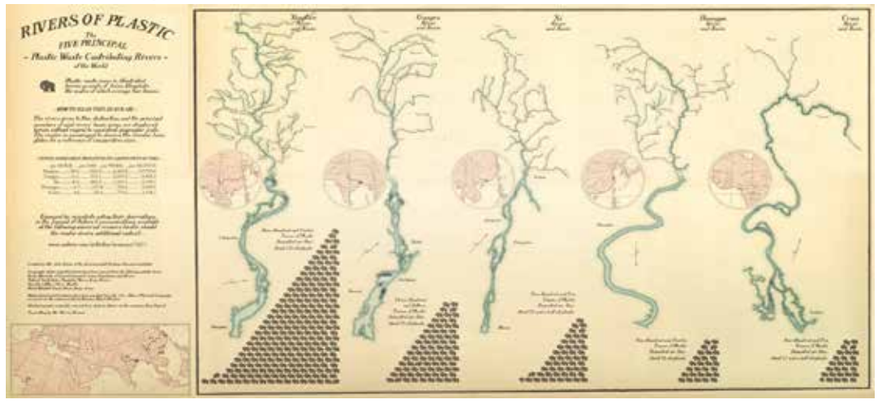
황해의 오염 실태
-예시-

한국의 '국민 과자' 새우깡,
48년간 원료로 쓰던 국산 새우 포기,
미국산으로 대체
(전북 지역 등에서 산출되는 새우에
플라스틱 성분 등이 검출)
(이재은 2019)



황해의 오염 실태
-예시-

매년 양자강(长江)을 통해 1.5백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황해로 유입
(Nick Routley, 2019)



황해 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

충청남도

- 1996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창립회원 (현재 몽골, 북한 포함 69개 지자체) 충청남도는 11개 분과위원회 중 환경분과위원회 회원 (충청남도 홈페이지)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개선 종합대책' 수립 (윤종주, 2018)

- 제4차 환경보전계획(2016-2025)의 일부로, 2020년과 2025년에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충청남도 홈페이지)

- 해양쓰레기 문제를 위해 중국 산동성과 '깨끗한 해안도시 연합(Clean Beach City Alliance)' 설립을 위해 노력

- 태안은 2018년, 상선/어선 등의 충돌과 이로 인한 기름 유출 등의 해상사고를 막고자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개국

황해 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

한-중 협력 (김정수, 2005; http://www.yslmep.org/; 충남연구원, 2018; UNDP/GEF, 2009 and 2017; Suh-Yong Chung, 2017; Hyun-Ah Choi, 2019; Zhaohui Zhang, et. al., 2018)

-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구환경기금(GEF)의 지원 아래 '황해 광역해양생태계 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YSLMEP**)*'을 시작함. (1992년 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 14년만)

- 상대방 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유하고, 그것을 토대로 황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것

- 제1기(2005-2009)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통제, 해양쓰레기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전략계획(Strategic Action Program, SAP)'을 수립하고, SAP 실행을 위해 정부/비정부 기구, 국제/지역 기구, 학계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황해파트너쉽(Yellow Sea Partnership)'을 설립.

*광영해양생태계 사업은 1) 생태계로 연관된 일정 범위의 해역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관련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것; 2)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다루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이에 관하여는 Kenneth Sherman, 2014 and 2016를 참고.

YSLMEP의 한계

- 2009년 1기 사업 종료 후 사업 지연; 2014년에 2기 사업 승인; 3년 뒤인 2017년에 비로소 2기 사업(-2019) 출범.

- 사업 집행을 위한 최고 기구인 'YSLME 협의체(YSLME Commission Council)'는 2019년 12월에나 공식 발족할 예정임.

- 'YSLME 협의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소위 '연성기구(soft institution)'

- GEF의 지원금과 참여국(한중)의 분담금 감소
  총액: 1기(2,870.5만 불) vs. 2기(1,568만 불) (충남연구원, 2018, pages 11, 23)

- 무엇보다 황해 북동쪽 4분의 1 해역은 북한에 접해 있음.
  북한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고, 제2기 YSLMEP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북경에서 열린 황해 보존을 위한 실무협의에도 참여한 바 있음.
  그러나, UN안보리 제재로 YSLMEP 참여가 계속 배제되고 있는 형편임.
  (북한에게 옵저버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함)

대안

위에서 언급했듯, 광영해양생태계 사업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다루는 접근을 취함.

황해 오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영역구분은 무의미.

또한, 제도적 접근을 넘는 신사고가 요구됨.

대안

1. ‘공생1’과 ‘공생2’를 분리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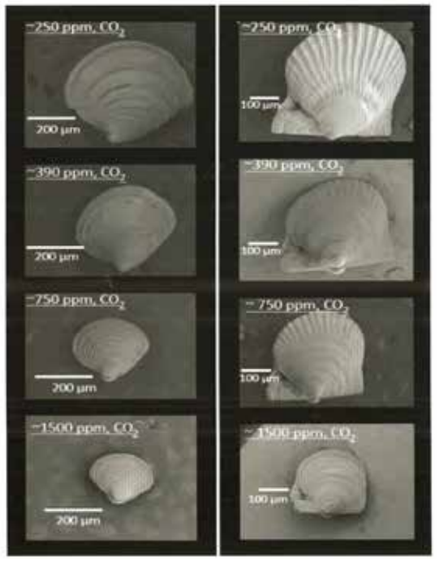
즉, 대기환경 개선은 해양오염 개선에 기여함.

예를 들어,

1)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
바다 산성화 – 또 다른 오염 – 가속화;
조개류 성장 제한 (Jeffrey Sachs, 2015)

2)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질소, 수은 등의 해수 내 퇴적 (Green Peace, 2008; 뉴시스 2019)

3) 기후 온난화에 따른 잦은 홍수;
하천 통해 보다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



대안

2. 농업 개혁을 위한 노력과 상호 협력

1) smart farming의 공유, 확산
농작물 생산에 있어 4차 산업혁명 -예를 들어, AI – 을 이용;
관개용수량, 일조량 등에 있어 최적의 조건 조성;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인산염, 질산염 등 해수에 유입되는 영양소 감소 (FAO, 2013)

2) ‘인공고기’ 개발을 위한 협력
예를 들어, 소 한 마리가 한 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량은 70-120kg;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 보다 온실효과가 23배다 더 큼 (곽노필, 2016).

한편, 소 1kg의 생산이 남기는 ‘water footprint’는 15,000 리터 이상

대안

3. 유조선 대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 공유

유조선 충돌 등에 따른 석유의 해상 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석유 대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공동으로 개발, 공유하는 것임.

(중국과 한국의 energy mix 비교)

예를 들면, 해상 풍력, 해상 태양광 발전





대안

4. 'green GDP' 또는 'water-nomics'의 개념 공유

황해가 산출하는 소득에서
황해의 오염이 초래하는 손실을 차감.

황해 보존의 비용과
그것이 창출할 미래 소득 상계.

이상을 매년 공동 계산, 적시하여
황해의 경제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정확한 손실의 지점과 적합한 투자(보존)의 지점을 찾고자 노력함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PRC and China Water Risk, 2016).

한중 해양오염개선 협력 방안

한승훈 중국 닝보대학교 교수, 동하이연구소 연구원



한중
해양오염개선 협력방안

발표자 : 한승훈

1.중국의 해양오염현황
2.중국의 해양오염 개선관련 법제도 및 정책
3.한중 해양오염 개선 협력방안

중국해양오염현황

한중일 해역지도



55개 하구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주요오염물질 현황

성분	CDR	암모니아	질산염 암모니아	아질산염	인	석유류	중금속
유입량 (톤)	1330만	15만	210만	5만	23만	5만	1만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371개 배출구 비율(해양의 고정오염원)

성분	공업용 배수구	도시건설 배수구	하류 배수구	기타
배출구비율 (%)	29	43	24	4
배출기준도달 비율 (%)	68	52	53	-

2017년 중국해양공보 참조

2017년 중국 1급수 이하 해역 면적(㎢)

해역	계절	2급수 해역	3급수 해역	4급수 해역	4급수 이하 해역	소계
발해	하계	8,940.00	3,970.00	2,120.00	3,710.00	18,740.00
	추계	15,710.00	8,300.00	4,780.00	3,690.00	32,480.00
황해	하계	17,280.00	7,090.00	2,610.00	1,240.00	28,220.00
	추계	20,980.00	10,980.00	9,440.00	3,840.00	45,240.00
동해	하계	17,610.00	9,260.00	11,400.00	22,210.00	60,480.00
	추계	23,380.00	10,260.00	11,850.00	34,510.00	80,000.00
남해	하계	6,000.00	8,220.00	2,110.00	6,560.00	22,890.00
	추계	11,900.00	8,900.00	4,210.00	5,270.00	30,280.00
전해역	하계	49,830.00	28,540.00	18,240.00	33,720.00	130,330.00
	추계	71,970.00	38,440.00	30,280.00	47,310.00	188,000.00

2017년 중국해양공보 참조

2017년 중국 하계와 추계 활성인산염 분포도



- 하계와 추계 1급수 기준 활성인산염 함량 미달 해역
- 활성인산염의 하계와 추계 : 82,250㎢과 138,240㎢
- 그 중 4급수 이하 : 13,760㎢과 22,800㎢
- 주요 분포 : 장강, 항주, 절강, 주강등

2017년 중국해양공보 참조

해양쓰레기유형	현황
해면 부유쓰레기	대형 및 특대형 20개 / ㎢, 중소형 2845개/㎢, 평균밀도 22kg/㎢ 플라스틱쓰레기 87%, 목제쓰레기 7%
해변 쓰레기	52123개/㎢, 평균밀도 1420kg/㎢, 플라스틱 쓰레기 76%, 유리와 금속 5%
해저쓰레기	1434개/㎢, 평균밀도 43kg/㎢ 플라스틱 쓰레기 74%, 유리 13%, 목제품 5%
해면부유 미세플라스틱	평균밀도 0.08개/㎥, 최고 1.26개/㎥, 발해 0.04/㎥, 황해 0.33개/㎥, 동해0.07㎥, 남해 0.01개/㎥
해저 미세플라스틱	평균밀도 245개/ ㎥, 최고 504/㎥

2017년 중국해양공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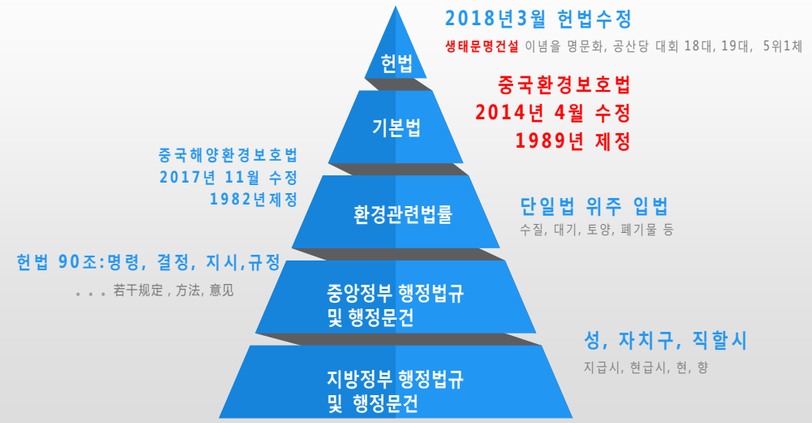


중국의 대응방안?

- 만장제 (湾长制) 시범실시 :관련시 당서기, 시장, 부시장을 만의 장으로 임명하여, 해양환경관리 강화.
  山东胶州湾 (青岛) 、河北秦皇岛、江苏连云港、海南海口、浙江省全体
- 육지오염 유입경로 조사 : 육지오염원의 바다유입 경로 약 9,600개, 그 중 바다유입 하류 약 700개, 바다유입 오염배출구 약 7,500개, 홍수 배출구 약 1,300개. 빈해습지와 어업지역에 민감, 관리감독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해양오염 실시간 측정 원네트워크 추진 : 중앙과 하북성, 절강성(닝보), 심천, 광서성 원네트워크 구축완료
- 해양쓰레기 예방관리 강화 : 주요해역, 해변, 침적물과 생물체내의 미세플라스틱 현황기초조사 완료. 해양쓰레기 문제는 만장제 업무에 포함, 다자 및 양자 협력 강화.

중국의 해양오염 개선관련 법제도 및 정책

법제도 – 중국환경법체계



법제도 – 중국헌법에서 환경내용의 발전



1949년 신중국 성립
신중국 최초 헌법제정

헌법 제11조
국가는 환경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하며 관리한다.

헌법 제26조
국가는 생활환경 및 기타 공해를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 및 관리한다.

헌법제32조(5위1체)
물질문명, 정치문명, 사회문명, 정신문명, 생태문명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법제도 - 중국해양환경보호법 구조

중국법조계 평가?
기본법지위?
보충내용?
특징 :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정 규정

-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환경 관리감독
제3장 해양생태보호
제4장 육지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피해 방지
제5장 해안 공정 건설 항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피해 방지
제6장 해양 공정 건설 항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피해 방지
제7장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피해 방지
제8장 선박 및 관련 사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피해 방지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법제도 - 중국 해양환경관련 주요법률 및 행정법규

주요법률	주요법률	주요법률
《宪法》1982年 헌법	《领海及毗连区法》1992 年 영행 및 근해구역법	《海岛保护法》2009 年 도서지역 보호법
《海洋环境保护法》1982 年 해양환경보호법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1995 年 고체폐기물오염환경예방관리법	《深海海底区域资源勘探开发法》2016 年 심해해저지역자원탐측개발법
《水污染防治法》1984 年 수질오염예방관리법	《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1998 年 EEZ경제구역 및 대륙붕법	《大气污染防治法》2016 年 대기오염예방 및 관리법
《渔业法》1986 年 어업법	《海域使用管理法》2001 年 해역사용관리법	
《矿产资源法》1986 年 광산자원법	《环境影响评价法》2002 年 환경영향평가법	
《水法》1988 年 수법	《港口法》2003 年 항구법	
《环境保护法》1989 年 환경보호법	《可再生能源法》2005 年 재생에너지법	
《野生动物保护法》1989 年 야생동물보호법	《循环经济促进法》2008 年 순환경제촉진법	

주요행정법규	주요행정법규	주요행정법규	주요행정법규
《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1982 年 대외협력석유자원개발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2009 年 선박의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조례	《船舶安全营运和防止污染管理规则（试行）》2001 年 선박안전운행 및 오염물질방지관리규칙	《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征收使用管理办法》2012 年 선박유류오염의 피해배상기금징수사용관리방법
《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条例》1983 年 해양석유탐측개발환경보호조례	《海洋观测预报管理条例》2012 年 해양관측예보조례	《海洋行政处罚实施办法》2002 年 해양행정처벌실시방법	《湿地保护管理规定》2013 年 습지보호관리규정
《海洋倾度管理条例》1985 年 해양폐기물관리조례	《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条例实施办法》1990 年 해양석유탐측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실시방법	《倾倒区管理暂行办法》2003 年 해양투기지역관리방법	《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征收使用管理办法实施细则》2014 年 선박유류 오염의 피해배상기금 징수사용관리실시세칙
《防治拆船污染环境管理条例》1988 年 선박해체오염예방관리조례	《海洋倾度管理条例实施办法》1990 年 해양폐기물관리조례실시방법	《国家自然保护区监督检查办法》2006 年 국가자연보호지역감독검사방법	《海洋生态损害国家损失索赔办法》2014 年 해양생태피해국가손실배상
《防治海岸工程建设项目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1990 年 해안공정건설사업의해양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관리조례	《疏浚物海洋倾倒分类和评价程序》1992 年 준설물해양투기분류 및 평가절차	《海洋工程环境影响评价管理规定》2008 年 해양공정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	《防治船舶污染内河水域环境管理规定》2015 年 선박오염의 내해수역 예방 및 관리 규정
《防止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1990 年 육지 오염물질의 해양환경피해방지 관리조례	《海洋自然保护区管理办法》1995 年 해양자연보호구관리방법	《海洋特别保护区管理办法》2010 年 해양특별보호지역관리방법	
《野生植物保护条例》1999 年 야생동식물관리조례	《海洋标准化管理规定》1997 年 해양표준화관리규정	《围填海计划管理办法》2011 年 바다매립규획관리방법	
《防治海洋工程建设项目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2006 年 해양공정건설사업의 해양환경오염피해예방 및 관리조례	《海洋预报业务管理暂行规定》1999 年 해양예보업무관리잠행규정	《海洋生态文明示范区建设管理暂行办法》2012 年 해양생태문명시범지역건설관리 잠행방법	

해양오염관리정책 - 관리구조

해양기능지역
자연자원, 지리적 위치, 사회적 요건에 따라 해양기능을 **다양한 유역의 기능으로 획정**
- 내해, 영해, 근해, 경제수역, 대륙붕

육해통합관리
육지 오염 및 일부해역 오염심각

유역-해구-해만
육지 오염원과 해상오염원 통합관리

해양오염관리정책 - 해양생태문명건설

일자	기관명	정책명칭
2015년 5월	국무원	**생태문명건설추진촉진에 대한 의견** **关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的意见**
주요내용	해양자원의 과학적 개발과 생태환경보호강화 해양기능구 계획편성, 오영방지, 환경정돈, 생태보호, 어자원 보호, 바다매립통제, 해안선 보호, 삼림, 초원, 해양 분야의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	

일자	기관명	정책명칭
2015년 7월	국가해양국	**2015년-2020년해양생태문명건설실시 방안** 海洋生态文明建设实施方案
주요내용	**중국해양생태문명건설의 로드맵제시** 10개 분야 31개 주요업무 명시, 20개 주요프로젝트 실시	

해양오염관리정책 - 해양생태문명건설

일자	기관명	정책명칭
2015년 9월	국무원	**생태문명체개혁 총체방안** **生态文明体制改革总体方案**
주요내용	9개 주요제도 제시 : 해양주체기능구제도, 바다매립 총량 통제제도, 자연해안선 보율 통제제도, 해양어업자원 총량통제도, 휴어기와 금어기 강화, 도서유료이용제도, 입찰을 통한 해역과 무인도 사용권 제도, 육지에서 바다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제도, 해양감독제도 보완	

일자	기관명	정책명칭
2016년 6월	국가해양국	**해양생태계 레드라인 제도 전면적 수립과 실시에 관한 의견 및 해양생태 레드라인 획정 기술지침**
주요내용	**레드라인 제도 : 개발제한구역과 개발금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통제** **레드라인 지역이 각 성의 관리면적의 30% 이상, 전국의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35%이상 유지**	

해양오염관리정책 - 해양생태문명건설 - 국가급해양생태문명건설시범지역

- 국가급해양생태문명건설시범지역 : 해양종합관리 강화, 해양강국건설 촉진, 연해지역경제추진, 사회발전방식 전환, 해양환경생태가 연해 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실현
- 1차 허가지역(12개)

山东省威海市、日照市、长岛县，**浙江省**象山县、玉环县、洞头县，**福建省**厦门市、晋江市、东山县，**广东省**珠海横琴新区、南澳县、徐闻县

- 2차 허가지역(12개)

辽宁省盘锦市、大连市旅顺口区，**山东省**青岛市、烟台市，**江苏省**南通市、东台市，**浙江省**嵊泗县，**广东省**惠州市、深圳市大鹏新区，**广西壮族自治区**北海市，**海南省**三亚市和三沙市.

지방정부 해양오염관리정책 - 산동성 해양기능구 규획(2011—2020年)

- 근해지역을 농어업지역 38개, 항구항운지역47개 , 공업 및 도시읍 지역 39개 , 광산과 에너지지역10개, 여행오락지역 56개 , 해양보호지역, 특수이용지역 56개, 보류지역 4개 등 **8류 329개 기능지역**으로 분류
- 이러한 **기능구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태문명건설을 최우선**으로 함.
- **기능구는 해양보호면적을 11%이상 확대함. 이는 8개 성들중 가장 높은 비율임.**
- 합리적으로 바다매립을 통제하여 **10년 내 건설용매립지 규모는 34,500 헥타르이내**, 해역의 사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보류, **근해 보류 면적은 10% 이상, 대륙의 자연해안선 보유율 40% 이상**

지방정부 해양오염관리정책 - 산동성의 발해지역 환경종합관리 작전 (2018년-2020년)

- 육해통일과 시스템관리에 따라 산동성의 **东营、烟台、潍坊、滨州 4개시(이하 "연발해도시")는 수질오염특별배출제한업종, 기준, 기한 실시.**
- 2019년 6월 말 이전 연발해도시는 기준 미달 공업폐수가 바로 해양으로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해 전면적, 안정적인 시정방안 제정, **2020년 7월 부터 연발해도시는 공업폐수가 바로 해양으로 배출시 안정적인 기준에서 배출함.** 기타 시는 수로와 한반도 유역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엄격히 실시하고 공업오염원 모두 기준에 맞게 배출
- 2020년 **산동성 발해지역의 11개 시는 오수처리 능력을 120만톤/1일로 강화, 도시와 현의 오수처리 비율이 각각 98%와 90%로 함. 진(镇)의 오수처리율은 70%이상으로 함**
- **11개시는 1900㎞의 관망을 확충하여 도시의 오수처리 종합수집 및 종합처리**를 실현, 규모가 있는 가금류 양식장은 모두 오수처리시설을 구비하도록 함.
- 발해해역의 해안선 보유율을 40%이상하며 빈해습지회복 면적은 100만묘, 하구해만 회복규모는 3800헥타르 이상

지방정부 해양오염관리정책산동성 - 해양생태환경보호규획 (2018—2020年)

- **주요하구의 생태계통등 17류 341개 지역에 대해 관리통제**하며 각 지역은 상이한 환경보호를 실시함
- 현재 산동성의 전해역에서 **1급수와 2급수 해역은 약 80% 이상이지만 근해생태 파괴와 서비스 기능 파괴가 심각하고 해양오염면적도 비교적 넓음**
- 2020년 산동성 해양환경 수준은 전체적인 개선을 해야하고, 근해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 해양생태계환경과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함.
- 산동성은 해양생태보호를 위해 해양오염예방관리, 육해오염연합예방 및 통제, 해양생태환경리스크 예방, 해양생태측정 강화
- 주요지역, 주요생태계통을 분산보호에서 집중보호 전환, 해만, 해수,도서,해변, 해안의 시스템화 관리, 해수양식 오염예방통제, 선박과 항구오염예방관리, 연안과 해상쓰레기 오염 예방관리, 유역환경과 근해오염종합관리, 해양생태환경측정 원네트워크 구현

한중 해양오염 개선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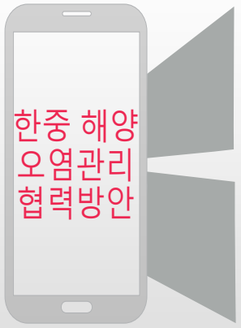
한중 지자체간 환경보호(해양오염과 대기오염개선) 공동협력 강화



- 한중 지자체간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 파트너관계 활용
- **환경정책 및 법률전문가, 환경과학 전문가, 환경기업, 환경연구기관, 대학, NGO간 패키지 교류협력 추진**

25

한중 해양환경오염관리 협력방안



한중 해양오염관리 전문가간 공동협력 추진

- 2018년 6월 한중환경협력센터 설립, 동 센터를 통한 해양사업 교류 및 협력 강화
- 해양오염개선 강화 : 생분해성 어구와 친환경 부표 기술 협력, 해양쓰레기 이동경로 공동연구
- 해양생태공동 사업 강화 : 환황해해양생태공동연구
- 정책수출 : 폐어구와 폐부표 보증금 제도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수역 내 해양 플라스틱 오염

이소베 아쓰히코 규슈대학 대기해양환경연구센터 교수

동아시아 수역 내 해양 플라스틱 오염

미세 플라스틱 풍도와 현재 및 미래 해양에 미치는 영향

이소베 아쓰히코
규슈대학 응용역학연구소(RIAM), 일본





(1) 현재 상황과 미래에 닥칠 위험
(2)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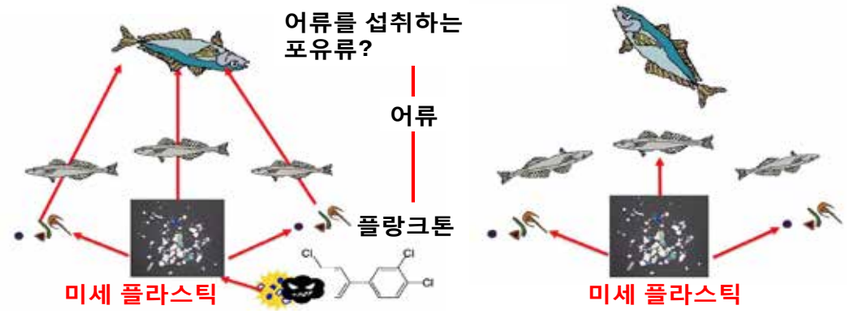


햇빛(UV), 산화적 붕괴, 물과의 반응에 의한 **분해**

파도, 모래와의 마찰 등 기계적 자극에 의한 **파쇄**

미세플라스틱 생성 (특히 해변에서)

해양 생물상 및 생태계에 대한 위협 (실험실 기반 연구를 통해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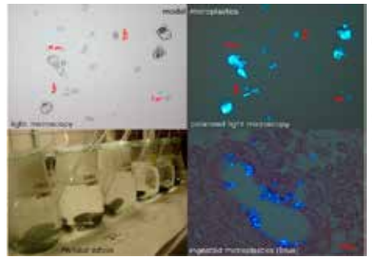
표영 미세 플라스틱에 PCB와 같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의 흡수

무독성 플라스틱의 '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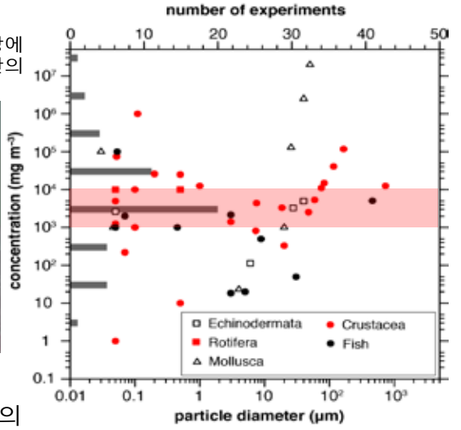
무독성 플라스틱의 '독성'

300 μm < 미세 플라스틱 < 5 mm

미세 플라스틱 입자에 노출된 해양 생물상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을 분석한 실험실 기반의 연구 결과



Moos et al. (2012, Env. Sci & 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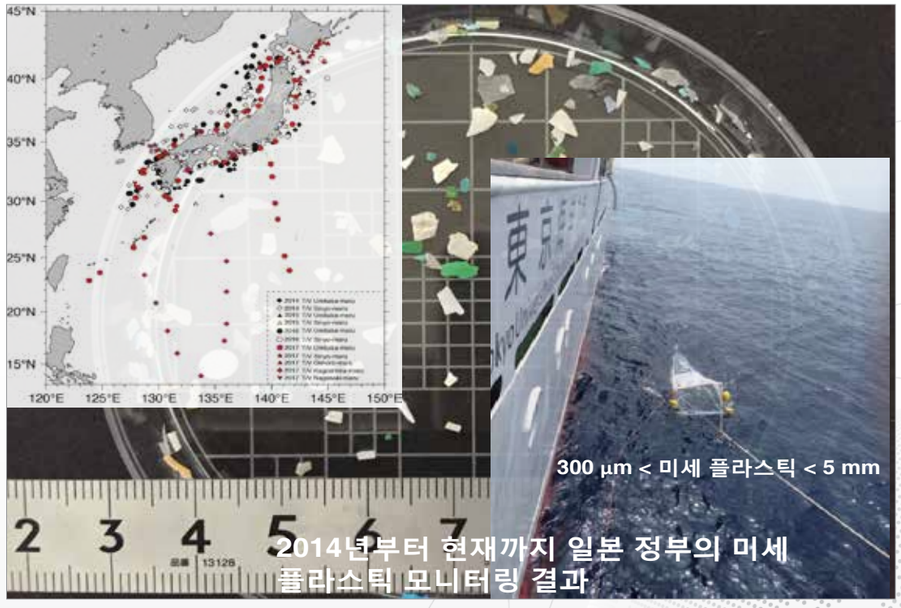
Isobe et al. (2019, Nature Co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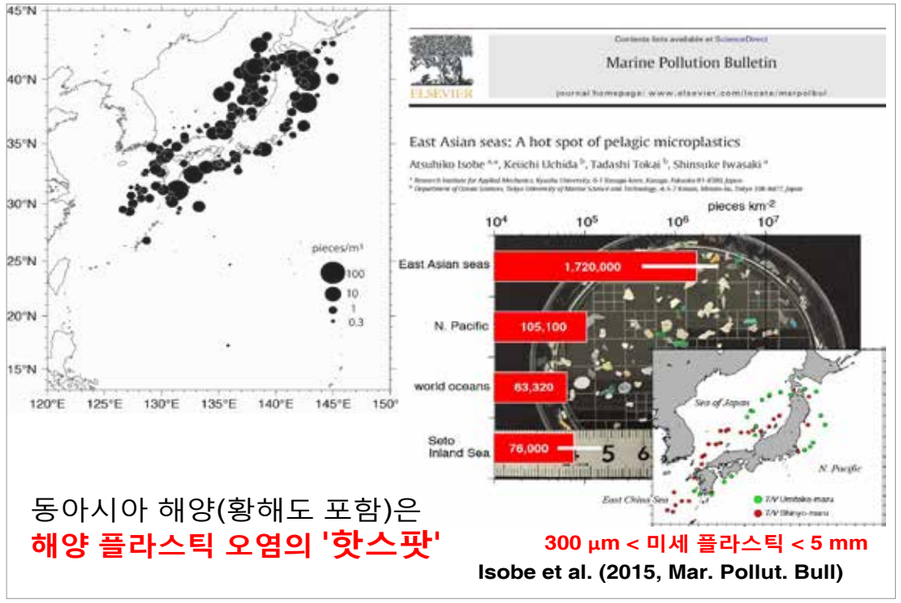
주: de Sà et al. (2018, Sci Total Env.)의 표S1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사망률, 산화 스트레스, 대사율 등의 **증가**

성장률, 먹이 활동, 번식 등의 **감소**

> 1000 mg / m³ ?





동아시아 해양(황해도 포함)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핫스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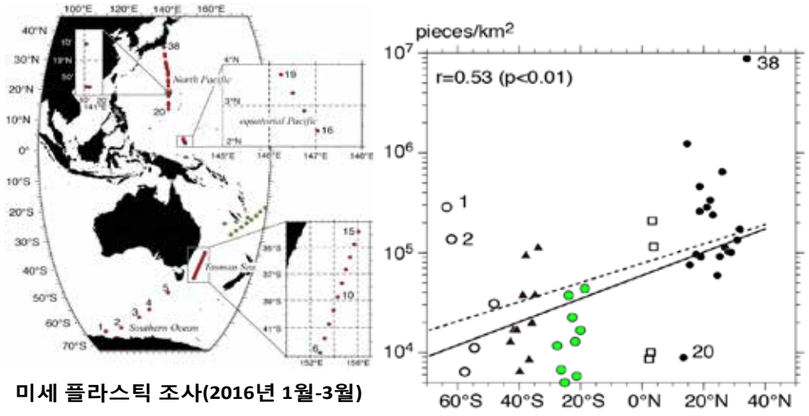
300 μm < 미세 플라스틱 < 5 mm

Isobe et al. (2015, Mar. Pollut.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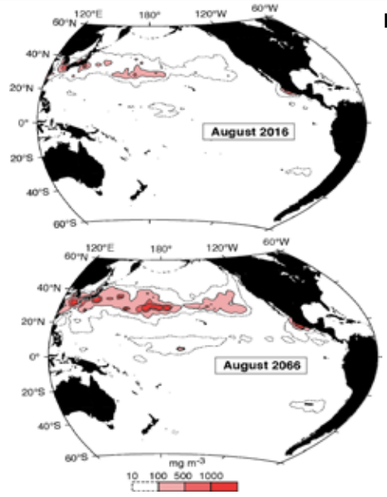
Isobe et al. (2019, Nature Communications)

지속적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진행(특히 북반구에서 나타남)

300 μm < 미세 플라스틱 < 5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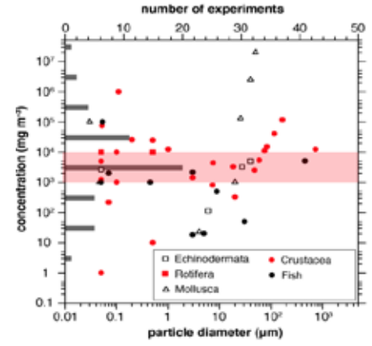


미세 플라스틱 조사(2016년 1월-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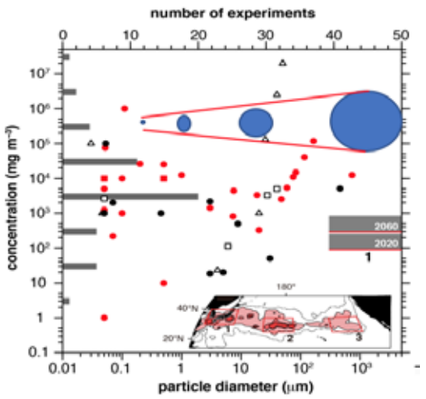
Isobe et al. (2019, Nature Commun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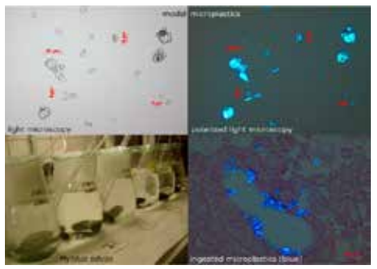
미래 전망



미흡하게 처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실험실 실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귀환 불능점까지 악화될 수 있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해양 생물체에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Isobe et al. (2019, Nature Communications)





Moos et al.(2012, Env. Sci & Tech)

과학적 측정의 한계

수생 생물이 노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와 관련하여, 미세 플라스틱 관측(즉, 모델링)과 실험실 기반 연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

향후 과제 과학 기반의 지속가능한 전 세계적 플라스틱 저감

세계 해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생성, 이동 및 종착점 파악
-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가?

Marine plastic circulation
(해양 플라스틱 순환)

세계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풍도 현황 모니터링
- 300μ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 미세 플라스틱 풍도를 표준화하고 조정해야 한다.

Observations
(관측)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 규명
- 미세 플라스틱 풍도의 임계 농도는 얼마인가?
-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상에 어떤 해를 끼치는가?

Risk assessment
(리스크 평가)

친환경 플라스틱 및/또는 신소재 개발

Environmentally-friendly materials
(친환경적 소재)

제5회
황해에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황해에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황해에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황해에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환황해포럼 사무국

사무국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733호

이메일 pysf2019@gmail.com 전화번호 02-707-0615 / 02-3669-3099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한반도평화포럼 충남연구원 후원 | 외교부